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정책 질의 및
주요 성과 보고서
(환경부 · 고용노동부 · 기상청)



국회의원 이자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전 체 목 차

I. 발간사	1
II. 환경부	3
III. 고용노동부	89
IV. 기상청	149
V. 2014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기사모음	175

발 간 사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 이자,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금번 국정감사는 짧은 준비기간으로 부실감사 우려 논란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상기관만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긴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일정이 뒤늦게 확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정감사 준비 단계부터 일부 혼선을 빚게 되었고 기업 총수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대치도 있었지만 그러한 갈등과는 무관하게 ‘민생국감·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되돌아보고 정부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싱크홀(지반침하) 문제, 어린이 실내 놀이터 미세 먼지 문제, 지하철 실내 공기질 문제,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시설 자체 석면 검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관련 사고 및 리콜 집행 저조, 생수 제조업체 수질 관리 부실,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 관리 부실, 큰 이끼벌레, 초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 문제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점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산 기업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체당금 부정수급 문제, 늘어나는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문제,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률 제고 문제 그리고 국내 산업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의 내부 문제점에 주력하며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부분별한 사업비 집행, 자제용역관련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라이다(LIDAR)·다목적 항공기·AWS 등 기상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비리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향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는 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해온 환경 노동위원회 여야 동료 의원님들과 피감 기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과 공무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과 행정실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의원회관 불을 밝히며 주말까지 출근해 감사 준비를 도와준 차세원보좌관, 김성훈보좌관, 이승훈비서관, 황운영비서관, 박현영비서관, 정광우비서, 김지은비서, 김하니비서, 윤창혁비서, Eva Marie Wang 909호 10명의 자랑스런 의원실 보좌진 식구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저의 의정활동이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준비로 소홀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승근이와 승연이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 10. 24.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자스민 드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환경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목 차

<서 언>

I. 환경부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5
II. 2014년 국정감사 일정	6
III.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8
1. 10월 7일(화)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	8
2. 10월 14일(화)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9
3. 10월 16일(목) 환경부 소속기관	10
IV. 기관별 국정감사 정책 질의	12
1. 환경부 본부	13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44
2.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환경부 산하기관]	67
3.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안전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I. 서 언

2014년 환경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 이자, 지난 2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금번 국정감사는 짧은 준비기간으로 부실감사 우려 논란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되돌아보고 정부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싱크홀(지반침하), 어린이 실내 놀이터 미세 먼지 문제, 지하철 실내 공기질 문제,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시설 화재 석면 검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관련 사고 및 리콜 집행 저조, 생수 제조업체 수질 관리 부실,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 관리 부실, 큰 이끼벌레, 초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 문제들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록 지난 7일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 후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정책경쟁을 통해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입니다.

II. 2014 국정감사 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7일 (화)	10:00	환경부	환경부회의실 (세종시)	
10월 8일 (수)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회의실 (세종시)	
10월 9일(목)		공 휴 일		
10월 10일 (금)	10:00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청회의실 (서울)	
10월 11일(토) ~ 10월 12일(일)		공 휴 일		
10월 13일 (월)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충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 회	
10월 14일 (화)	10:00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강유역환경청 (하남)	* 감사후 시찰 (팔당상수원)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5일(수)		자 료 정 리		
10월 16일 (목)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 회	
10월 17일 (금)	11:00	국립생태원 시찰(충남 서천)		
10월 18일(토) ~ 10월 19일(일)		공 휴 일		
10월 20일 (월)	1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 회	
10월 21일 (화)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10월 22일(수)		수도권매립지 시찰		
10월 23일 (목)	10:00	환경부	국 회	확인감사
10월 24일 (금)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확인감사
10월 25일(토) ~ 10월 26일(일)		공 휴 일		

Ⅲ.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 10월 7일(화)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

1. 도심에 빈발하는 싱크홀(땅꺼짐 현상)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회차원의 최초의 문제 제기와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요구
 - 싱크홀 위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기여 및 범부처간 정부의 '싱크홀' 전담 TF팀 구성 관철
 - 상임위 차원의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의 필요성 및 국고 지원 확대요청
2. 생수 제조업체 수질 관리 부실 지적과 대책마련을 위해 업체의 품질 관리인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제시
3. 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기 부실 관리 실태 지적 및 관리 개선 방안 요구
 -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 및 내년 친환경차 관련 정부 예산 확대에 기여
4.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점을 지적
 - 말 뿐이 아닌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 요구
5.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 가량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점을 지적
 - 환경오염에 쉽게 영향을 받은 어린이 시설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강력히 요구

6. 국내 제과업체등의 과대 포장 실태를 국회차원에서 최초 지적

→ 정부의 대안 마련을 이끌어 냄

7. 어린이 실내놀이터 10곳 가운데 4곳의 실내 공기질 부적합함 지적

→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정부의 법정관리 대상 포함 요청

→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실내놀이터 공기질을 정부의 의무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 10월중 발의 예정

8. 좀처럼 줄지 않는 화학사고와 현장의 화학사고 ‘안전메뉴얼’ 부재 지적

9. 계속되는 어린이용품 유해물질관련 사고 및 리콜집행 저조에 대해 지적

→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자가관리계획’ 내실화 강조 및 현재의 시장에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식 대신 ‘선제적 대응 방법’의 필요성 제기

10. 환경부에서 동물원·수족관 생물의 3%만 관리 하고 나머지는 관리사 각지대로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이에 대해 포괄적 관리 대응책 마련 요구

■ 10월 14일(화)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1. 지방 환경청 자문단의 구성 및 부실 운영에 대해 지적 하고 부처차원의 운영지침 마련 필요성 제기

→ 지방 환경청장들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2. 지방 환경청의 지난 3년간 수질오염사고 2배 증가 및 사고원인이 관리실부실에 의한 인재형 사고임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3. 지난 1년간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車) 구입의무화 목표 달성은 1차레 뿐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 요구
4.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4척이 침몰된 채 방치돼 있고, 그 외 52척은 언제 침몰될지 모른 채 방치돼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 요구
5. 구제역 매몰지 부실관리를 지적하고 매몰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공동 관리 강화 요구
6. 개장 2년을 맞는 국립생태원의 마케팅 인프라는 부족을 지적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요청
→ 국립생태원장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7. 항공기에 의한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지적
→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제기

■ 10월 16일(목) 환경부 소속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지하수 사용 마을 상수도에서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우라늄 초과 검출' 지적
→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으로부터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및 실외 초미세먼지 PM2.5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 지적
 - 관련법 개정 등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 3. 해외 반출된 한반도산 생물표본 약 3만 3천여 점에 대한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수립 요구
 -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으로부터 공동연구 등 해외에 있는 우리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냄
- 4. ‘나고야 의정서’정식 발효에 대한 생물자원 확보 방안 및 정부의 철저한 대비 요청
 -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으로부터 국내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온힘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경보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산불방지’감시카메라’ 미설치 및 노후화에 대해 지적
 - 국민 안전을 위해 장비 미설치 지역 및 노후 장비에 대해 신속한 조치 요구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6. 그린위싱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처벌 조항 및 홍보 강화 요구
- 7.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임 강사 전무(全無) 한 실정 지적
 - 전임 강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으로부터 전임 강사 확보를 위해 개선안 마련
- 8.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비정규직 확대와 비정규직 연구원 조기 퇴사에 대한 문제점지적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우수인력이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라 머물며 연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IV. 기관별 국정감사 정책 질의

[환경부 본부감사]

■ 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최근 3년간 409개 어린이용품이 부적합 판결 이중 367개(89%) 제품 유해물질 초과로 정부 감독에 적발
- 2013년 리콜 조치된 제품에 대한 리콜회수율 46.7%
- 저감을 위한 '환경부 자가 관리 계획' 전무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백여 개 이상의 어린이용품이 과도한 유해물질 함유로 관계당국에 고발 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계획'(2013~2017)을 발표하고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스스로가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계획 수립 및 시행 업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 지금까지 59개 업체만이 동참하고 있어 문제임. 지금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 및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 더욱이 현재의 감독시스템은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가 제품을 만들 때 더욱 신중하도록 하여야함
- ※ 환경부는 '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사용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자문 및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있음(제조업체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 '12년 15개 업체 지원, 총 사업비 1.5억원
 - '13년 44개 업체 지원, 총 사업비 1.3억원

▣ 대안

-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용품 때문에 어린 자녀들 둔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은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 으로부터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어린이용품안전성 조사 및 조치사항’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409개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 부적합 판결을 받았음
- 이중 367개(89%)가 유해물질 초과로 정부 감독에 적발되었고 25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및 권고가 있었으며, 이 중 2013년 리콜 조치된 제품에 대한 리콜 회수율은 46.7% 에 불과 함.
- 현재의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문제는 업체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현재의 기술적 자문 및 시험·분석의 지원 외에도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함

■ 유아·어린이 실내놀이터 10곳 중 4곳은 공기질 부적합

- 전체 조사 지점 124곳 중 총부유세균(TBC) 48곳 38.7% 초과
- 그 외 폼알데하이드(HCHO) 37.3%, 미세먼지 (PM10) 12.1%, 이산화탄소 (CO2) 26.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9.3% 초과
- 금연 구역임에도 124개의 측정지점 가운데 9개의 지점에서 니코틴 검출

▣ 현황 및 문제점

- 실내놀이터의 경우 환경오염 취약계층인 유아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실내공기가 오염된 시설수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 뿐만 아니라 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실내놀이터는 법적관리 대상에 배제되어 있어 시설 이용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50평(약 165 m²)을 기준으로 50평 이상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법적 편입을 추진하고 이후 50평 미만의 시설로의 법적 편입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의 크기에 따라 일부 오염 물질들은 실내공기의 오염 농도에 영향을 미침
- ★ 참고 : 환경부 연구용역 보서의 결과를 토대로 50평 이상 시설에 대해 법적 편입 요청. 법제실 9월 15일에 법안 입안 의뢰 한 상태임.
- 환경부로 부터 제출 받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13. 5. 15~14. 1. 20)자료의 ‘아동·어린이 실내놀이터’ 62개소, 124개지점에 대한 공기질 측정 결과 총부유세균(TBC)이 기준치를 38.7% 초과했음 즉 10곳 중 4곳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뿐만 아니라, 폼알데하이드(HCHO) 37.3%, 미세먼지 (PM10) 12.1%, 이산화탄소(CO2) 26.2% 등도 초과 했으며, 또한 유해화학물질로 심할 경우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역시 9.3%나 초과 했음.
-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내놀이터의 경우 금연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조사결과 전체 124개의 측정지점 중 9개의 지점에서 흡연(담배연기)의 지표물질로 알려져 있는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안

- 실내놀이터의 경우 요즘 대형 마트 내부에 있는 곳도 많고, 키즈 카페 형태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주 이용대상이 유아 및 어린이들이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 임
- 실내놀이터의 이용자가 환경오염 취약층인 유아 및 어린이임을 고려할 때 추후 건강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 시켜 제도로 관리해야 함
- 더욱이,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내놀이터 주변에서의 흡연활동 금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도 함께 검토해야 함
- 일부 오염 물질들은 실내공기의 오염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50평(약 165 m²)을 기준으로 50평 이상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편입시켜 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마련

(붙임1) <실내놀이터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

(붙임2) <실내놀이터 공기질 조사 현황(최근 3년간)>

(붙임3) <지역별 실내놀이터 현황>

(붙임4) <오염물질별 주요 발생원 및 인체영향>

붙임1) <실내놀이터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

Pollutant	N	Mean	S.D.	Min	Max	초과율 (%)
PM10($\mu\text{g}/\text{m}^3$) 미세먼지 (기준 : 150)	107	92.6	62.2	23.3	395.4	12.1
CO ₂ (ppm) 이산화탄소 (기준 : 1000)	122	857.4	208.5	514.7	1338.0	26.2
CO(ppm) 일산화탄소 (기준 : 10)	124	4.1	2.2	0.8	8.8	
HCHO($\mu\text{g}/\text{m}^3$) 폼알데하이드 (기준 : 100)	110	92.6	67.7	15.0	338.7	37.3
TBC(CFU/m ³) 총부유세균 (기준 : 800)	124	792.0	428.9	88.3	2162.4	38.7
NO ₂ (ppm) 이산화질소 (기준 : 0.05)	121	0.02	0.01	0.01	0.06	0.8
O ₃ (ppm) 오존 (기준 : 0.06)	102	0.012	0.008	0.001	0.050	
TVOCs($\mu\text{g}/\text{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 500)	107	237.1	187.7	16.9	951.9	9.3
Asbestos(개/cc) 석면 (기준 : 0.01)	116	0.002	0.001	0.001	0.006	
Rn(Bq/m ³) 라돈 (기준 : 148)	124	15.7	11.1	3.7	85.1	

<자료 환경부>

(붙임2) <실내놀이터 공기질 조사 현황(최근 3년간)>

-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13. 5. 15~’14. 1. 20)”를 통해
실내놀이터 62개소(124개지점)에 대한 공기질 측정 실시

지역	총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	대전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사설수	62	20	2	6	3	1	1	23	1	1	2	2

(붙임3) <지역별 실내놀이터 현황>

- 지역별 실내놀이터 현황표를 보면, 2011년 전국 실내놀이터 업체수는 1,521개였으며, 경기도가 536개로 가장 많고, 제주가 20개로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음

(단위: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부산	계
업체수	223	75	536	50	57	56	48	74	1,521
지역	경북	경남	울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업체수	56	102	32	63	47	47	35	20	

<자료 통계청>

(붙임4) <오염물질별 주요 발생원 및 인체영향>

오염물질	주요발생원	인체영향
폼알데하이드	각종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코,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정사불안증, 기억력 상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스틸렌, 알데히드, 케톤 등)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드라이크리닝 의복, 방향제, 건축재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
연소가스 (CO,CO2, NO2,SO2 등)	호흡, 연소가구(가스렌지, 난로) 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담배연기 (각종가스, HC, PAHs, 먼지 등)	흡연	두통, 피로감,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천식, 폐암 등
미생물성물질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꽃가루 등)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먼지·분진	실내 바닥의 먼지, 생활활동 등	눈과 점막자극, 흡기계질환(기관지염)
석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암, 중피종, 편평상피 등
오존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라돈	흙, 바위, 지하수, 화강암 등	폐암 등

<자료 환경부>

■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대안’ 준비 철저히 해야

- 최근 4년간 해외차 온실가스 감소 17% 반면 국내차 온실가스 감소 4.9% 그쳐
- 2020년 국내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97g/km) 달성하려면 연평균 4.5% 줄여야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한차례 연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0년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져 사실상 제도 자체의 시행이 불투명해 졌음
- 저탄소차 협력금제 대신 ‘시행대안’으로 추진되는데 있어 환경정책 후퇴라는 우려가 있음
- 시행대안을 보면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있으며 2020년까지 키로미터 당 97그램(97g/km)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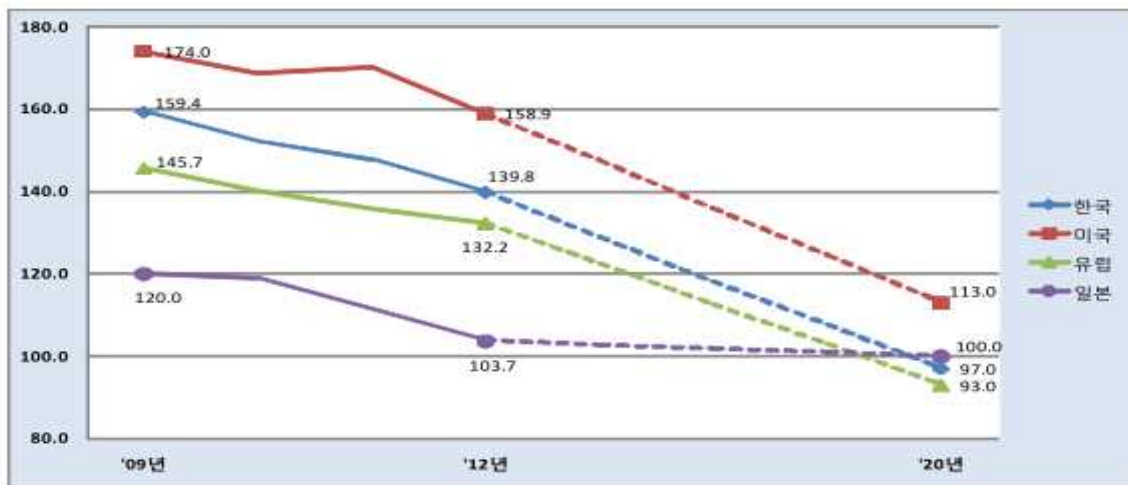
-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의 30% 감축 이행을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바 있음
- 이미 정부정책에 의해 ‘시행대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만큼 차질 없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표 1] 국가별 차기 온실가스 달성을 위한 연평균 저감율

구 분	'12년(실적)	'20년(차기기준)	연평균 저감율
한국	140	97	4.5%
미국	159	113	4.2%
유럽	132	93	3.8%
일본	104	100	0.5%
중국	173	110	5.5%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그림 1]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환경부, 국내 생수제조업체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 국내 제품은 1.2배 그쳐
- 지난 4년간 국내생수 판매량 12배↑, 해외생수 판매 5.8배↑ 시장 점유율 5배↑
- 생수제조업체 품질관리교육 없이도 관리인 선정가능 사각지대 발생
- 국내 생수제조업체 법령위반 2012년 14건 2013년 19건 2014년 11건(상반기)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4년 3월 환경부의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돗물을 항상 혹은 자주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경우를 포함하여도 55.2% 정도이며, 미국 82%, 영국 90%, 일본 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수질관리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품질관리는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가 고용한 품질 관리인이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품질관리인이 되기 전 부득이하게 품질관리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품질 관리인이 된 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최근 2년간(2012~13년)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위반업체의 자체 품질검사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건,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7건에 달함
- 같은 기간 환경부 단속에 적발된 '먹는 물 제조업체'의 위반사례는 총 33건에 달함. 해외생수의 국내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수업체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

▣ 대안

-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다보니 반대로 생수에 대한 소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면 수질관리는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품질관리는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가 고용한 ‘품질관리인’이 실시하고 있음
- 국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 ‘자체 품질검사’가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수돗물 못지않게 생수 역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품질검사는 곧 국내 생수 업체의 국민신뢰 회복과 경쟁력을 함께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붙임 1) <먹는 샘물 업체수('14.6월말 기준)>

(붙임 2) <먹는 샘물 제조사 적발 현황>

(붙임1) <먹는 샘물(생수) 판매현황 2010~2013>

(단위 천톤/ 백만원)

연 도	계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	
	판매량	판매금액	업체수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2013	3,543	519,925	60	3,474	495,158	69	24,767
2012	3,253	465,760	59	3,239	456,766	14	8,994
2011	3,094	429,565	57	3,083	420,912	11	8,653
2010	2,858	361,991	57	2,846	353,232	12	8,759
증가액	685	157,934		628	141,926	57	16,008
증가율	1.24	1.44		1.22	1.40	5.75	2.83

★ 자료출처 : 제조업체(사도 취합자료), 수입업체(관세청 무역통계)

★ 업체수 : 년내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수(휴업 업체 제외)

(붙임 1) <먹는 샘물 업체수('14.6월말 기준)>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체	65	-	-	-	-	-	-	2	1	17	7	8	7	4	4	3	10	2
수입판매업체	63	41	1	1	1	-	1	-	1	15	-	1	-	-	-	-	1	-

(붙임 2) <먹는 샘물 제조사 적발 현황>

▣ `12 ~ `14년 3년차

순서	연도	연도별 적발건수	위반사항	조치내역
1	2012	14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			시설기준 위반, 자동계측시설 비정상가동	경고, 개선명령
3			시설기준 위반, 종업원건강검진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50만원)
4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불소)	취수정지 1개월 (2013. 1. 3~2. 1)
5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냄새)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1,650만원)
6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경고
7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8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녹농균)	취수정지 1개월 (2012. 9.22 ~ 10.21)
9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비소)	영업정지 1개월 (2013. 1.22 ~ 2.21) *회수폐기 12,000L
10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탁도,알루미늄)	취수정지 1개월 (2012. 9.12 ~ 10.11)
11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2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3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4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취수정지 1개월 (2012.12.18 ~ 2013. 1.17)
15	2013	19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브롬산염)	영업정지 1개월 (2013.5.3 ~ 6.2) *회수폐기:2,376L
16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17			1일 취수한도량 초과 (양수시험용으로 취수량 초과)	경고
18			표시기준 위반(구 상호(크리스탈)로 표기된 먹는샘물 일부 생산)	경고

19			건강검진 미실시	경고
20			취수량 계측자료 미제출	경고
21			취수량 계측자료 미제출	영업정지 15일 (2013.8.26 ~ 9.9)
22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3			품질관리인 미선임,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4			품질관리인 미선임,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영업정지 23일 (2013.12.23 ~ 2014.1.14)
25			시설기준 위반(충전실 내 자외선공기살균기 고장방지)	경고, 개선명령
26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불소)	영업정지 15일 같음 과징금(3,750천원)
27			건강검진 미실시,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취수정 계량기 고장,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경고
28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과망간산칼륨소비량)	영업정지 1개월 같음 과징금(8,100천원) *회수폐기:7,868L
29			표시기준 위반 (오존처리 미표시)	경고
30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5일 같음 과징금(4,650천원)
31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개월 같음 과징금(9,300천원) *회수폐기:134L
32			수질기준 부적합 (제품수: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개월 같음 과징금(6,300천원) *회수폐기:1,316L
33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총대장균군)	취수정지 1개월 (2013.12.2 ~ 2014.1.1)
34	2014	11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영업정지 15일, 경고
35			준수사항 위반(먹는샘물과 관련없는 제조시설 설치, 1차)	경고
36			준수사항 위반(먹는샘물과 관련없는 제조시설 설치, 2차)	영업정지 15일 같음 과징금(4,800천원)
37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취수정지 1개월 (2014.6.17 ~ 7.16)
38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	허가취소
39			표시기준 위반 (판매원 표시 부적정)	경고
40			시설기준 위반 (검사장비 일부 미구비)	경고, 개선명령
41			수질기준 부적합 (원수:일반세균)	경고
42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경고
43			표시기준 위반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 표시)	경고
44			변경신고 미이행(휴업기간 중 재개업 신고없이 샘물 취수)	과태료(400천원)
	합계	44		

▣ 중복 적발 업체

순서	업체명	횟수	비고 (날짜)
1	(주)○○샘물	3	2012. 07. 10 2014. 02. 26 2014. 03. 26
2	(주)○○기업	4	2012. 06. 27 2013. 08. 30 2013. 11. 27 2014. 01. 14
3	○○생수(주)	5	2012. 06. 27 2013. 03. 04 2013. 08. 02 2014.04.10. (2개 사항 위반)
4	○○음료(주)	2	2012. 09. 21 2013. 11. 29
5	○○○가야(주)	2	2012. 08. 14 2013. 04. 09
6	(주)○○○음료	3	2012. 06. 13 2013. 07. 02 2013. 10. 29
7	(주)○○샘물	3	2012. 06. 19 2012. 11. 22 2013. 11. 21
8	(주)○○○○샘물	2	2012. 06. 20 2013. 11. 07
9	○○샘물(주)	2	2013. 08. 30 2014. 01. 16

■ 싱크홀 통계 '제각각'...부처간 소통 '제자리'

- 부처별·지자체 '싱크홀' 기준 및 통계 달라 혼선
- 환경부 2012년 이후 전국 70곳에서 '싱크홀'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서울 도심에 '싱크홀' 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 사이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 하고 있음
- 다양한 원인이 거론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하수도관의 노후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노후한 상·하수도관 교체를 지자체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도 국민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 함

※ 환경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파악한 싱크홀 70건

안전행정부는 지난 5년간 파악한 싱크홀 20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만 19건의 싱크홀 발생
서울시의 자체 집계 결과 같은 기간 모두 21건

▣ 대안

- 싱크홀 현황 및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부를 포함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싱크홀' 예방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함

1) 전문가 확보 및 육성 시급

- 그 이유는 싱크홀 현상은 오래전부터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 전문적으로 연구 인력이 전무

2)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제대로 된 협업 필요

- 부처별 · 지자체 ‘싱크홀’ 기준 및 통계가 달라 국민들이 더 불안해함

3)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

- ‘싱크홀’ 발생 원인중 하나가 노후 수도관 문제 이므로 지자체 사업으로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일정 부분 나서야 함

-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수돗물이 노후 수도관 때문에 낭비되고 마시는 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처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법’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의 개정안 준비 중

■ 기업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엉터리 보고 ... 5년 동안 3배 늘고, 부풀려진 양 10배

- 2008년 ~ 2012년 실적 부풀린 허위보고 72건 적발, 230만kg 달해
- 9개 기업이 23건(32%)을 허위보고, 이중 5개 기업은 '사회적 기업'
- 대부분 '단순착오'로 처리, 솜방망이 처벌로 허위 보고 매년 늘어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일상에서 사용 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재활용 되고 있음
-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기업에서 재활용실적을 부풀려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제도 실행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 임
 - 좋은 의도로 도입된 제도가 본연의 뜻과 달리 현장에서 잘못 활용 되고 있음
-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실적조사(2008~2012)' 자료를 분석해 보니 매년 기업의 허위 보고 적발 사례가 증가 하고 있으며 2012년 자료가 최신 자료이며, 2013년도 자료는 작성 중 임
- 자료를 보시면 2008년에는 실적을 부풀려 허위보고 한 것으로 11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을 보면 31건으로 3배 늘었고 부풀려진 양으로 보면 10배가 늘었음

▣ 대안

-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 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보고가 대표적인 ‘비정상’의 사례라 할 수 있음
 - 부과금을 높여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방법은 안 되겠지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함

- 한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되풀이 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허위보고를 하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와 강력한 주의와 경고 등을 통해 잘 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허위보고 적발건수 >

▣ ‘08~’12년 5년차

순서	연도별	적발건수 (회)	차감사유	차감량 (kg)
1	2008	11	단순착오 (9) 재활용방법·기준 미준수 (1) 증빙미비 (1)	99,188
2	2009	5	단순착오 (3) 재활용방법·기준 미준수 (2)	568,722
3	2010	5	단순착오 (4) 증빙미비 (1)	650,612
4	2011	20	단순착오 (13) 재활용방법·기준 미준수 (4) 증빙미비 (3)	144,527
5	2012	31	증빙미비 (18) 단순착오 (7) 재활용방법·기준 미준수 (6)	876,372
합계		72	증빙미비 (23) 단순착오 (36) 재활용방법·기준 미준수 (13)	2,339,421

<출처 : 환경부>

< 중복업체 적발현황 >

■ '08~'12년 5년차

순서	업체명	횟수 (회)	비고 (연도)
1	(주)도원산업	3	2008, 2009, 2010
2	(주)에코그린(사회적기업)	2	2009, 2011
3	(주)컴윈(사회적기업)	2	2008, 2011
4	(주)코바	5	2008, 2009, 2010, 2011, 2012
5	(주)늘푸른자원(사회적기업)	3	2009, 2011, 2012
6	(주)아이알씨	2	2011, 2012
7	(주)아이티그린(사회적기업)	2	2011, 2012
8	(주)에코시티서울(사회적기업)	2	2011, 2012
9	(주)환경과사람들	2	2011, 2012

<출처: 환경부>

■ 되풀이 되는 ‘화학사고’ 산업체 ‘위기대응 매뉴얼’ 은 뒷전

- 조사대상 1620곳 가운데 538곳(34%), 안전 매뉴얼 제대로 갖추지 않아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부처의 안전점검이 상당히 강화되었음
-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부처의 강화된 점검으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화학사고’로 확인된 건수가 10배 증가하였음
-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조사대상 1620곳 가운데 538곳(34%)으로 현장의 ‘안전불감증’ 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최신 매뉴얼이 꼭 필요하나 매뉴얼 수립 의무대상 가운데 20% 그리고 비의무대상 가운데 38% 정도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지는 ‘유독물질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부의 교육은 연간 8시간 이론교육 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함
- ★ ‘유독물관리자’는 1년 8시간 이론 교육 받고 나면 3년 뒤에 재교육을 받음. 하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일명:화관법)’ 시행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연간 교육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남.

▣ 대안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책 수립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결과('13. 3. 19~5. 31, 3,846개소)>

구 분	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기타
조사 업체수	3,846	614	1,070	102	293	1,762	5
화학사고 위험 항목 취약 업체수	1,620(42%)	303(49%)	402(38%)	47(46%)	29(10%)	839(48%)	0

<화학사고 발생 내역('10년 ~ '14. 9. 21)>

(단위 : 건수)

유형별 년도	계	유형구분			피해현황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반차량 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2003	18	4	11	3	4명 사망 17명 부상	
2004	9	3	3	3	4명 사망 26명 부상	0.3억원
2005	6	1	2	3	62명 부상	
2006	15	1	6	8	67명 부상	
2007	16	6	5	5		30.4억원
2008	17	8	4	5	3명 사망 22명 부상	1.2억원
2009	16	3	6	7	1명 부상	-
2010	15	4	2	9		
2011	12	4	4	4	6명 사망 10명 부상	0.8억원
2012	9	3	5	1	11명 사망 67명 부상	554억원 (정부지원금포함)
2013	87	31	35	21	11명 사망 70명 부상	50억원
2014	82	30	37	15	4명 사망 171명 부상	216억원(추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현행화 조사 결과>

위험항목 취약 업체 수		매뉴얼 현행화 업체수 (매뉴얼 수립 비대상은 비상연력망 현행화 여부 등 조사)	교육 실시 업체수	비고
1,620		1,082(66.8%)	1,454(89.7%)	
매뉴얼수립 의무대상*	367	297(80.9%)		
비대상	1,253	785(62.6%)		

* 매뉴얼 수립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PSM),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 업체

<자료출처 : 환경부>

■ 전기차 충전기, 1/5은 고장으로 제 역할 못해

- 환경부, 지난 4년간 1,971대 보급 ... 관리는 142대 만, 나머지 1,830대는 실태파악 안 돼
- 관리대상 142대 가운데 29대 20.4%는 고장으로 이용 불가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기 확산 정책을 시행중
-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14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급속충전 177대, 완속충전 1,794대로 총 1,971대가 설치되어 있음.
- 문제는 이중 7.2%, 142대의 충전기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역시 지난 5월 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92.8%, 1830대의 충전기는 지자체, 국방부, 민간 기업, 개인으로 책임 하에 맡겨져 있어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음
 - 게다가 충전기를 납품한 14개 업체 중 효성, LS전선, 일진전기 3개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파악 됨
- 점검결과 역시 점검대상 142대 가운데 29대 20.4%가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음
 - ★ 급속 충전기 설치비용: 1대 당 약 6000만원, 완속 충전기: 설치비용은 1대 당 약 700만원. 부처에서 지난 4년간 약 231억 7800만원의 예산 소요
-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정기 점검을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시작했고 점검 인원도 5명에 불과 함

- 3개월 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142대 모두를 점검했는데 이 중 29대가 불량으로 무려 20.4%, 다섯 대 중에 한 대는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 대안

- 당장 이번 기회에 현재까지 보급된 1,971대의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했음
- 관리 주체가 지자체, 국방부, 민간기업, 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관리 주체를 통일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전기 자동차는 단순히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동시에 충전기 관리를 현재 제대로 관리해서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해야 함

<전국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단위: 대)

	2010	2011	2012	2013	합계
급속	7	26	85	59	177
완속	9	312	640	833	1,794
합계	16	338	725	892	1,971

(출처: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처)

<전기차 충전기 납품 업체 현황>

(단위: 대)

제조사	충전소 유형		사업수행 여부
	급속	완속	
중앙제어	○	○	○
시그넷시스템	○	○	○
코디에스	○	○	○
피앤이솔루션	○	○	○
LG CNS	○	○	○
효성	○ (4대)	○ (140대)	X
LS전선	○ (21대)	X	X
LS산전	X	○	○
일진전기	X	○ (61대)	X
대은계전	X	○	○
에코파워텍	X	○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X	○	○
광명디앤씨	X	○	○
세모이엔에스	X	○	○
합계	사업이 종료된 업체의 충전소 : 급속 25대, 완속 201대 급속 14.12% (25/177대) 완속 11.2% (201/1,794대) 전체 11.47% (226/1,971대)		

(출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국 급속 충전기 관리 현황>

(단위: 대)

구분	관리자			합계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국방부	
서울	29	5	2	36
부산	8	-	-	8
인천	10	1	-	11
광주	4	3	-	7
대전	2	-	-	2
충북	1	-	-	1
대구	-	1	-	1
경기	24	3	-	27
강원	1	1	-	2
충남	5	5	1	11
세종	1	-	-	1
전북	-	1	-	1
전남	5	5	-	10
경북	5	1	-	6
울산	-	1	-	1
경남	11	2	-	13
제주	36	3	-	39
합계	142	32	3	177

(출처: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처)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기 점검 결과>

점검 기간	점검 횟수	점검결과		
		정상가동	비정상가동	
'14.5	143회	133대	9대	* LCD 불량 :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5건) * 충전기 작동상태 불량 : 종묘 공영주차장 등 (4건)
'14.6	142회	137대	5대	* 충전기 작동상태 불량 : 이마트 문현점 등 (3건) * 통신상태 불량 : 돈네코 야영장 등 (2건)
'14.7	163회	127대	15대	* LCD 불량 : 안성휴게소(부산) 등 (3건) * 전기시설 점검 : 학여울역 공영주차장 등 (2건) * 충전시설 이전 : 관음사지구 주차장 * 충전기 작동상태 불량 : 홈플러스 마산점 등 (5건) * 통신상태 불량 : 안덕면사무소 등 (4건)
합계			29	/142대

(출처: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처)

■ 동물원·수족관 생물 3%만 관리… 나머지는 몰라

- 육해상 생물 '수입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 대응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14년 7월 17일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사육시설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자원보전시설)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26개 동물원·수족관에는 동물 3,551종 132,890마리가 있음. 그러나 이 중 '인공증식허가대상'으로 규정된 20종, '사육시설등록대상'으로 규정된 90종(전체 개체 종의 22%, 개체 수의 3.21%)을 제외한 생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음
-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개체 종의 78%, 개체 수의 96.79%가 환경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동물 수입·사육·전시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마련이 시급함
-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육하고 있는 생물만 총 3천 5백5십1종, 십3만2천8백9십 마리나 되는데 문제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경우 여러 부처(환경부, 농림축산부, 안행부)들이 연결 되어있다 보니 어느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대안

- 환경부 농림축산부, 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관리 주체를 단순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수입·사육·전시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 늘어나는 동물원·수족관 생물 관리를 위해 ‘국제 멸종 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에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국내 동물원 및 수족관 생물 보유 현황>

(단위: 마리)

순서	기관명	종 수	개체 수	관리대상		非관리대상	
				종 수	개체 수	종 수	개체 수
1	거제씨월드	2	20	2	20	0	0
2	달성공원	80	725	18	45	62	680
3	대전아쿠아월드	3	24	3	24	0	0
4	대전 오월드	117	678	48	263	69	415
5	드림랜드	20	109	5	15	15	94
6	부경동물원	102	429	38	134	64	295
7	부산아쿠아리움	93	5,482	6	56	87	5,426
8	(주)삼정테마파크	112	1,791	45	158	67	1,633
9	서울대공원	335	3,072	139	1,085	196	1,987
10	서울어린이대공원	94	466	45	179	49	287
11	아쿠아플라넷 여수	242	14,293	16	71	226	14,222
12	아쿠아플라넷 일산	270	18,769	35	271	235	18,498
13	아쿠아플라넷 제주	415	47,594	32	138	383	47,456
14	에버랜드	188	2,280	86	795	102	1,485
15	우치공원	130	734	46	132	84	602
16	울산대공원 나비원	8	21	1	2	7	19
17	울산대공원 동물원	40	938	14	38	26	900
18	육림랜드	38	153	5	8	33	145
19	63씨월드	256	5,441	24	123	232	5,318
20	장생포고래박물관	68	771	10	27	58	744
21	전주동물원	105	636	31	123	74	513
22	(주)주렁주렁동물원	53	338	7	24	46	314
23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49	231	13	29	36	202
24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50	163	47	154	3	9
25	코엑스아쿠아리움	525	26,894	13	70	112	26,824
26	테마동물원	156	838	45	252	111	586
	합계	3,551	132,890	781	4,277	2,770	128,613
	비율		100%	22%	3.21%	78%	96.79%

<출처 : 환경부>

■ 한국 생물다양성 ‘빨간불’

- 최근 5년간(2009~2014) 국내유입 외래생물의 수가 894종 → 2167종으로 약 40%증가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98년에 194종 → 2005년 221종 → 2012년 246종으로 조사 때 마다 10% 증가 (6년 마다 조사)

▣ 현황 및 문제점

- 생물다양성총회가 열리고 있어서 그런지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환경부로 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과 ‘멸종 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자료를 검토해보면 외래 식물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음
-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 유입 외래생물의 수가 894종 → 2167종으로 약 40%증가 했고 현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동식물중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된 것은 18종이며 이중 2009년 이후 지정된 종이 9종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음
- 외래 동식물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또한 외래생물들의 서식범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되 있어 체계적인 퇴치사업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공조할 필요가 있음

▣ 대안

-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생태교란종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래생물들의 서식 범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는데 체계적인 퇴치사업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멸종위기의 생태 자원 호보해야 함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

연도	동물**	식물	계
2009년	607종	287종	894종
2011년	800종	309종	1,109종
2014년	1,833종	334종	2,167종

* 출처:외래생물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 동물: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무척추동물(곤충, 절지동물)만 해당

<연도별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

구 분	'89	'93	'96	'98			'05			'12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 호 야생 동식물	계	I	II	계	I	II
계	92	179	203	194	43	151	221	50	171	246	51	195
포유류	-	-	-	17	10	7	22	12	10	20	11	9
조 류	-	-	-	59	13	46	61	13	48	61	12	49
양서·파충류	12	22	22	5	1	4	6	1	5	7	2	5
어 류	-	-	24	12	5	7	18	6	12	25	9	16
곤충류	21	31	31	19	5	14	20	5	15	22	4	18
무척추동물	-	-	-	24	3	21	29	5	24	31	4	27
식물류	59	126	126	58	6	52	64	8	56	77	9	68
해조류	-	-	-	-	-	-	1	-	1	2	-	2
고등균류	-	-	-	-	-	-	-	-	-	1	-	1

근거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처장관고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야생생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생물종	지정일	생태계 교란 형태	비고
황소개구리	'98.2.19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거의 없음 ○곤충, 물고기, 국내 토착개구리, 뱀까지 잡아먹는 탐식성 양서류 ○먹이사슬 파괴 ○새우, 참게 양식장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여 양식장 훼손	○원산지:미국 ○주요분포지역:전국 호소,저수지,논 ○용도:식용
파랑볼우렁 (블루길)	'98.2.19	○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 ○수서곤충, 새우, 물고기 등을 섭식하여 담수생태계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댐, 하천 ○용도:식용
큰입배스	'98.2.19	○60~70년대 초 도입되어 전국의 저수지, 하천 등에 정착 ○토종어류, 알을 잡아먹어 고유어종에 피해 야기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댐, 저수지, 하천 ○용도:낚시용, 식용
붉은 귀거북속 전종	'01.12.24	○우리고유의 붕어, 미꾸라지 등 어류와 수서곤충 및 양서류 등을 잡아먹어 호소와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댐,호소 ○용도:방생,애완용
단풍잎 돼지풀	'99.1.7	○키가 크고(3-4m) 집단생육으로 다른 식물의 성장방해 ○꽃가루알레르기 유발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비의도적 도입
돼지풀	'99.1.7	○주택가, 산의 능선, 계곡, 휴경지 등 양지바른 곳에서 왕성히 성장하여 생태계 교란 ○꽃가루알레르기 유발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서양등골 나물	'02.3.7	○산림생태계의 하층에서 자생식물 생육지를 점유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서울, 경기 ○비의도적 도입
털물참새피	'02.3.7	○벼의 생육을 방해하고 농수로에 무성하게 자라 물길을 막음 ○뿌리가 1m 이상으로 자라 뽑기가 쉽지 않음 (2개로 구분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남,서해안,제주 ○비의도적 도입
물참새피	'02.3.7	○논에서 활발히 성장하여 심각한 잡초로 인식 ○특히 늪지, 소택지, 오염된 하천과 높은 농도의 염도에서 잘 자람	○원산지:열대아시아 ○주요분포지역: 제주,호남 ○비의도적 도입
도깨비가지	'02.3.7	○목초지에서 잘 자라고 가축에게 독성이 있음 ○식물체에 부착된 가시로 인하여 농작업을 곤란하게 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뉴트리아	'09.6.1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거의 없음. ○우포늪 등 주요습지 낙동강변 등 하천의 수초와 작물을 먹고 왕성하게 자람 ○수초대 파괴와 농업 피해 등 피해 확산	○원산지:남미 ○주요분포지역: 경남 및 제주의 수변 ○용도:식용,모피
가시박	'09.6.1	○한강 등의 수변과 도로변 및 산자락에 급속히 확산하고 왕성하게 생육 ○덩굴로 덮어 자라 토착식물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파괴 및 농업 피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한강, 낙동강 수변 등 ○비의도적 도입
미국 썩부쟁이	'09.6.1	○하천변과 도로변에 급속히 확산하고 왕성하게 생육 ○종자가 날리며 밀집생육하여 토착식물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중부이북 하천변, 도로변 ○용도:원예용
서양금혼초	'09.6.1	○제주도 도로변과 초지와 산지에 확산되었고 서남해안을 따라 내륙에서 확산 중 ○접시모양으로 땅을 덮어 자라며 많은 종자가 나오며 영양번식하고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번식하여 토착식물배제	○원산지:유럽 ○주요분포지역: 제주도, 서남해 일부지역 ○비의도적 도입

생물종	지정일	생태계 교란 형태	비고
애기수영	'09.6.1	○제주도와 강원도 및 서천 목장과 인근지역에 크게 확산 ○많은 종자를 생산하며 영양번식하여 초지 등에 널리 확산되어 초지와 자연식생 파괴	○원산지:유라시아 ○주요분포지역: 제주도, 강원도 ○비의도적 도입
양미역취	'09.6.1	○종자와 땅속줄기로 번식하여 하천변, 도로변 등에 밀생 ○키가 크고 밀생하여 토착식물의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등을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남 ○용도:양봉용
꽃매미	'12.12.3 1	○포도나무, 가죽나무, 버드나무, 때죽나무 등 많은 종류의 나무나 과수에 붙어 수액을 흡수 ○대규모 포도재배단지, 산림지역, 도심 하천변에 분포하며 경관훼손, 그을음과 마름병 유발	○원산지:중국남부, 동남아시아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가시상추	'12.12.3 1	○선구성 식물로 서식입지에 정착하면 토착식물의 다양성 감소 ○줄기와 잎맥을 따라 돌아난 가시는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음	○원산지:유럽 ○주요분포지역: 중남부지역 ○비의도적 도입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 감사]

■ 지방환경청 자문단, 구성도 운영도 제각각!!

- 7개 지방환경청 '자문단' 공식 운영지침서 없이 운영 ... 자문료는 연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지급
- 자문단 구성은 95%가 학계 일색, 현장의 목소리 배제

▣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제외한 7개 지방환경청은 청별로 평균 100여명의 대규모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매년 자문단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자문단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없이 운영되고 있음
 - ★ 자문료 지불에 대한 기준은 정부에 있음
- 더욱이 자문단 구성역시 평균 95%가 학계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구조라 객관성 담보 및 공정한 자문단 운영을 위한 각계 전문가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대안

- 7개 지방환경청 자문단구성 현황을 보면 평균 95% 학계로 출신으로 제대로 된 운영계획서 없이 운영 되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지방청 자문단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함

<지방청별 자문단 수당지급 현황>

	지난 회기 자문단의 수당비용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의 수당비용
한강청		(‘13.04.01 위촉이후) 44,930,000
낙동강청		(‘13.04.25 위촉 이후) 10,900,000
금강청		(‘12.01.01 위촉 이후) 25,700,000
영산강청		(‘14.04.01 위촉 이후) 27,090,000
원주청	(‘11.04 ~ ‘13.04) 123,940,000	(‘13.04.26 위촉 이후) 57,140,000
새만금청		(‘13.04.01 위촉 이후) 65,140,000
대구청		(‘13.12.27 위촉 이후) 28,000,000

<자료 지방환경청>

<지방청별 자문단 구성 현황>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기타	합계
한강청	99 (96%)		2	2(공단)	103
낙동강청	131 (98%)	2(지방청)			133
금강청	104 (94%)		3	4	111
영산강청	110 (100%)				110
원주청	95 (94%)		5	1(공단)	101
새만금청	55 (90%)		6		61
대구청	84 (100%)				84

<자료 지방환경청>

<자문단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

- 자문단 구성 목적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자문단 구성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 28조 제 2항 및 제 12조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처리규정 (환경부예규 제492호, ‘13.7.4)
- 자문단 선정 기준
 - 재위촉: 검토의견 회신율이 높은 위원 중 연임의사가 있는 위원
 - 신 규: 대학,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분야별 안 배를 고려하여 선정
 - 해 촉: 검토의견 회신율이 저조하거나 해외연수 등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위원
- 자문단 선정 방식
 - 대학,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 환경청, 지난 3년간 수질 오염사고 2배 증가

- 369건 중 156건 42% 인재(人災)형 사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절실
- 최근 3년간 평균 60% 수질오염 사고 증가, 17%는 원인 미상 이유 몰라, 어류폐사의 경우 90%가 원인 미상

▣ 현황 및 문제점

- 계속되는 녹조 발생, 오폐수 및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강(江)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3년간(2012~2014. 7) 수질오염사고는 크게 늘었고, 이중 156건 42%가 인재(人災)형 사고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함.
 - 더욱이 61건 17%는 원인미상으로 이유가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어류폐사의 경우 90%가 원인 미상으로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계 당국의 관리 강화와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 대안

- 수질 오염사고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프로세스 개발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함
- ‘원인미상’을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 및 조사 능력을 키워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함
- 수질오염사고는 전체적으로 2012년 82건, 2013년 15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2014년 7월 현재 130건으로 전년 대비 85%가 벌써 발생했고 지금 추세라는 금년에는 220건 까지 도 사고가 날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최근 3년간 지방환경청 수질오염사고 현황>

- 관리부주의/원인미상 중심으로 -

지역 환경청	총 사고 수	사고원인		'12 사고 수	사고원인		'13 사고 수	사고원인		'14.07 사고 수	사고원인	
		관리 부주의	원인 미상		관리 부주의	원인 미상		관리 부주의	원인 미상		관리 부주의	원인 미상
한강청	113	36 (32%)	22 (19%)	15	7 (47%)	0	38	12 (32%)	13 (34%)	60	17 (28%)	9 (15%)
낙동강청	57	31 (54%)	5 (9%)	19	9 (47%)	4 (21%)	28	15 (54%)	0	10	7 (70%)	1 (10%)
금강청	83	34 (41%)	17 (20%)	20	7 (35%)	2 (10%)	41	19 (46%)	2 (5%)	22	8 (36%)	13 (59%)
영산강청	24	10 (42%)	3 (13%)	12	5 (42%)	2 (17%)	8	1 (13%)	1 (13%)	4	4 (100%)	0
원주청	52	28 (54%)	10 (19%)	7	4 (57%)	2 (29%)	24	11 (46%)	1 (4%)	21	13 (62%)	7 (33%)
대구청	26	13 (50%)	3 (12%)	5	2 (40%)	1 (20%)	14	9 (64%)	2 (14%)	7	2 (29%)	0
새만금청	14	4 (29%)	1 (7%)	4	0	0	4	1 (25%)	0	6	3 (50%)	1 (17%)
합 계	369	156 (42%)	61 (17%)	82	34 (41%)	11 (13%)	157	68 (43%)	19 (12%)	130	54 (42%)	31 (24%)

<자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사항 없음.

■ 한강유역청, 상수원 수중 물관리 비상

-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폐선 방치
- 수중폐기물 오염물질이 취수장으로 흘러가 상수원 오염... 시민 피해 우려
- 한강유역환경청과 예산 부족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담당 지자체 사이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 현황 및 문제점

-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곳으로 당연히 깨끗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기름때와 각종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폐선이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폐선 수 확인중, 현재까지는 2척 확인

-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기름때와 각종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폐선이 가라앉아 있지만, 관계당국이 방치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
 - 특히 폐선으로부터 나오는 기름등 수중폐기물들이 뿜어내는 오염물질이 물과 함께 취수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법적으로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예산 부족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담당 지자체와 입장이 충돌하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한강 상수원의 수질만 악화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대안

- 상수원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부처간 떠넘기며 수동적으로 대처 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함

■ 수도권 대기환경청, 말만 수도권 대기질 개선 ... 행정·공공 기관 저공해차(車) 구입 의무화 지켜야

- 2005년 특별법 시행 후 2012년 30.2%로 1차례 의무구입 비율 달성
- 저공해 자동차 구입 가능 차종 20127월 이전 135종 → 20142월 44종으로 줄어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 구매하여야 함
- 문제는 2005년 특별법 시행 후 1차례(2012년) 구입의무비율 목표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구입의무비율 준수 기관이 22%(40개 기관)에 불과하여 구입의무비율 달성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
 - 2005년 ~20013년 9년간 연평균 구입 비율은 21%에 불과함.
- 더욱이 2010년 까지는 구입의무비율이 20%였음에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었음
 - 구입의무비율 20%→30% 상향 조정('11. 3. 31, 「수도권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구입의무비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강화('12. 7월)로 저공해차종 대폭 감소하여, 실제 구매가 가능한 저공해차종이 44종에 불과('14. 2월 기준)하여 구입의무비율 30%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
 - 저공해 자동차 구입 가능 차종 : '12. 7월 이전 135종 → '12. 7월 이후 50종 → '14. 2월 44종

▣ 대안

- 올해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주년 되는 해로 그동안 미세먼지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는 개선되고 있으나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이 있는 이산화질소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공해자동차 목표달성 현황 자료 (2005년 이후)’에 따르면 2005년 ~ 2013년 9년간 연평균 구입 비율은 21%에 불과함
- 2005년 특별법 시행 후 2012년 30.2%로 1차례 의무구입비율 목표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의무구입비율 준수 기관이 22%(40개 기관)에 불과하여 의무구입비율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함
-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이산화질소 농도 개선이 미흡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기술의 한계, NOx 배출이 많은 경유 차량의 증가 등에 기인함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미세먼지 40 $\mu\text{g}/\text{m}^3$, 이산화질소 22ppb 달성을 목표로 5개 분야별 추진대책을 마련·시행
 - 미세먼지(PM₁₀)는 '04년 59 $\mu\text{g}/\text{m}^3$ 에서 '12년 41 $\mu\text{g}/\text{m}^3$ 로 개선(황사제외)되었으나, '13년에는 오히려 44 $\mu\text{g}/\text{m}^3$ 로 증가
 - 이산화질소(NO₂)는 '04년 37ppb에서 '13년 33ppb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나, 감소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임

<저공해자동차 목표달성 현황자료(2005년 이후)>

연도	대상 기관	자동차 구매기관 (구매량)	저공해차 구매기관	저공해차 구매 현황		의무비율 달성 현황		구매 의무 비율
				구매량	비율	달성기관	비율	
2013	212	180(2,369)	145	211	16.5%	40	22.2%	30%
2012	214	185(2,603)	138	650	30.2%	84	45.4%	
2011	216	189(3,192)	110	640	19.8%	50	26.5%	
2010	218	185(3,073)	102	483	15.7%	59	31.9%	20%
2009	213	177(3,019)	101	443	13.9%	48	27.1%	
2008	184	155(2,459)	79	288	11.4%	40	25.8%	
2007	189	163(3,551)	77	296	3.4%	5	3.1%	
2006	199	178(3,260)	81	277	3.1%	8	4.5%	
2005	200	176(3,424)	79	377	3.5%	9	5.1%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

■ 낙동강 유역청, 방치된 준설선, 환경오염 시한폭탄 침몰된 4척 수 년째 방치 ... 27척은 아직 인양 계획조차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낙동강에 방치된 준설선은 56척임(침몰된 4척 포함). 선주들이 인양비가 1척당 1억원 에서 최고 5억원까지 들어 방치해 두고 있음
- 폐업신청을 한 준설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하여 육지로 반출하고 있으나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준설선은 반출을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침몰선 선박주를 고발을 했으나 무혐의로 결정이 나기도 함
 - 따라서 우선 침몰선을 인양하고 배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낙동강유역환경청(하류)	대구지방환경청(상류·중류)
준설선현황 (10월 현재)	26척+4척(침몰)= 30척	26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양예정	·올해까지 8척 인양예정 -매몰 4척 미포함	·2014년 33척 중 10월까지 7척 반출 ·올해까지 21척을 인양예정

※ 강·항만·항로 등의 바닥에 있는 흙·모래·자갈·돌 등을 파내는 시설을 장비한 준설선은 지난 4대강 사업에 동원되었음.

- 지난 9월 침몰된 선박에 대한 수중점검을 실시하여 1대에서 기름등 오염원을 제거하였음.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9월 부산국토지방청, 관련 지자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음
 - 대구지방환경청도 5월에 준설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곧 10월 점검을 할 예정임
 - 관할 환경청에서 1년에 2~3번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침몰된 준설선은 인양전까지 낙동강 환경지킴이가 상주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대안

- 낙동강은 영남지역 사람들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

요한 생명줄인데 방치되어 있는 준설선은 기름이나 녹 등으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표류하거나 침몰될 시에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 감시단이 상주하여 침몰선을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그리고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대구지방환경청, 강변 생태계 파괴자 ‘가시박’ 제거 절실

▣ 현황 및 문제점

※ (가시박) 일년생 덩굴식물로서 반경 5m의 주변 식생을 덮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며, 씨앗이 물 흐름이나 야생동물의 털에 묻어 이동

○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으로 인한 낙동강 일대의 강변 농작물 피해 심각. 특히, 낙동강 상류에서 시작된 ‘가시박’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내 고유종의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옥수수 등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안동 등 낙동강 하천변을 가시박이 덮고 있는 피도율이 6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임

※ 가시박 피도율 (식물이 지표면을 덮는 비율 100기준) 조사결과

모니터링	결과
‘12년 국립 환경 과학원	안동 등 낙동강 하천변 피도율 65%
‘13년 대구지방환경청	주요습지 10개소 피도율 40%이상
‘14년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 중상류 분포현황 2,034,562m ²

※ 참고

지난 8월 대구신문에 기고한 영남대 박선주 교수의 글에 따르면, 가시박을 “강변의 재앙” 이라고 표현함. 그리고 옥수수밭 10m²당 가시박 28~50개체 침입하면 수확량의 90~98%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음

▣ 대안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안동 등 낙동강 하천변을 가시박이 덮고 있는 비율이 6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가시박의 생육특성과 물 흐름에 따른 상류에서 하류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단발적인 사업시행은 효과가 없으며, 체계적이고 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 추진이 필요 함
-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교란종’은 18종으로 이중 8종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확산 추세인 ‘가시박’을 지금 단계에서 제거하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

‘가시박’ 피도율 (식물이 지표면을 덮는 비율 100기준) 조사결과

모니터링	결과
‘12년 국립 환경 과학원	안동 등 낙동강 하천변 피도율 65%
‘13년 대구지방환경청	주요습지 10개소 피도율 40%이상
‘14년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 중상류 분포현황 2,034,562m ²

<자료 대구지방환경청>

(붙임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생물종	지정일	생태계 교란 형태	비고
황소개구리	‘98.2.19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거의 없음 ○곤충, 물고기, 국내 토착개구리, 뱀까지 잡아먹는 탐식성 양서류 ○먹이사슬 파괴 ○새우, 참게 양식장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침입하여 양식장 훼손	○원산지:미국 ○주요분포지역:전국 호소,저수지,논 ○용도:식용
파랑볼우렁 (블루길)	‘98.2.19	○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 ○수서곤충, 새우, 물고기 등을 섭식하여 담수생태계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댐,하천 ○용도:식용

생물종	지정일	생태계 교란 형태	비고
큰입배스	'98.2.19	○60~70년대 초 도입되어 전국의 저수지, 하천 등에 정착 ○토종어류, 알을 잡아먹어 고유어종에 피해 야기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댐, 저수지, 하천 ○용도:낚시용, 식용
붉은 귀거북속 전종	'01.12.24	○우리고유의 붕어, 미꾸라지 등 어류와 수서곤충 및 양서류 등을 잡아먹어 호소와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댐,호소 ○용도:방생,애완용
단풍잎 돼지풀	'99.1.7	○키가 크고(3-4m) 집단생육으로 다른 식물의 성장방해 ○꽃가루알레르기 유발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국 ○비의도적 도입
돼지풀	'99.1.7	○주택가, 산의 능선, 계곡, 휴경지 등 양지바른 곳에서 왕성히 성장하여 생태계 교란 ○꽃가루알레르기 유발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서양등골나물	'02.3.7	○산림생태계의 하층에서 자생식물 생육지를 점유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서울, 경기 ○비의도적 도입
털물참새피	'02.3.7	○벼의 생육을 방해하고 농수로에 무성하게 자라 물길을 막음 ○뿌리가 1m 이상으로 자라 뽑기가 쉽지 않음 (2개로 구분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전남,서해안,제주 ○비의도적 도입
물참새피	'02.3.7	○논에서 활발히 성장하여 심각한 잡초로 인식 ○특히 늪지, 소택지, 오염된 하천과 높은 농도의 염도에서 잘 자람	○원산지:열대아시아 ○주요분포지역: 제주,호남 ○비의도적 도입
도깨비가지	'02.3.7	○목초지에서 잘 자라고 가축에게 독성이 있음 ○식물체에 부착된 가시로 인하여 농작업을 곤란하게 함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뉴트리아	'09.6.1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거의 없음. ○우포늪 등 주요습지 낙동강변 등 하천의 수초와 작물을 먹고 왕성하게 자람 ○수초대 파괴와 농업 피해 등 피해 확산	○원산지:남미 ○주요분포지역: 경남 및 제주의 수변 ○용도:식용,모피
가시박	'09.6.1	○한강 등의 수변과 도로변 및 산자락에 급속히 확산하고 왕성하게 생육 ○덩굴로 덮어 자라 토착식물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파괴 및 농업 피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한강, 낙동강 수변 등 ○비의도적 도입
미국 썩부쟁이	'09.6.1	○하천변과 도로변에 급속히 확산하고 왕성하게 생육 ○종자가 날리며 밀집생육하여 토착식물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 중부이북 하천변, 도로변 ○용도:원예용
서양금혼초	'09.6.1	○제주도 도로변과 초지와 산지에 확산되었고 서남해안을 따라 내륙에서 확산 중 ○접시모양으로 땅을 덮어 자라며 많은 종자가 나오며 영양번식하고 겨울을 제외한 시기에 번식하여 토착식물배제	○원산지:유럽 ○주요분포지역: 제주도, 서남해 일부지역 ○비의도적 도입
애기수영	'09.6.1	○제주도와 강원도 및 서천 목장과 인근지역에 크게 확산 ○많은 종자를 생산하며 영양번식하여 초지 등에 널리 확산되어 초지와 자연식생 파괴	○원산지:유라시아 ○주요분포지역: 제주도,강원도 ○비의도적 도입

생물종	지정일	생태계 교란 형태	비고
양미역취	'09.6.1	○종자와 땅속줄기로 번식하여 하천변, 도로변 등에 밀생 ○키가 크고 밀생하여 토착식물의 생육억제와 수변식생 등을 파괴	○원산지:북미 ○주요분포지역:전남 ○용도:양봉용
꽃매미	'12.12.31	○포도나무, 가죽나무, 버드나무, 때죽나무 등 많은 종류의 나무나 과수에 붙어 수액을 흡수 ○대규모 포도재배단지, 산림지역, 도심 하천변에 분포하며 경관훼손, 그을음과 마름병 유발	○원산지:중국남부, 동남아시아 ○주요분포지역:전국 ○비의도적 도입
가시상추	'12.12.31	○선구성 식물로 서식입지에 정착하면 토착식물의 다양성 감소 ○줄기와 잎맥을 따라 돌아난 가시는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음	○원산지:유럽 ○주요분포지역: 중남부지역 ○비의도적 도입

<자료 환경부>

■ 금강유역 환경청 등, 구제역 매몰지 제2차피해 막기 위해 집중 관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구제역(4,582개소), AI(216개소) 가축 매몰지 4,799개소 중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몰지 및 해빙기, 우기철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함

<환경부 구제역 매몰지 관리 2013년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매몰지 환경순찰 등 관리차량 임차	16	15	1
매몰지 환경순찰 등 차량유지비	19	18	1
시험실 재료구매(이월)	16	16	-
매몰지 환경순찰 출장여비	65	56	9
합 계	116	105	11

<2011년~2014년 9월까지 지방청별 구제역 관리점검 현황>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점검횟수	지점대상	점검횟수	지점대상	점검횟수	지점대상	점검횟수	지점대상
한강유역환경청	759	512	423	299	372	468	23	64
	1. 4회		1. 4회		1. 3회		0. 3회	
낙동강유역환경청	363	82	262	82	183	82	60	24
	7. 7회		3. 1회		2. 2회		2. 5회	
금강유역환경청	307	472	164	42	127	36	4	8
	0. 6회		3. 9회		3. 5회		0. 5회	
영산강유역환경청	AI 매몰지만 있음							
원주지방환경청	107	28	151	19	123	14	72	5
	3. 8회		7. 9회		8. 8회		14. 4회	
대구지방환경청	매몰 중		214	50	213	60	59	24
			4. 2회		3. 5회		2. 4회	
새만금지방환경청	63	2	25	2	14	2	4	2
	31. 5회		12. 5회		7회		2회	

<2011년~2013년 지방청 별 점검 횟수 평균>

한강유역청	낙동강유역 환경청	금강유역 환경청	원주지방 환경청	대구지방 환경청	새만금지 방환경청
1. 2회	3. 2회	1회	6. 2회	3. 8회	17회

▣ 대안

- 최근 경기도에서 2011년 문은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서 돼지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매몰지를 잘 점검하고 관리해야 제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모든 지청에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점검 횟수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려되는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원주청, SNS 환경홍보단 태블릿 피씨만 지급받고 활동은 마비

- 원주지방 환경청, 태블릿피씨 8대 구매 2013년 이후 성과는 전혀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 SNS 환경홍보단 : 2011년 6월 중앙부처 최초로 SNS환경 홍보단을 구성하였음. 시행하기 앞서 환경부는 소속기관에 SNS홍보단 활성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음
- 2012년까지만 홍보활동 성과지표를 환경부에서 관리하였지만 이후에는 소속기관별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함

<소속기관 스마트기기 구입 내역 및 재정적 지원내역>

기관명	스마트기기 구입 내역
한강유역환경청	기존 기기 활용, 구입내용 없음
낙동강유역환경청	-스마트폰 2대, 1,892천원
금강유역환경청	기존 기기 활용, 구입내용 없음
영산강유역환경청	기존 기기 활용, 구입내용 없음
원주지방환경청	-태블릿 PC구입 8대 6,992천원
대구지방환경청	기존 기기 활용, 구입내용 없음
새만금지방환경청	기존 기기 활용, 구입내용 없음
수도권대기환경청	기존 기기 활용, 구입내용 없음

<원주지방환경청 SNS 운영 성과>

연도	환경홍보단원 수	운영성과
2011년	7명	환경정책 홍보 30건
2012년	2명	환경정책 홍보 97건
2013년	-	환경정책 홍보 35건 (7월~11월 사이 1건)
2014년	-	4월 1건 8월 13일 이후 5건 9월 5건 10월 1건 2014년 총 12건
※ 8월 10일 SNS환경 홍보단 자료 제출 받은 후 홍보건수가 증가함		

- (소속 기관) 한강유역환경청 등 13개 소속 기관의 SNS 홍보실적은 사업 초창기와 비교해 낮은 측면이 있으나, 이는 본부 SNS를 통한 통합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기관별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인 홍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대안

- 환경부는 지난 2011년 환경정책의 홍보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중 최초로 SNS 환경홍보단을 구성하였고 부처 및 소속기관들의 홍보단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 지급등 지원으로 6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구입한 태블릿 PC인만큼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국립생태원, 개장 2년, 마케팅 인프라는 아직 미비

- 관람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전시 공간이나 야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관람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올해 3차례에 걸쳐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방문 의향’과 ‘타인추천 의향’, ‘종합 만족도’ 세 항목 모두에서 만족도가 감소함
- 싱가포르의 JURONG 새공원(Jurong Bird Park)은 오직 조류에만 한정된 생태 공원이지만, 멤버십 프로그램 · 프라이빗 투어 · 조류 쇼 ·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 조류 공원은 물론이고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음

< 관람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

구 분	조사기간	표본수	비 고
1차(무료기간)	'14. 1. 10. ~ 11.	150명	개원 기념 대국민 무료개방 기간, 방학연말연시 연휴
2차(무료기간)	'14. 4. 13. ~ 5. 10.	267명	재개원 후 무료개방 기간
3차(유료기간)	'14. 5. 18. ~ 6. 14.	260명	유료화 전환 후

주요항목	구 분	구성비 (%)		
		1차	2차	3차
종합 만족도	만족	88.0	86.9	80.8
	보통	9.3	12.0	16.9
	불만족	2.7	1.1	2.3
재방문 의향	만족	99.0	85.0	77.0
	보통	1.0	12.4	16.5
	불만족	-	2.6	6.5
타인추천 의향	만족	-	89.5	80.8
	보통	-	9.7	15.8
	불만족	-	0.8	3.4

▣ 대안

- 전시 공간이나 야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관람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홈페이지를 들어가 살펴보니 한국어 페이지에 비해 영문 페이지는 매우 조출하고 실제 외국인이 생태원을 찾아와서 즐기고 싶어 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을 소개 하는 등 홈페이지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 관람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단순히 일방적인 전시의 나열이 아니라 국립생태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야 함
-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서 살아있는 생태체험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탄소배출량 50% 감축 및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 올림픽 준비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저탄소 친환경 대회를 표방 했으나, 무늬만 친환경 대회라는 비판을 받음
- 당초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인 13만 996톤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12만 9500톤 98%를 기부 받아 달성함
- 이제 4년 뒤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목표대로 탄소배출량 50%감축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 지난 4일 끝난 ‘인천아시안게임’ 역시 저탄소 · 친환경 대회를 내세웠지만, 무늬만 친환경 대회라는 비판이 있었음
- 아시안게임의 경우 당초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인 13만 996톤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12만 9500톤 95%를 기부를 받아 달성했음
- 순수 대회를 진행하면서 감축한 목표치의 5% 뿐이며 결국은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기부 받아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한 셈

▣ 대안

- 올림픽은 대규모 토목공사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훼손에 대한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임으로 무늬만 친환경 대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 부터 환경청에서 ‘평창올림픽준비위원회’와 협조하여 진정한 친환경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환경부 산하기관 감사]

**■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15%, ‘라돈·우라늄 초과 검출’
 …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해야**

- 지난 3년간(11~13년)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1,380개소 중 라돈 150곳 11%, 우라늄 26곳 2%, 라돈·우라늄 34곳 2.5% 초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1,380개소 중 210곳 에서 라돈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관련 수질기준이 없어 미국의 기준을 인용하여 검사하고 있음.
- 이에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 마련이 절실함.

*** 부처의견 : 자연방사성 물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마신다고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우라늄 :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질환 유발
- 라돈 : 폐암 또는 위암 유발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11~13년) - 원수기준>

(단위 : 개소, %)

연도	조사대상	라돈 검출		우라늄 검출		라돈, 우라늄 동시 검출	
		위반대상	비율	위반대상	비율	위반대상	비율
2011년	305	43	14.1	8	2.6	7	2.3
2012년	459	59	12.9	6	1.3	16	3.5
2013년	616	48	7.8	12	1.9	11	1.8
합계	1380	150	10.9	26	1.9	34	2.5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 기준: 국내 음용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관련 수질기준 없음
 - 우라늄 : 미국 먹는물 기준 및 국내 먹는물 감시항목 권고치 30 μ g/L 운영
 - 라 돈 : 미국 먹는물 제안치(proposed rule)인 4,000 pCi/L 참고
 - 전알파 : 미국 먹는물 기준 15 pCi/L 참고하여 운영

○ 국내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시 참고치

항목	우라늄(μ g/L)	라돈(pCi/L)	전알파(pCi/L)
기준치	30	4,000	15

- 미국 수질기준: 우라늄, 전알파, 미국 제안치: 라돈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11~13년) - 원수기준>

(단위 : 개소, %)

연도	조사대상	라돈 검출		우라늄 검출		라돈, 우라늄 동시 검출	
		위반대상	비율	위반대상	비율	위반대상	비율
2011년	305	43	14.1	8	2.6	7	2.3
2012년	459	59	12.9	6	1.3	16	3.5
2013년	616	48	7.8	12	1.9	11	1.8
합계	1380	150	10.9	26	1.9	34	2.5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 대안

- 일반적으로 라돈의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일으키고, 우라늄은 신장 질환을 야기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 라돈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 하고 있으므로 자연방사성 물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마신다고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
-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병행 돼야 함

■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PM2.5 관리 비상

-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터미널, PC방, 철도대합실 등 세계보건기구 WHO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25 마이크로미터 ($\mu\text{g}/\text{m}^3$) 초과
- 현재 우리나라에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은 없음 -

▣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점포, 보육시설,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PM10 농도는 예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초미세먼지 PM2.5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심각함.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농도는 시설별로 기준을 두고 관리 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국제보건기구 WHO의 초미세먼지 기준($25 \mu\text{g}/\text{m}^3$)을 적용하여 측정함.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터미널, PC방, 철도대합실 등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연구용역보고서’(2014. 6)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위협적임으로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초미세먼지 PM2.5의 조사 결과>

	실내		실외	
	조사대상	농도	조사대상	농도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연구용역보고서 2014. 6	대규모점포	26.56 $\mu\text{g}/\text{m}^3$	대규모점포	31.42 $\mu\text{g}/\text{m}^3$
	보육시설	31.44 $\mu\text{g}/\text{m}^3$	보육시설	23.78 $\mu\text{g}/\text{m}^3$
	지하역사	52.10 $\mu\text{g}/\text{m}^3$	지하역사	59.83 $\mu\text{g}/\text{m}^3$
	의료기관	17.20 $\mu\text{g}/\text{m}^3$	의료기관	20.64 $\mu\text{g}/\text{m}^3$
	실내주차장	32.76 $\mu\text{g}/\text{m}^3$	실내주차장	27.79 $\mu\text{g}/\text{m}^3$
	터미널	32.49 $\mu\text{g}/\text{m}^3$	터미널	66.27 $\mu\text{g}/\text{m}^3$
	전시회장	19.30 $\mu\text{g}/\text{m}^3$	전시회장	29.18 $\mu\text{g}/\text{m}^3$
	도서관 및 박물관	15.20 $\mu\text{g}/\text{m}^3$	도서관 및 박물관	23.18 $\mu\text{g}/\text{m}^3$

<자료: 환경부>

※ 국제보건기구 WHO 초미세먼지 가이드라인 기준은 25 마이크로미터 ($\mu\text{g}/\text{m}^3$)

▣ 대안

- 최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11일에 최악의 황사로 베이징 주요 도로의 체감 가시거리는 20m에도 못 미쳤고 항공기 운항조차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음
- 국제보건기구 WHO도 자신들이 제시한 대기 권고기준을 실내공간에서의 적용을 권장 하고 있음
-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미세먼지 PM10의 농도기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초미세먼지 PM2.5의 높은 건강 위해도를 고려하여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준비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해외 반출된 한반도산 생물표본 약 3만 3천여 점, 이중 고유생물표본 1,885점 ...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체계적 자료 수집

- 한반도산 생물자원표본 9개국 25개 기관에 약 33,691점 확인... 이중 고유생물표본이 4개국 8개 기관에 485종 1,885점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 약 15개국 53개 기관에 최소 100만점 이상 한반도산 생물표본이 반출된 것으로 추정. 해외 반출되어 있는 한반도산 생물표본과 한반도산 고유생물종 표본은 한반도 생물자원의 분포 변화 및 계통연구 등을 위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 또한, 해외에 반출된 일부 종의 경우 품종개량 등을 통해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하지만 한반도 고유종을 포함한 해외에 반출된 한반도산 생물표본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관리 등이 미흡하여 향후 한반도산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함

※ 한반도산 생물종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종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색이 있는 생물종을 말함

※ 한반도 고유생물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만 존재했던 생물종을 말함

< 한반도산 생물표본의 해외반출 현황 조사 결과('08~'13) >

연도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가별 자료수(계)
일본	2,253점	6,667점	1,871점	1,578점	1,902점	30점	14,301점
미국	2,940점	-	-	-	-	-	2,940점
헝가리	2,433점	787점	3,018점	-	-	155점	6,393점
독일	-	-	327점	-	-	-	327점
영국	-	-	-	98점	-	-	98점
중국	-	-	-	-	2,029점	-	2,029점
스웨덴	-	-	-	-	547점	-	547점
러시아	-	-	-	-	3,280점	3,028점	6,308점
폴란드	-	-	-	-	-	748점	748점
연도별 자료수(계)	7,626점	7,454점	5,216점	1,676점	7,758점	3,961점	총계 33,691점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 한반도 고유생물종 표본의 해외반출 현황 조사 결과('08~'12)>

사업년도	분류군	종수	표본점수	소장기관
2008	관속식물	388	1,599	일본과학박물관식물표본관
			79	미국 하바드대학
2009	관속식물	2	2	헝가리자연사박물관
2010	척추동물 (어류)	21	120	일본큐슈대학 종합연구박물관
	곤충	23	26	일본큐슈대학 종합연구박물관
2011	곤충	33	38	홋카이도대학 종합박물관
2012	관속식물	2	2	중국북경식물원 표본관
	척추동물 (어류)	16	19	스웨덴 자연사박물관
합계		485	1,885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해외에서 상업화된 우리나라 주요 식물자원>

식물명	상품종류	판매국가	개당판매가격	비고
구상나무	95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25달러 ~ 400달러	펄프재, 정원수
		유럽(영국)	약 6파운드 ~ 37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12유로 ~ 19유로	
섬초롱꽃	9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4달러 ~ 13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2파운드 ~ 10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5유로 ~ 19유로	
한라개승마	3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0.5달러 ~ 13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3파운드 ~ 9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1유로 ~ 4유로	
한라비비추	94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1달러 ~ 35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3파운드 ~ 27파운드	
		유럽(아일랜드, 네덜란드)	약 4유로 ~ 14유로	
흑산도비비추	34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약 10달러 ~ 50달러	관상용
		유럽(영국)	약 5파운드 ~ 22파운드	
		유럽(네덜란드)	약 5유로 ~ 15유로	
미스키파일라	4	북미 및 유럽지역	약 23유로(80cm 크기 나무)	관상용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 (식물) 한라비비추 등 한반도 고유종 60종이 367개 품종으로 개량, 상품화되어 판매중임

(*) 나고야 의정서 관련 참고 자료 (관련기사 첨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12일 발효

-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의약품 등의 수익을 관련 기업이 원산지 국가와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까지 비준한 54개국은 유전 자원 제공국인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
- 선진국 가운데선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정도임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등 빠져 있음

▣ 대안

- 생물다양성 총회, 나고야 의정서 등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온힘을 다해 경쟁 하고 있고, 지난 12일 '나고야 의정서' 정식 발효로 인해 국내 산업계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높음
-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한반도산 생물표본과 한반도산 고유생물종 표본은 한반도 생물자원의 분포 변화 및 계통연구 등을 위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 한반도 생물표본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기관과 상호공동연구 활성화 또는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반출 한반도 생물종'에 대한 주권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1회성 조사가 아니라 해외에 반출된 생물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함

■ 재난 예·경보시설 언제나 제자리걸음

- '자동우량경보시설' 전체 국립공원 중 55%인 15곳에만 설치
- 산불방지'감시카메라'단 10개 국립공원에 32기가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공원에서의 재난에 대비하여 27개 국립공원에서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예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예경보시설 397개소
 - (자동우량경보시설 282개, 자동기상관측시설 34개, 문자전광판 81개) 중 지난해 12월까지 18%에 해당되는 71개소를 정비하였음. 2018년까지 80%에 해당되는 318개소 정비를 목표로 두고 있음
- 국립공원에서의 선제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차량 43대와 감시카메라 32기 등의 산불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 재난예경보시설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없는 12곳, 문자전광판이 없는 4곳에 시설을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것임
- 지난해 산불 발생 공원 현황을 보면, 다도해서부에서만 4차례 발생했고 총 8차례 발생한 곳 중 단 2개의 국립공원에만 산불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총 28개 국립공원 중 아직 미설치 상태인 18개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시급함

▣ 대안

- 국가 전체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설치되지 않는 국립공원에도 상당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총체적인 국가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본 안정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시급 함

1. 재난 예·경보시설 : 2003년이후로 설치 안 됨.

사무소	자동우량경보시설								AWS	문자 전광판
	지구수	계	감시 시설	통제 시설	우량관측 시설	경보 시설	중계 시설	수위관측 시설		
계	32개	282	16	25	81	146	11	3	39	89
지리산	6개	72	3	2	23	42	2	-	3	15
지리산북부	2개	21	1	1	5	13	1	-	1	6
지리산남부	5개	38	1	3	13	20	1	-	3	4
계룡산	-	-	-	-	-	-	-	-	2	1
한려해상	-	-	-	-	-	-	-	-	1	3
한려동부	-	-	-	-	-	-	-	-	1	1
설악산	3개	17	1	3	6	7	-	-	2	10
속리산	2개	19	1	2	4	9	1	2	2	2
내장산	-	-	-	-	-	-	-	-	1	3
내장산백암	1개	7	-	1	2	3	1	-	1	1
가야산	-	-	-	-	-	-	-	-	1	2
덕유산	2개	18	2	2	4	8	1	1	2	6
오대산	1개	11	1	1	2	6	1	-	3	5
태안해안	-	-	-	-	-	-	-	-	1	1
다도해해상	-	-	-	-	-	-	-	-	1	3
다도해서부	-	-	-	-	-	-	-	-	1	-
주왕산	1개	7	-	1	2	4	-	-	2	3
치악산	2개	14	1	2	4	7	-	-	1	5
월악산	3개	29	1	3	9	16	-	-	1	-
북한산	-	-	-	-	-	-	-	-	2	8
북한산도봉	1개	8	1	1	2	3	1	-	1	2
소백산	1개	7	1	1	2	3	-	-	1	2
소백산북부	1개	8	1	1	2	3	1	-	1	3
월출산	-	-	-	-	-	-	-	-	1	-
변산반도	1개	6	1	1	1	2	1	-	1	1
무등산	-	-	-	-	-	-	-	-	1	-
무등산동부	-	-	-	-	-	-	-	-	1	2

2. 산불

산불감시카메라

연도	공원명	카메라	모니터실	비고
계		32기	10개소	
2002	지리산	2기	1개소	
2002	설악산	3기	1개소	
2003	소백산	2기	1개소	
2004	속리산	2기	1개소	
2005	변산반도	2기	1개소	
2007	북한산	7기	1개소	
2007	북한산도봉	4기	1개소	
2008	소백산	2기	-	
2010	경주	2기	1개소	
2011	경주	2기	-	
2012	계룡산	2기	1개소	
2013	월악산	2기	1개소	

2013년 월별 산불 발생 현황

번호	발생일	시간	사무소	위 치	피해면적 (ha)	발생원인	비고
계				8건	4.82		
1	3.24(일)	15:40	다도해서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읍구리 선착장 뒤 야산	0.10	낙시꾼 실화	
2	5. 8(수)	11:05	설악산	강원 속초 설악동 마등령능선(세존봉 일원)	0.01	탐방객 실화	카메라
3	5. 8(수)	16:00	무등산	광주 동구 운림동 산 94번지(1수원지 상부)	0.20	탐방객 실화	
4	8.21(수)	18:00	다도해서부	전남 조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임야 18-1	0.70	낙시꾼 실화	
5	10.26(토)	15:00	다도해서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리 산2임	3.00	산나물채취 실화	
6	10.27(일)	11:00	북한산도봉	서울 도봉 도봉동 산29-89(보문감시초소 하단)	0.01	탐방객 실화	카메라
7	12.31(화)	09:30	한려동부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293	0.30	발두령소각	
8	12.31(화)	19:10	다도해서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관호마을 뒷산	0.50	탐방객 실화	

■ 그린워싱 대응 기반 구축 잘되고 있나?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제재조치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작 기업과 소비자들은 ‘그린워싱’ 이 뭔지 몰라

▣ 현황 및 문제점

- 그린워싱 시장 감시·검증 업무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지원
*(‘14. 1~) 환기환산법 일부 개정안(‘13. 10. 21 국회 발의) 입법 지원
- 그린워싱 의심제품(생활화학 등 중점관리 전략 품목군 대상) 조사·검증 시범사업추진 (‘14. 4~)
-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대국민 여론 환기 및 산업계 대응 유도 홍보·교육 활성화 (‘14. 9~)
- 환경인증마크는 국가공인이 있고 민간공인이 있음.



- 2013. 11 녹색위장제품(그린워싱) 실태조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현재 그린워싱은 국가공인인증마크나, 민간인증마크 상관없이 전부 관리대

상임. 하지만, 국가나 민간에서 주는 인증마크의 기준이 다르고, 소비자는 인증마크라는 것이 국가공인인지 민간인증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실태조사에 따르면 녹색위장에 대한 대응방안 중 ‘녹색위장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높게 나옴. 현행은 처벌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환경마크를 크게 국내법정마크, 민간자율마크, 국외인증마크로 나눌 수 있음. 현재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기준이 없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환경마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어지고 믿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안

- 녹색위장(그린워싱)의 개념이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낯설기 때문에 기업은 의식하지 못한 채 녹색위장 행위를 하고 있고 소비자는 녹색위장술에 현혹당하고 있는 실정임
- 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시행에 앞서 녹색위장(그린워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환경관련 표시·광고 지침 제공 및 기업체 대상 교육도 필요함

■ 길 잃어버린 녹색 매장의 존재이유

- 녹색매장은 임의 지정제 운영으로 참여의지가 있는 일부 유통기업만 참여하고 있음 (롯데마트 72개, 이마트 32개, 홈플러스 3개)

▣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목적

-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녹색유통망 확충 및 기능 확대 필요
- 친환경적인 유통매장 시설 및 운영으로 방문고객의 친환경소비 확산과 점포의 에너지 절약 유도

2.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 환경부장관은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

3. 지정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와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4. 지정기간 : 3년

5. 지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문제점

1. 실효성 없는 인센티브: 실제로 녹색매장 설치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

도마련

- 녹색매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해주고 있음. 대규모매장은 20%, 중소매장은 50%, 대규모매장같은 경우 평균 환경개선부담금을 1,800만원의 20%인 360만원 정도 세금감면을 받고, 중소매장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데 여기의 50%를 감면받고 있음.

2. 대형 유통매장 대상 녹색 매장 지정 확대방안이 절실함.

- 현재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임의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의지가 있는 유통기업만 참여하고 있어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 미흡함.
 - 유통기업 간 지정점포 수 편차가 과다함

▣ 대안

- 녹색매장 지정 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고 범국민 친환경소비 생활 확산을 위해 지정 확대 되어야 함
- 대형마트는 등장과 함께 급속한 성장으로 소비자와 제조사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매장 지정을 통해 유통사의 환경경영, 산업계의 환경경영 유도 정책이 필요 함
 - 향후 대형 유통매장 대상 녹색매장 지정 확대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임

<녹색매장 지정제도 주요 참여사>

구 분	점포 수	주요 참여사
대형매장	128	갤러리아백화점(5), 롯데백화점(16), 이마트(32) 롯데마트(72), 홈플러스(3)
중소형매장	88	초록마을(52), 무공네(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8), 골목슈퍼(7) 올가홀푸드(6), 삼성디지털프라자(5)
합 계	216	

<연도별 녹색매장 지정 현황>

구분	녹색매장 지정대상 수	합계	2011	2012	2013	2014.7
대형매장	506개	128(25%)	40	42	31	15
중소형매장	106,970개	88(0.08%)	-	22	66	0
합계		216	40	64	97	15

* 중소형 매장은 12년도 하반기부터 지정

<녹색매장 지정제도 주요 참여사>

구 분	점포 수	주요 참여사
대형매장	128	갤러리아백화점(5), 롯데백화점(16), 이마트(32) 롯데마트(72), 홈플러스(3)
중소형매장	88	초록마을(52), 무공네(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8), 골목슈퍼(7) 올가홀푸드(6), 삼성디지털프라자(5)
합 계	216	

■ 전임 강사 없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임 강사 확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내부 전문 강사가 없어 모든 교육을 전적으로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음
독립적 과정 개발 및 평가·환류 등 환경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개발 기능 미흡
- 인력개발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강사가 없다는 이유로 강사선정심의회 위원이 강사를 겸임하고 있기도 함
- 강의가 가장 많은 ‘환경부 법령’과 ‘환경부 정책 방향’ 과정은 환경부에서 사무관이 나와 출강하고 있으나, 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시기에 따라 매번 다른 강사에 의해 일회성 강의를 이루어져 심도 있는 강의는 물론이고 교육의 주도성과 일관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사선정심의회 위원 명단 및 출강 실적’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2년부터 강사선정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박모 교수가 강사로 직접 강의한 내역을 발견했음
- 전임강사 없이 운영하다 보니 강사가 개인 스케줄에 따라 바쁘다는 핑계로 강의 시간을 변경하기도 하고 예고 없이 휴강하는 경우도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한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없고 매번 다른 강사가 강의를 해서 심도 있는 강의는 물론 교육의 깊이와 일관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대안

-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이라는 개발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강사로만 구성된 강사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12~' 13년 강사선정심의회 위원 명단 및 출강 실적〉

○ 2012년도

소 속	직급(위)	성 명	출강회수 및 강의 과목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	김낙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현욱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최경희	
중앙대학교	부장	안영희	
환경부	인천광역시 환경협력관	송호석	
상명대학교	교수	박준우	1회(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정진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최병순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최석진	
KEI 환경전략연구본부	실장	김용건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회장	권기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과장	이준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과장	박형건	

○ 2013년도

소 속	직급(위)	성 명	출강회수 및 강의 과목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	박응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현욱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최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안영희	
공주대학교	교수	신호상	
상명대학교	교수	박준우	2회(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정책)
국립환경과학원	센터장	이원석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정용진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최석진	
KEI 환경전략연구본부	실장	김용건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회장	권기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과장	이동욱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과장	박형건	

■ '14년 환경정책방향, 환경법령 교과목 편성 현황

교과목	과정수	교육회수	교육계획 인원
환경정책방향	27	64	1,890명
환경법령	6	34	741명
합계	33	98	2,631명*

* 2013년 전체 수강인원 23,92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수강 인원의 11%

□ '12~' 13년 환경정책방향, 환경법령 교과목별 강사 현황

연도	연도	강사명	소속	출강 과정
환경정책방향 (강사 42명)	'12년	홍성균	환경부	먹는물검사기술인력
		손혜옥	“	실내환경관리
		이정용	“	환경행정실무(대기, 물)
		김혜송	“	수질TMS전문
		조성수	“	환경성평가 및 토지이용제도
		조순	“	도심하천관리
		김재현	“	기후변화적응정책
		김경록	“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마재정	“	환경행정입문
		민재홍	“	생활소음 및 소음지도작성
		박소영	“	환경행정실무(자연환경, 폐기물)
		송용권	“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
		신영수	“	환경행정입문
		염진걸	“	개인하수도관리
		윤남호	“	“
		정호경	“	실내환경관리
	윤남호	환경부	공공 및 개인하수도	
	이석록	“	기후대기정책	
	박찬용	“	물환경정책	
	신용태	“	“	
	홍성균	“	상하수도정책	
	염진걸	“	“	
	고미소	“	“	
	박종성	“	“	
	정석철	“	생태환경시설탐방	
	백동섭	“	“	
	심광현	“	생활환경관리	
	정의근	“	석면관리	
	김성중	“	유해화학물질관리	
	황상연	“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	
	조동욱	“	하천 및 호소녹조관리	
	이영채	“	화학물질오염원추적기법	
	오영민	“	환경행정실무(기후대기, 물)	
	송용권	“	연구사신규임용자	
	김송현	“	실내환경관리	
	현성호	“	“	
	최민지	“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	
	고덕규	“	토양지하수관리	
	안연섭	“	하수 및 분뇨처리	
	나길	“	하천 및 호소녹조관리	
	양명식	“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GCF대비	
	박상진	“	토양정화업기술요원	
환경법령 (강사 10명)	'12년	박광철	환경부	7·9급신규임용자
		김동진	“	토양 및 지하수관리
		김철기	“	공원관리
		윤봉희	“	토양 및 지하수관리
	'13년	안연광	환경부	7·9급신규임용자
		홍경진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양우근	“	생활환경관리
		정수성	“	화학물질오염원추적기법
		유성	“	환경성평가 및 토지이용
		임성재	“	토양지하수관리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연구원

- 비정규직 연구원 절반은 1년 안에 민간 기업으로 떠나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인력 구성 및 확보 불안정 : 팀장급 중간관리층 확보의 지연, 인력 구성의 불안정으로 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현 인원 33명 중 비정규직 (14명, 42%), 파견(7명, 22%) 인원이 약 64% 차지”이라고 스스로 그 한계를 지적하고 반성하고 있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건립(2010년 6월 15일) 이후 최근 4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기간제 계약직’ 인원이 매년 증가하여 무려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고용현황>

연도	총 인원	고용 안정			불안정		계약직 비율*
		정규직	전문계약직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	
2011년	33	9	3	-	14	7	42%
2012년	41	10	10	1	19		46%
2013년	44	10	9	2	23		52%
2014년	47	10	9	2	26		55%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14년 10월 현재 정규직 연구관 3명, 비정규직 연구원 26명 근무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30명의 중 절반이 넘는 17명(57%)이 계약기간인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사하고 이중의 절반인 8명은 6개월도 채 근무를 안했으며 심지어 방00 연구원은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함
(2012. 02. 27. ~03. 02)

	근무 기간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비정규직 수	8	9	8	5	30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환경부 고용 현황 >

구 분	총 인원	고용 안정			고용 불안정		계약직 비율*	
		정규직	전문 계약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		
환경부	655	587	2	17	34	15	5	
소속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3	21	-	1	1	-	39
	국립환경과학원	820	310	4	103	403	-	
	국립생물자원관	180	103	-	28	49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40	30	-	5	5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47	14	-	2	26	-	
	화학물질안전원	50	34	-	3	13	-	
	한강유역환경청	214	137	-	15	62	-	
	낙동강유역환경청	202	121	-	13	68	-	
	금강유역환경청	173	103	-	12	58	-	
	영산강유역환경청	210	101	-	20	89	-	
	수도권대기환경청	65	51	-	6	8	-	
	원주지방환경청	147	72	-	10	65	-	
	대구지방환경청	210	93	-	12	105	-	
	새만금지방환경청	93	67	-	10	16	-	
합계	2,474	1,257	4	240	968	-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2,688	1,878	-	138	672	-	34
	국립공원관리공단	2,519	1,118	-	134	1,267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5	231	10	-	1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41	180	45	52	-	64	
	국립생태원	277	177	-	-	96	4	
	합계	6,070	3,584	55	324	2,036	71	
외청	기상청	1,537	1,311	-	16	210	-	14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50	112	6	0	27	5	
	합계	1,687	1,423	6	16	237	5	
총 계	10,886	6,851	67	597	3,275	91	30	

<자료 환경부>

(*) 환경부 1처, 1청, 소속기관 14개, 산하기관 5개

▣ 대안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인데 전체 인원 47명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26명으로 55%나 되고 반수 이상이 비정규직 임

-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고 근속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건 심각한 문제 임

- 채용단계에서 확실한 근무 의지를 파악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근로 환경 개선이나, 근로 의식 고취, 사명감 부여 등 비정규직 인원의 무분별한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목 차

<서 언>

I.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91
II.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92
1. 10월 8일(수)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92
2. 10월 13일(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93
3. 10월 20일(월)·21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94
III. 기관별 국정감사 정책 질의	97
1. 고용노동부	97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111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1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 서 언

2014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국정감사는 대상기관만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긴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일정이 뒤늦게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정감사 준비 단계부터 일부 혼선을 빚게 되었고, 고용노동부의 경우 대기업 총수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대치도 있었지만, 그러한 갈등과는 무관하게 ‘민생국감·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점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산 기업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체당금 부정수급 문제, 늘어나는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문제,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률 제고 문제 그리고 국내 산업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향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는 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 10월 8일(수)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1. 최근 3년간 체당금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유명무실, 실효적 있는 제도 개선 주문
→ 체당금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을 요구
★ 체당금: 도산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2.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단기순환 인력 정책으로서의 한계 도달 지적
→ 현재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외국인력을 포괄하는 중·장기 정책의 필요성 제기
3.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 구제 신청 및 구제명령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
4.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률이 전체 사업장 대비 0.2%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사항에 대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토록 함
5.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여성참여 비율 저조
→ 매년 최하위권임을 지적하고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

6. 산재발생 시 근로자들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실제 산재급여를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보험 심사업무에도 국선노무사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 장관은 인식을 같이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함
7.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 업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적
→ 먼저 감독 대상 업체 수부터 대폭 늘릴 것을 주문함

■ 10월 13일(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알바신고센터를 71개소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상담종결 건수 및 신고사건 접수 건수 등 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
→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센터를 찾아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요구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며, 경남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은 전국 최저임을 지적
→ 이행률 제고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주문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여성고용 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
→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제도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을 높일 것

을 주문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낮은 재심사 취소율이 소극적인 심사관행 탓은 아닌지 짚어보면서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른 실질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사 당부
5. 중앙노동위원회의 단독심판제도 활용률이 평균 22%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단독심판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 제기
6.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심판담당 위원이 전체 위원을 통틀어 19%에 해당하지만 해당 심판 사건 업무가 과중함을 지적
→ 공익위원 간의 담당업무 구분을 허물거나, 심판담당 공익위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제시

■ 10월 20일(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1.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시행 첫 해를 맞이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일부에서는 아직 3% 비율을 충족 못시키고 있음을 지적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
 2. 2013년 한 해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5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실태 지적
→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고용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를 주문

3.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외국인고용(EPS)관리 스마트폰 앱이 서비스 개시 1년간 한국어만 지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
→ 최소한 영어 지원이라도 하는 등 사후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요구
4. 한국잡월드에 대해 직원안전교육은 물론 수탁협력업체 330명의 상주인력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
→ 동시에 한국잡월드의 전시·체험 콘텐츠 중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관을 키울 수 있는 유망직종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해 줄 것을 당부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비용으로 지난 4년간 97억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기업은 매년 80% 이상임을 지적
→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
6. 노사발전재단의 지역 사무소 중 동일 지역 내에서 사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 사무소 통합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

■ 10월 21일(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지난 9월부터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기능장 실기 시험 부정과 관련하여 시험 비리의 원인은 인력공단의 사업을 폴리텍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
→ 인력공단과 폴리텍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및 인력 조정을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2.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가 지난 3년 동안 약 6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가입 사업장 중 96% 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임을 지적

- 근로복지공단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
- 3.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모국으로 귀국한 후에 발생하는 산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
 - 고용 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산재처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알려나가 줄 것을 당부
- 4.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실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수료 후 취업한 학생 중 61%가 직장생활 1년도 못 버티고 있음을 지적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외국인 고용의사가 있는 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하여 교육 내용이 외국인 고용하는 단계부터 외국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문
- 6. 근로복지공단의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이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된 점을 지적
 - 중장기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
-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증빙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을 줄여나가도록 요구

IV. 기관별 국정감사 질의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

■ 최근 3년간 체당금 부정수급 급증

- 제구실 못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 체당금 지급 위한 사업주부담금은 체납되고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 체당금이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음
-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민사절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음. 기금의 주요 재원은 사업주부담금으로 2014년의 경우 사업장 보수총액의 1천분의 0.8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 문제는 도산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매년 2천3백억원 정도의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은 급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액 반환율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임
-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총 4건의 지급만 이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음
- 그리고 체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주의 부담금(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체당금 관리·감독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체당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함

▣ 대안

-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매년 2천5백곳 정도의 사업장이 도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약 93%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나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도산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매년 2천3백억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체당금이 위장폐업, 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체당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성실한 사업주는 물론 결국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됨
- 체당금 부정수급 급증문제며, 유명무실해진 신고포상금제도 그리고 사업주부담금 체납문제까지 체당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에 대한 제도 점검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함

[기업 도산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등사실인정			재판상도산		
	사업체	인원	금액	사업체	인원	금액	사업체	인원	금액
'14. 7	1,584	28,156	141,214	1,327	18,194	87,593	257	9,962	53,621
2013	2,665	44,741	223,919	2,266	32,229	151,187	399	12,512	72,732
2012	2,514	48,650	232,319	2,123	32,926	151,388	391	15,724	80,931
2011	2,541	50,230	235,551	2,207	38,733	172,680	334	11,497	62,871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개소, 명, 원)

연도	부정수급건수		부정수급액	반환액	반환률
	사업장수	근로자수			
계	88	561	2,288,349,530	902,576,250	39.44%
2014. 7	10	171	863,933,980	93,469,470	10.82%
2013	45	311	1,214,913,260	649,286,730	53.44%
2012	26	52	138,466,180	90,033,940	65.02%
2011	7	27	71,036,110	69,786,110	98.24%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원)

연도	포상금 지급내역	
	지급건수	지급액
계	4	33,938,200
2014. 8	해당없음	
2013	3	23,944,200
2012	해당없음	
2011	1	9,994,000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체납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4. 7월		2013년		2012년		2011년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액
계	497,602	24,232	428,341	21,184	390,742	16,312	384,399	12,127

■ 고용허가제 도입 10년 단기순환 인력정책으로서의 한계 봉착

- 사업장 변경 제한, 재고되어야
- 전체 외국 인력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17일자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었지만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평가는 각 기 다른 것으로 보임
- 송출비리가 사라졌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인력수급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기형적인 장기 순환 정책과 외국인근로자를 저임금으로 활용·착취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 이동 금지라는 제도의 부실함으로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를 마련하였는데 정부 측에 우호적인 단체들과 일부 학자들의 의견만 갖고 모양새만 갖췄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함

▣ 대안

-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보다 더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함
- 이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업장 이동이 재고되어야 할 시점임으로 무엇보다 저숙련 외국인력의 단기순환 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전문인력, 숙련인력 등 전체 외국 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 됨

■ 부당해고 등에 따른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해마다 증가

- 이행강제금 부과 2011년 29억원에서 2013년 8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사업주 교육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구제명령결정이 내려질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됨
-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구제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구제명령결정이 내려지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동시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고발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대안

-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중요한 것은 부당해고를 사전에 예방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의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

[부당해고 등에 따른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결정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건수	구제명령결정건수
2014. 7	8,166	692
2013	12,805	1,204
2012	11,444	1,106
2011	10,848	1,019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2014. 7	315	5,183
2013	477	8,222
2012	422	5,180
2011	267	2,942

[부당해고 고발 현황]

(단위 : 건)

연도	고발건수
2014. 7	26
2013	32
2012	23
2011	26

■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률 저조

- 360만 사업장 중 감독관은 약 5천명으로 위촉률은 0.2%에도 못 미쳐
-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49.3%에 달하지만 500인 미만에서는 0.12%에 불과
- 위촉된 감독관의 75% 이상은 남성

▣ 현황 및 문제점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도에 도입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독관의 주요업무는 당해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 고용평등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입회,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등이 있음
- 2001년도에 도입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0.1%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위촉된 감독관의 성비 구성에 있어서도 남성의 비율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대안

- 고용노동부는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함

[2012년 규모별 전체 사업장수 대비 위촉 사업장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000인 이상	500~999인	300~499인	100~299인	100인 미만
전체 사업장수	3,602,476	543	1,083	1,717	12,987	3,586,146
위촉 사업장수	4,958	334	467	518	1,912	1,727
위촉률 (%)	0.14	61.5	43.1	30.2	14.7	0.05

[성별 위촉현황]

(단위: 명)

연도	위촉사업장수	계	남	여(비율)
2014. 6.	4,462	4,841	3,649	1,192 (24.6%)
2013	4,670	5,043	3,804	1,239 (24.6%)
2012	4,955	4,958	3,746	1,212 (24.4%)
2011	4,404	4,765	3,614	1,151 (24.2%)

■ 남·고용평등,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그러나...

-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 비율은 매년 하위권
- 2014년 43개 정부부처 중 40위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여성참여 비율이 매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의 경우 위촉직 여성 비율은 9.3%(22.3%)로 전체 38개 정부부처 중 36위, 2011년의 경우 17.6%(24.8%)로 40개중 30위, 2012년의 경우 17.2%(25.7%)로 40개중 32위, 2013년의 경우 16.9%(27.7%)로 41개중 37위, 2014년의 경우 16.1%(29.6%)로 43개중 40위를 기록하고 있음
- ※ 괄호 속 비율은 해당연도 여성비율 평균 수치를 나타냄

[정부 부처별 정부위원회(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단위 : %)

연도	정부부처 전체 평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순위
2010	22.3	9.3	36/38
2011	24.8	17.6	30/40
2012	25.7	17.2	32/40
2013	27.7	16.9	37/41
2014	29.6	16.1	40/43

<자료출처: 여성가족부(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 고용노동부의 경우 위촉직 여성 위원의 비율은 매년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정부부처 전체의 여성참여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201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을 중요과제로 삼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여성 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모순된 처사라고 할 수 있음

▣ 대안

-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다소 모순된 처사 임
 - 위원회 구성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산재사건 신청에도 국선노무사 도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선노무사제도는 2가지 형태로 도입되어 있음
- 첫째로 사회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부터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
(2012년 103명, 2013년 224명, 2014년 457명이 활동 중에 있음)
- 둘째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회사의 부도 등으로 임금 등을 못 받는 경우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12년 117명, 2013년 247명, 2014년 661명이 활동 중에 있음)
- 고용노동부는 국선노무사 선임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범위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대안

-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산재발생시 근로자들에게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산재가 발생해도 피해근로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사건 신청에도 국선노무사 도입이 필요함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 감독 대상 업체 수는 오히려 ↓

- 위반 건수 2011년 840건, 2012년 771건, 2013년 1,423건으로 증가
- 감독업체수는 2011년 23,760곳, 2012년 21,719곳, 2013년 13,280곳으로 줄어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 위반사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지급, 주지 의무 위반,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서류 미제출 등이 있음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가 가능함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접수건수	위반건수	조치내역			
			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2014. 6월	624	862	862	400	461	1
2013년	1,101	1,423	1,423	708	715	-
2012년	620	771	771	408	360	3
2011년	660	840	840	396	442	2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조치 결과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조치 결과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감독 업체수	위반 업체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감독업체수 대비 위반율	조치내역 건수			
					계	시정 조치	사법 처리	과태료
2014. 6	5,661	722	767	13.5%	767	756	10	1
2013	13,280	5,467	6,081	45.8%	6,081	6,063	12	6
2012	21,719	8,093	9,051	41.7%	9,051	9,039	6	6
2011	23,760	13,167	14,718	61.9%	14,718	14,707	11	-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자들의 신고사건 접수 및 위반건수, 그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감독한 업체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대안

- 논리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면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신고 건수는 줄어들게 될 것임
-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역행하고 있으며, 추후 지도감독을 충분히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감사]**

■ 서울지방고용청, 알바신고센터 이용을 저조

- 연소(청소년) 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2014. 5월까지 여름·겨울방학 3회에 걸쳐 743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였음
 - 496개소의 위반업체가 적발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위반 1,045건, 최저임금법 위반 293건 등 1,612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함

- 서울청은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알바신고센터 7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센터는 상담교사 등이 노동관계법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나 지방청에 신고하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이 센터와 연계하여 피해 구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 13개소였던 알바신고센터를 2013년 69개소로 증설하였고, 2014년 6월 서울 권역 거점 알바신고센터로 ‘한국청소년연맹’과 ‘꿈꾸는 다락방’을 추가 선정하였음

<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

상담종결 건수			신고사건 접수 건수		
2012년	2013년	2014.9월	2012년	2013년	2014.9월
2	253	2	5	11	1

- 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한 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센터를 보다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함

▣ 대안

-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센터를 찾아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 되면 센터 운영 실적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임
-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 측과의 협조 체계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흡

- 경남지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전국 최저

▣ 현황 및 문제점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2013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율은 전국 평균 81.7%이나 부산고용노동청 관내 사업장은 66.4%, 특히 경남지역은 57.4%로 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율 >

구 분	대상 사업장	의무 이행				의무 미이행
		소계	설치(A)	시설 위탁(B)	보육수당	
합 계	107	71(66.4)	42(39.3)	10	19	36
부 산	36	26(72.2)	13(36.1)	9	4	10
울 산	24	18(75)	9(37.5)	1	8	6
경 남	47	27(57.4)	20(42.6)	0	7	20
전 국	1,074	877(81.7)	534(49.7)	101	242	197

- 경남지역은 물론 부산청 관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미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 나가야 함

▣ 대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만큼 관내 사업장의 의무이행률 제고에 노력해야 함

■ 대전지방고용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취지 무색

- 도입 취지 고려하여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 높여 나가야

▣ 현황 및 문제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50인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로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60%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14년 대전청의 여성고용 비율은 33.5%로 전국대비 3.5% 낮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15.0%로 전국대비 3.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근로자현황('14년), 단위:%>

구분	관서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대전청	35.1	36.1	34.5	35.3	33.8	33.8	33.5
	전국평균	35.0	35.1	34.2	34.87	35.2	32.7	37.0
여성관리자 비율	대전청	14.9	16.7	14.0	15.2	15.7	15.1	15.0
	전국평균	13.2	14.8	16.1	16.1	16.6	15.2	18.3

-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제도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대안

-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여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동종업종에 비해 여성고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어나가야 함
-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인사 관행 등을 개선하는 등 동 제도가 자극제가 되어 모든 기관과 기업에서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낮은 재심사 취소율, 소극적인 심사관행 탓?

- 매년 10% 남짓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의 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취소재결은 원처분을 행한 기관의 장을 기속하게 됨

<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청 구 (아월포함)	처 리					진행중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2014.9월말	138 (157)	138 (100.0)	15 (10.9)	116 (84.1)	1 (0.7)	6 (4.3)	19
2013년	193 (201)	182 (100.0)	16 (8.8)	157 (86.3)	7 (3.8)	2 (1.1)	19
2012년	174 (195)	187 (100.0)	23 (12.3)	155 (82.9)	7 (3.7)	2 (1.1)	8
2011년	277 (286)	265 (100.0)	41 (15.4)	220 (83.0)	2 (0.8)	2 (0.8)	21

※ ()는 비율임.

- 위원회의 취소율은 14년 9월말 기준으로 10.9%로 작년 8.8%에 비해 조금은 높아졌으나 아직 낮은 편이며 이는 원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극적 무사 안일한 심사관행으로 보여짐

▣ 대안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비록 작은 규모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재결을 통한 취소율을 보면 2011년 15.4%, 2012년 12.3%, 2013년 8.8%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 원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극적 무사 안일한 심사관행을 개선해야 함

■ 단독심판제도 활용률 평균 22%에 그쳐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상자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등에 대해 초심을 하고, 초심의 판정에 불복한 재심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다루는 2심제임
-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의 판정 및 구제명령 등을 다룸
- ‘단독심판제도’는 당사자가 합의로 신청한 경우나 기간 도과 등 신청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공익위원 1인이 심판회의를 진행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신설한 제도임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단독심판제도를 도입했으나 개최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 (*) 2007년 1월 제도 도입
 - (*) 개최 요건 : ▲신청기간 도과 등 신청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 노동위원회 단독 심판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08	평균
심판사건 처리 건수	11,667	11,418	11,352	12,769	8,509	22.4%
단독심판건수	1,989	2,760	3,048	3,164	1,616	
단독 심판율	17.0%	24.2%	26.8%	24.8%	19.0%	

- 심판 사건의 판정 지연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행이 요구됨
- 단독심판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권리 구제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독심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예로는 1)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대표노조 결정사건, 2)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이 있음

▣ 대안

- 판정 지연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신속한 판결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심판의 활용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공익위원 중 심판담당 위원 19%가 전체 사건의 87% 담당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표 위원의 경우 조정·심판에 구분 없이 참석이 가능하나, 공익위원의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8조에 따라 ‘심판담당’, ‘조정담당’과 ‘차별시정담당’으로 구분되어 위촉됨.

<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2014. 06) >

구분	현 원						
	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소계	심판	조정	차별
계	1,731	515	515	701	331	200	170
중노위	168	50	50	68	32	19	17
지노위	1,563	465	465	633	299	181	153

- 현재 공익위원 중 심판담당 위원은 331명으로, 전체 위원 중 19%를 차지함 심판담당 위원이 참석하는 ‘심판’ 사건은 노동위원회의 전체 사건 중 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2013년 전체 접수사건 16542건 중 심판 업무 14323건, 복수노조 업무 1358건, 조정 업무 762건, 차별 시정 업무 99건 임
- 심판 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한명씩 심문회의에 참여하면 되지만 공익위원은 총 3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적은 수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공익위원들의 참여 저조로 심판사건의 처리 지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위원 간의 담당업무 구분을 없애 모든 공익위원이 심판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심판 담당 공익

위원의 수를 다른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늘려 회의 개최 빈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기준 >1)

심판 및 차별시정담당	조정담당공익위원	공통점	차이점
①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①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공인된 대학, 부교수 이상	(심판)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조정) 전공 무관
②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②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모두 동일	-
③노동관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③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노동관계 업무종사한 공무원	(심판) 7년 이상 2급 이상
			(조정) 3년 이상 3급 이상
④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공익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심판) 전문적 지식 경험
			(조정) 사회적 덕망

▣ 대안

- 신속한 판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익위원 간의 담당업무 구분을 없애 모든 공익위원이 심판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심판 담당 공익위원의 수를 다른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늘려 회의 개최 빈도를 늘리는 것이 필요가 있음

1) 노동위원회법 제8조 (공익위원회 자격기준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감사]

■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시행 첫 해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2013년 5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가 시행됨. 2013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음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되며 청년 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 일부를 청년층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지난 9월 2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림
 - *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논리였음
-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3% 의무 할당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시행 첫 해인만큼 모범적으로 채용에 앞장 서야 함

▣ 대안

-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함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현황>

기관명	정원 (A)	신규채용	청년채용 (B)	비율 (B/A, %)
근로복지공단	5,369	472	288	5.4
건설근로자공제회	92	7	5	5.4
노사발전재단	156	8	5	3.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748	39	18	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04	22	4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5	14	9	16.4
한국잡월드	48	0	0	0.0
한국고용정보원	217	5	2	0.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70	76	57	4.2
한국산업인력공단	1,108	75	50	4.5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8	30	11	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44	23	19	3.0

○ 권고사항이었던 2013년의 경우 4곳에서 청년고용률이 3%를 밑돌았음

<2014. 9 현재 산하기관별 청년고용률>

기관명	정원(명)	청년 채용(명)	비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64	29	4.4%
한국고용정보원	216	11	4.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6	12	18.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758	20	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12	5	1.2%
노사발전재단	156	1	0.6%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8	15	4.2%
한국잡월드	48	1	2.1%
건설근로자공제회	97	1	1.0%

■ 지난해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고용을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으로 때워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고용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임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주의 경우 2012~2013년에는 2.5%, 2014년에는 2.7% 이상을 의무 고용하여야 함
- 지난 해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율 2.5%를 달성한 곳은 단 5개 기업 뿐이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29곳에 달함
 - ★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였더라도 연중 의무고용율이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발생하게 됨
-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임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바, 장애인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대안

-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무 고용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고용장려금 제도는 큰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음
- 대대적인 제도의 손질과 함께 장애인 인식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30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순위	기업집단명	계열회사수	장애인고용율 (‘13년 말 기준)	부담금액	
				‘13년	‘14년
1	삼성	76	1.87	14,719	15,221
2	현대자동차	57	2.73	3,516	4,086
3	에스케이	81	0.89	8,053	9,316
4	엘지	61	1.55	13,149	13,206
5	롯데	77	2.53	3,409	3,833
6	포스코	52	1.97	1,994	2,425
7	현대중공업	26	2.87	366	485
8	지에스	79	0.96	4,112	4,556
9	한진	45	1.07	2,920	3,748
10	한화	49	1.58	2,972	2,714
11	케이티	54	1.99	2,560	2,936
12	두산	25	2.13	900	1,175
13	에스티엑스	21	2.19	467	501
14	씨제이	82	1.96	2,818	3,166
15	신세계	27	1.51	2,756	1,760
16	엘에스	49	1.53	897	1,063
17	동부	61	1.17	2,300	2,579
18	금호아시아나	24	1.6	1,485	1,752
19	대우조선해양	20	4.81	300	425
20	대림	19	0.88	1,108	1,318
21	현대	20	0.89	988	1,062
22	부영	16	0.6	184	198
23	에쓰오일	2	1.71	109	137
24	오씨아이	22	1.39	701	698
25	현대백화점	35	1.2	875	1,583
26	효성	48	1.68	1,128	1,368
27	대우건설	16	1.22	724	823
28	한국지엠	3	2.91	0	0
29	동국제강	15	1.88	214	238
30	영풍	23	1.52	398	367

■ 외국인고용관리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시 1년간 한국어만 지원

- 개발비 1억1천만원 외국인고용관리 앱, 외국어 없이 한국어로만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련 정보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외국인고용관리 모바일 앱이 서비스 개시 1년이 지나도록 외국어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의 홈페이지는 2004년 8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311,837명의 회원이 가입하였고 그 중 일평균 41,602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15개국의 외국어가 지원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문제는 홈페이지의 서비스 수준에 비해 모바일 앱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지난 1년간 외국어 지원 없이 한국어로만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2013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5개월간 1억1천만원을 들여 개발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됨

▣ 대안

- 외국인근로자가 자신들의 모국어로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처리 현황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의 개선과 사후관리가 시급함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앱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개발만 하고 방치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잡월드, 재난·재해사고 대비에만 치우친 직원안전교육

- 초동대응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지교육부터 강화해 나가야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잡월드는 2012년 5월 개관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19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하였으며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한 달에 평균 세 번 꼴로 관람객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 잡월드 관람객 사고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09월
발생 건수	25	33	9
월 평균	3.33 (7.5개월)	2.75 (12개월)	1 (9개월)

<상시 안전 요원 현황>

담당업무	총인원 (계)	안전요원(상시)		기타
		정규직	계약직	
기계/소방	26	3	-	-
보안/경비		-	-	10 *경비용역
안내/안전요원		-	-	13 *전시체험관위탁

* 안내/안전요원: 상시 안전요원(안전관리사 1명, 체험관 안내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12명)

이외에도 체험실 별로 보조적으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배치하여 유동적으로 인력 운용 중

- 지난 3년간 직원안전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방공훈련,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대형 재난·재해 및 시설 내 안전사고 대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직원 안전 교육>

날짜	교육명	참여인원
12. 10. 5	산업안전보건교육	48
12. 11. 2	소방교육	48
13. 4. 19	산업안전보건교육	38
13. 5. 7	민방공훈련	44
13. 8. 21	민방공훈련	46
14. 3. 14	민방공훈련	46
14. 4. 25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4
14. 5. 30	체험관 비상대비 합동훈련	120
14. 6. 20	민방공훈련	43
14. 7. 1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2
14. 8. 20	민방공훈련	48

▣ 대안

- 의무실에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주된 관람객이 안전에 대한 인지가 낮고 위험사항에 노출이 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인 만큼 산업재해, 민방공훈련과 같은 재난·재해 및 시설 내 안전사고 대비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고에 초동대응을 위한 응급처치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함
- 동시에 한국잡월드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시·체험관 운영업체 등 7개 협력업체 330명의 상주 인력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직업관 키울 수 있는 유망직종 관련 프로그램 부족

- 교육프로그램 및 안내 브로셔에 유망 직업정보 제공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잡월드 연령별(청소년) 이용현황 :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체험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중학생 미만	49,228	104,456	62,555
중1	48,292	86,220	52,891
중2	49,169	77,191	40,364
중3	62,126	81,722	35,925
고1	34,042	44,674	23,122
고2	23,002	23,374	13,664
고3	3,898	4,656	3,353
확인 불가*	170	1,333	2,947
합계	269,927	423,626	234,832

- 직업세계관 (11명의 드림코치가 안내를 돕고 있음)

- 유망직종 소개 : 미래 유망직종을 6개 분야(환경 기술/나노기술/생명공학/문화예술/정보통신/항공우주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3개씩(과거, 현재, 미래), 총 18개의 모니터에서 3분짜리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 통계로 보는 직업 세상 : 한국정보원과 통계청에서 매년 자료를 제공받아 일자리 수요 등에 관한 내용을 벽면을 이용하여 안내함.
- 미래직업신문 : 2030년 오늘의 직업신문을 가상하여 미래의 유망직업을 사인 패널과 영상으로 소개. 2012년 개관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음 (신문 형태로 크게 전시)

▣ 대안

- 현재의 직업체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유망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필요

■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비용 2.3배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6%만 줄어
 - 지난4년간 경영컨설팅에 97억원 사용, 영업손실 기업은 매년 80%이상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4년간 97억2천만원의 비용으로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을 했지만, 사회적기업의 80% 이상이 매년 영업손실을 겪고 있음 집행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비함
- 경영컨설팅은 기업의 인사, 회계, 법률 등의 경영코칭을 통해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과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성을 돕는 것임
-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은 △2011년(542개소, 85.9%), △2012년(620개소, 83.3%)로 매년 80%가 넘는 기업이 경영적자를 겪고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비용은 △2011년(12억2천8백만원), △2012년(28억3천만원), △2013년(30억7천8백만원), △2014년(25억8천4백만원)으로 지난 4년간 97억2천1백만원이 쓰여짐
- 2011년 대비 2012년 사회적기업의 영업 손실 비율은 2.6%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경영컨설팅 비용은 2.3배가 늘어났음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및 경영컨설팅 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

연도	경영컨설팅 비용	영업이익		영업손실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1	1,228	89	14.1	542	85.9
2012	2,830	124	16.7	620	83.3
2013	3,078	해당연도 사회적 기업 평가분석은 다음해 하반기에 완료			
2014	2,584				
합계	9,721				

▣ 대안

- 자립기반이 약한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은 반드시 필요 함
- 컨설팅 지원이 영업이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 선행

■ 노사발전재단, 동일 지역 내 사업별로 센터를 분리해서 운영?

- 센터통합으로 불편함 해소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과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은 사업장이 스스로 고용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진단 후 차별개선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이 이루어짐
 -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6개 지역(서울, 부천, 대전, 대구, 창원, 전주) 사무소에서 운영 중임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운영사업은 40대 이상 전직 희망자 및 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제2인생설계, 재취업, 창업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사회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9개 지역(서울마포, 서울강남, 수원, 인천, 원주, 대구, 부산, 전주, 제주)사무소에서 운영 중임
- 문제는 서울, 대구, 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 내에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으며, 사업별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대안

- 동일지역 내에서는 지역사무소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노사발전재단 지역별 사무소 현황>

연번	지역별	현행		
		지역사무소	소재지	인원
합계		합계	15개	105
		차일단	6개	19
		중장년 전직	9개	86
1	서울	차일단	마포	3
		중장년 전직	마포	17
			강남	9
2	수원	중장년 전직	수원	12
3	부천	차일단	부천	4
4	인천	중장년 전직	인천	11
5	강원	중장년 전직	원주	2
6	대전	차일단	대전	3
7	대구	차일단	대구	3
		중장년 전직		7
8	경남	차일단	창원	3
9	부산	중장년 전직	부산	18
10	전주	차일단	전주	3
		중장년 전직		7
11	제주	중장년 전직	제주	3

■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

-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폴리텍 비율은 매년 50%에 육박
- 최근 4년간 기능장 감독자 소속 중 폴리텍이 11.6%로 최대
- 인력공단의 사업을 폴리텍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바뀌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말 JTBC 단독으로 자동차정비 기능장 시험 부정에 대해 보도하였고,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 보도 내용은 자동차정비 기능장 시험에 폴리텍대학 및 산업인력공단의 관계자가 개입하여 폴리텍대학 학생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시험지를 유출 하는 등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임
-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14. 10. 6 ~10. 31, 4주간)하고 있는 만큼 추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였음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주의 경우 2012~2013년에는 2.5%, 2014년에는 2.7% 이상을 의무 고용하여야 함
- 그럼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엇그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장 시험 합격자를 발표함. 명분은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음
- 문제는 단순히 일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인력공단이 폴리텍에 사업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
- 최근 4년 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폴리텍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6.7%에 달하며, 최근 4년 간 기능장 시험감독자 소속도 폴리텍 비율이 11.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진 인원 분포에서도 폴리텍 관련 인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대안

- 공단과 폴리텍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및 인력 조정도 필요한 만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지난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시험회차	시험장소		한국폴리텍
		전체	한국폴리텍	시험장소 비율
2011	49회	123	54	43.9
	50회	121	55	45.5
2012	51회	144	70	48.6
	52회	151	70	46.4
2013	53회	153	75	49.0
	54회	154	76	49.4
2014	55회	159	72	45.3
	56회	154	70	45.5

[자료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난 4년간 기능장 시험감독자 소속 현황]

(단위 : 명, %)

소속	인원 수	비율
한국폴리텍대학	534	11.6
서울메트로	82	1.8
인력개발원	54	1.2
기아자동차	49	1.1
도화기계공고	38	0.8
포스코 광양제철	33	0.7

[자료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개발진 인원 소속 분포]

(단위 : 명, %)

개발진 유형	인원 수		한국폴리텍
	전체	한국폴리텍	비율
PM	267	184	68.9
교육훈련전문가1	276	152	55.1
교육훈련전문가2	276	89	32.2
외부전문가	276	12	4.3

[자료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 끊어질 않고 있어

- 미가입 사업장의 96%가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 현황 및 문제점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강제적용 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

(단위 : 건, 원)

연도	지급건수	보험급여 지급액
2011	3,347	83,174,096,430
2012	3,612	76,078,255,500
2013	3,373	63,667,753,980
2014. 7	1,680	15,372,473,960
합계	12,012	238,292,579,87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했을 때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미가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안

- 지금의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결국 미가입 사업장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와 국고의 손실로 이어지게 됨
- 무엇보다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이 사업주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입률 제고 방안에 노력해야 함

<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현황 >

(단위 : 개소)

연도	미가입사업장
2011	38,162
2012	77,836
2013	21,997
2014. 7	21,586
합계	210,195

<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미가입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총합계
계	38,162	77,836	71,200	22,997	210,195
10인 미만	36,583 (95.9)	75,709 (97.3)	69,561 (97.7)	20,778 (90.4)	202,631 (96.4)
10~29인	1,373 (3.6)	1,905 (2.4)	1,482 (2.1)	2,095 (9.1)	6,855 (3.3)
30~49인	130 (0.3)	135 (0.2)	94 (0.1)	76 (0.3)	435 (0.2)
50~99인	57 (0.1)	66 (0.1)	46 (0.1)	35 (0.2)	204 (0.1)
100~199인	14 (0.03)	14 (0.02)	14 (0.0)	7 (0.03)	49 (0.02)
200~299인	2 (0.01)	5 (0.01)	3 (0.0)	3 (0.01)	13 (0.01)
300인 이상	3 (0.01)	2 (0.0)	0 (0.0)	3 (0.01)	8 (0.0)

※ 자료추출 기준 :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미가입 상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성립시킨 사업장 현황

■ 외국인근로자, 귀국하면 산재는 끝?

- 귀국 이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알려나가야

▣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인근로자 연도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2004년~2014. 7월)>

<단위: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7월
재해자수	6,509	6,404	5,586	3,296
사망자수	103	106	88	52

<내국인 및 외국인 산재처리 현황 비교>

<단위: 건, %>

	신청			승인			승인률		
	내국인	외국인	전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2011	97,864	6,862	104,726	86,783	6,509	93,292	88.68	94.86	89.08
2012	96,541	6,751	103,292	85,852	6,404	92,256	88.93	94.86	89.32
2013	96,432	5,890	102,322	86,238	5,586	91,824	89.43	94.84	89.74
2014. 6	45,938	2,833	48,771	41,163	2,661	43,824	89.61	93.93	89.86

- 외국인근로자 산재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3년 산재승인율은 94.8%로서 내국인 89.4%에 비해 5.4% 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문제는 산재처리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만을 집계하고 있으며 모국으로 귀국한 이후의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으로 귀국 후에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재정적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산재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대안

-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재처리를 위해 무조건적인 입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으로 귀국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귀국 이후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질병에 대해 산재처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61%, 직장생활 1년도 못 버텨

… 정부의 맞춤형 관리 절실

- 지난 3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아카데미 출신’
학교밖 청소년 157명 취업, 이중 96명 1년 안에 그만둬
- 2011년부터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입학 390명, 수료 271명, 취업 157명, 1년 이상 근무 61명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맞춤형 훈련 실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 문제는 취업사관학교 수료생 가운데 157명 취업생 중 61%인 96명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것임. 2011년 ~ 12년의 경우 의무관리 기관 수료 후 1년이 지나 실태 파악도 어려움
- 공단에서도 위기청소년의 특성상 사회적응력 및 끈기 부족 등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선 방안은 없는 실정임
- 더욱이 공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사관학교의 경우 학교 밖 위기청소년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한 곳임. 이처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의 경우 제도권 안팎에서 모두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 취업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교 밖 위기청소년
- (**) 참고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 초/중/고 학생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만8188명, 만 20세 이상 24세 미만 파악 불가.

□ 대안

- 교육과정의 내실화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 부분에도 신경 써야 함

<교육받은 청소년 수, 취업한 수(최근 3년간)>

연도	기관명	모집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1년 이상 근무한 수 ¹⁾
2013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50	35	34(조기취업)	11
	광양만 HRD센터	30	21	15(조기취업)	4
	춘천YMCA	22	19	9	3
	중앙종합직업전문학교	30	24	12	10
	가톨릭푸름터	20	7	4	1
2012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50	43	41	28
	광양만 HRD센터	31	21	13	1
	김해YMCA	21	14	8	0
	춘천YMCA	25	18	12	0
2011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43	27	27	2
	광양만 HRD센터	33	22	16	1
	김해YMCA	35	20	15	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취업사관학교는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임

¹⁾ 취업 후 9개월 시점의 고용유지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13년도의 경우 6월말 고용유지인원

<교육받은 청소년 수, 취업한 수(최근 3년간)>

연도	입학생 수	수료	취업	1년 이상 근무
2013	152	106	74	29
2012	127	96	74	29
2011	111	69	58	3
	390	271	157	61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 대상범위 확대해야

- 외국인 고용의사가 있는 사업주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 : 201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집합교육을 실시함. 교육 내용은 고용허가제의 이해, 바람직한 고용 관계, 출입국관리법, 노무관리 기법, 산업재해예방 등으로 교육이수 사업장은 다음해 1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0.2점 가점을 받음

교 과 목	교 육 내 용
고용허가제의 이해	○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교육(외고법 등) ○ 외국인 고용 관련 상담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 국가별 문화 특성 이해 ○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기술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성공사례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출입국관리법 상 신고사항 등)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기법	○ 근로계약체결, 임금·퇴직금 지급 ○ 인사 및 노무관리 ○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사례 및 발생 형태별 안전 대책 등 ○ 기타 산업안전보건 정보 등

○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 실시현황

(단위: 명)

시행기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9월
총 계	3,050	3,020	4,411	6,949	4,365
서울지역본부	23	16	12	10	-
부산지역본부	217	325	525	683	331
대구지역본부	216	165	455	665	372
중부지역본부	424	432	467	593	679
광주지역본부	102	130	63	256	246
대전지역본부	99	136	154	625	514
서울동부지사	51	33	20	17	35
서울남부지사	56	24	23	12	-
경기지사	374	367	827	1,452	319
성남지사	235	197	306	467	322
경기북부지사	306	328	279	356	374
강원지사	52	69	21	31	-
강릉지사	-	26	39	44	24
부산남부	-	32	38	75	43
경남지사	331	195	410	436	257
울산지사	73	64	63	83	89
경북지사	-	55	46	79	65
포항지사	-	46	121	153	65
전북지사	119	71	115	110	102
전남지사	-	19	43	27	22
목포지사	-	22	88	83	43
제주지사	33	35	33	80	68
충북지사	172	145	142	252	179
충남지사	167	88	121	360	177

- 문제점 : ①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보험 등 고용주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음
 ② 사업자 교육 수료 시 다음해 1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시 0.2점 가점이 있어 최초 외국인고용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높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임.

▣ 대안

- 교육의 대상을 외국인 고용의사가 있는, '14일 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사업주'까지 교육 확대 방안 마련

■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절실

- 2014년 지원 대상 목표 3만 6백명 중 443개 사업장에 1199명 지원 목표 대비 4% 달성
- 지난해 관련 예산 70억 원 확보, 금년 집행은 1억 6천만 원 뿐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4대보험)’ 전액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유도함
- ‘상용형 시간선택제(시간제 정규직)근로자’란 시간당 임금과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7.7%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는 70%의 시간제 일자리가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임

(*) 참고 (적용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인 중견기업이 시간제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업 부담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 이란?

○ (근로복지공단 소개 내용 발췌)

- 일과 가정 사이에서 행복 찾고, 학습과 퇴직 준비로 알찬 미래를 준비 하는 제도입니다.
- 퇴근 시간만 되면 아이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는 워킹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전일제 근로가 곤란한 근로자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일과 가정 양립 ②점진적 퇴직 준비 ③일과 학업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금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근로 시간을 줄여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합니다.

※ 1인당 지원받는 금액 및 기간

- (1인당 지원받는 금액) ‘14년 이후 신규 고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
-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의 0.9%~1.1%(실업급여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45%)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의 4.5%

[예시: 월평균보수 100만원 기준 월 지원액]

- (고용보험료) 9,000원 ~ 11,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45,000원

-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

▣ 대안

- 이번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초기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함

■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금용?

- 명절 선물 구입도 업무의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2014년은 예산액)

(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3,876	59,583	62,418	42,694	35,000	253,571

○ 연도별 업무추진비 내 직원격려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2,800	12,500	15,750	7,918	2,500	51,468

- 업무추진비의 1/4이 직원격려금으로 이사장 지역 순회 시 현금으로 지급함.
- 하지만 격려금을 받은 직원이 수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음.
- 이사장 지역본부 순회 일정과 비교분석 한 결과, 방문하지도 않은 곳에서도 격려금이 지급되었음

○ 연도별 업무추진비 내 직원격려금 공단 및 지역본사/지사 지급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단	30	22	26	15	5
지역/지사	15	19	26	12	4
합계	45	41	52	27	9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 ☞ 2011년 업무비 집행 : 경영평가 관련 직원 격려(20만원)
- ☞ 2012년 업무비 집행 : 3번에 걸쳐 (3월, 6월, 12월) 경영평가 관련 직원을 격려함 (90만원)
- ☞ 2013년 업무비 집행 : 3번에 걸쳐 (2월, 4월, 6월) 경영평가 관련 직원 격려 (88만원)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에 의뢰하여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평가(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당해 연도 6월에 발표함

○ 연도별 업무추진비 내 설, 추석 선물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3,624 (3건)	6,660 (1건)	5,140 (2건)	7,830 (1건)	40,064

- ☞ 기관장 경영정보 공개 : 2011년~2012년 업무추진비 현황에 ‘산업안전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행사 등 소요경비란에 설 추석 선물 집행금액이 들어가 있음

▣ 대안

-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기상청 국정감사 정책질의 성과보고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목 차

<서 언>

I. 기상청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151
II.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152
1. 10월 10일(금)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152
III. 기관별 국정감사 정책 질의	154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154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 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I. 서언

2014년 기상청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며,

기상청은 단순히 일기예보만 하는 곳이 아닌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기상청이 라이다(LIDAR)·다목적 항공기·AWS 등 기상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비리로 기상청 관부와 관계직원들이 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고 고급 리조트에서의 호화 세미나 비용과 오락비까지 산하기관에 떠넘겨 빈축을 샀는가 하면, 산하기관 일부 간부는 여직원을 성희롱 하여 불명예 퇴진을 하는 등의 사건들로 국민들께 ‘비리청’, ‘기상마피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기상청의 내부 문제점에 주력하여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공식기장 확립, 부분별한 사업비 집행, 자제용역관련 내부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는 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기상청이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II. 2014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 10월 10일(금)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 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국정감사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상청에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 후속조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음
2. 기상청의 해킹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침해사고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도 보안시스템 관련 예산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
→ 기상산업진흥원도 망분리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의 보안관련 대책을 촉구
→ 기상청장으로부터 내년 기상산업진흥원도 망 분리 사업에 포함시켜겠다는 답변 이끌어 냈음
3. 기관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임직원징계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100억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을 지적
→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개편안 마련을 요구
4. 국민들의 기상위성지식 확산을 위해 만든 기상위성교실 홈페이지의 내 콘텐츠 부실을 지적하고 후속조치 요구

5. 사전수요조사 없이 2억을 집행한 천리안 위성 맞춤형 영상정보 사업의 부실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
6. 예보업무교육과 같은 내부교육에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3중 특혜 (업무수당, 강의료, 야근수당)을 받고 있는 점과 업무공백으로 야기되는 기상청 전반의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
→ 퇴직공무원을 교육기관 내 전임강사나 교수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
7. 불용품처리 세부지침의 부재로 5년 동안 3개 기관에 단독으로 불용품을 150만원에 매각한 점을 지적하고 관리 개선방안을 요구
8. 자체용역사업 관리 규정 중 평가위원 제제 규정 및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
9. 기상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민간사업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하여 조직을 키우려고 하고 있음을 지적
→ 민간사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요구

Ⅲ. 기관별 국정감사 정책 질의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감사]

■ 기상청, 디도스 공격 등 각종 해킹 공격에 취약

- 2010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 작년 하루 2.6번 공격 당해

▣ 현황 및 문제점

○ 해킹공격 사고 현황 및 개인정보 유출 현황

해킹 공격 유형	~ 7월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공격 시도	침해 사고	공격 시도	침해 사고	공격 시도	침해 사고	공격 시도	침해 사고	공격 시도	침해 사고
서비스거부공격 (DDoS)	21	-	7	-	12	-	39	-	3	-
웹 해킹	353	-	408	1국내	287	-	248	2	21	-
비인가접근	197	-	233	1중국	337	-	141	-	4	-
웜/바이러스	58	-	252	-	174	1홍콩	197	-	17	-
스캔시도	4	-	66	-	12	-	36	-	4	-
계	633	-	966	2	822	1	661	2	49	-

※ 본청소속기관산하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의 보안 관제를 본청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전담

- 2013년11월 비인가접근 침해사고 (중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산하기관) 생활지수SMS 개발서버 SSH 계정 노출, 긴급조치(자료 유출 없음)
- 2013년2월 웹 해킹 침해사고, 긴급조치(구글 검색 삭제) (국내)
 - 외부포털 홈페이지 검색엔진 결과 내 노출
- 2012년7월 본청 사용자 PC 바이러스 감염(자료유출 없음) (홍콩)
 - 국가정보원에서 코드 샘플 채취를 위해 하드디스크 확보
- 2011년11월 웹 해킹 침해사고 (미국, 중국, 태국, 브라질)
 - 국토교통부 소유 한강홍수통제서버 ssh 권한 탈취, 긴급조치 (자료유출없음)
- 2011년1월 웹 해킹 침해사고 (중국)

- 국가슈퍼컴퓨터센터 웹페이지 비정상파일업로드, 긴급조치(자료유출없음)

☞ 기상청 자체 취약점 점검과정에서 발견하여 즉시 취약점 제거

○ 대상 국가별 대상 국가별 탐지건수 (2010년~2014년 현재까지)

(단위:건)

2014		2013		2012		2011		2010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633		966		822		661		49	
미국	92	네덜란드	253	대한민국	210	대한민국	188	대한민국	12
인도	66	미국	130	미국	141	중국	143	중국	12
네덜란드	58	중국	109	중국	117	미국	41	브라질	4
중국	57	대한민국	92	독일	21	프랑스	11	미국	2
미국	41	인도	56	러시아	17	대만	10	세네갈	1
대한민국	33	독일	29	캐나다	17	루마니아	10	이탈리아	1
포르투갈	24	포르투갈	24	인도	14	캐나다	8	페루	1
독일	18	체코	19	프랑스	13	독일	7	기타	16
브라질	17	라트비아	18	대만	12	영국	6		
캐나다	14	이탈리아	16	일본	9	이탈리아	6		
영국	11	브라질	16	브라질	7	브라질	5		
러시아	11	프랑스	12	싱가포르	7	스페인	5		
프랑스	10	에콰도르	11	이탈리아	6	오스트리아	5		
체코	9	벨리즈	10	루마니아	5	일본	5		
에콰도르	8	태국	9	오스트리아	2	태국	5		
슬로바키아	4	스웨덴	4	태국	2	인도	4		
베트남	4	멕시코	4	홍콩	2	러시아	3		
말레이시아	4	러시아	4	스웨덴	1	북한	3		
루마니아	2	이란	2	스위스	1	프랑스	3		
이탈리아	1	우크라이나	2	인도네시아	1	홍콩	3		
아르헨티나	1	덴마크	2	기타	217	네덜란드	1		
벨리즈	1	아일랜드	1			뉴질랜드	1		
기타	147	바하마	1			덴마크	1		
		뉴질랜드	1			기타	187		
		기타	141						

○ 해킹 등 보안 시스템 관련 예산 집행 현황

회계연도	집행예산	비고
2010	4,106백만원	- 기상슈퍼컴센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기상분야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2011	3,140백만원	-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사업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2012	1,282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사업
2013	724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 백신 및 패치관리 SW 라이선스 구매
2014	736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 백신 및 패치관리 SW 라이선스 구매

○ 해킹공격 보안 시스템 및 방화벽 현황

보안장비	기상청	슈퍼컴퓨터센터 DMZ 영역
DDoS 방어	5대	1대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54대	4대
침입차단시스템(IPS)	11대	2대
웹방화벽시스템	6대	3대

○ 망분리 사업 완료 현황

망 분리 적용 : 기상청 본청 및 소속기관 전체(지방기상청, 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연구소)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사업(6차, 2011) 예산으로 추진
- 2011년 11월 본청 및 소속기관 망 분리 정책 적용

※ 국가태풍센터(제주 소재)는 '14년 6월 망분리 정책 적용 완료

▣ 대안

- 기상청은 국가의 중요 시설이자 핵심연구정보를 보유한 국가 자산이므로 점차 침해화되고 다양화되는 해킹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 특히 망 분리사업을 기상산업진흥원은 제외하고 완료를 했는데 기상산업진흥원의 경우 작년 침해 사고도 있었던 만큼 망 분리를 하여 보안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평가 낙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및 소속기관 최근 3년간 성과급 잔치 100억원 평평!!

- 임직원 징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창조개혁TF 쇄신안은 어디에?

▣ 현황 및 문제점

○ 기관평가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비리등의 문제로 꾸준히 지적을 받음

- 기상청

	2012년 업무평가 -국민총리실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국민권익위	2013 반부패 경쟁력 평가-국민권익위	2013년 자제감사활동 심사-감사원
등급	핵심과제 : 미흡 정책관리 : 보통 공직기강 확립보 필요	5등급 (5등급이 제일 낮음)	4등급 (5등급이 제일 낮음)	c급(중앙행정기관 평균 85.64, 기상청 78점)

- 기상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2014, 6. 18)에서 제일 낮은 E등급을 받음.

※ 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은 2개 기관(기상청, 한국건설관리공사)을 제외한 213개 기관(99.1%)이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코레일의 경우 방만 경영으로 앞으로 개선치 않으면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2012년 ~ 2014년 성과급 지급 현황>

년도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
2014	3,374,120,000	308,329,000	인건비 부족으로 지급 못함
2013	3,220,491,000	296,901,000	115,875,000
2012	3,018,262,000	273,567,000	94,997,000
합계	9,612,873,000	878,797,000	210,872,000
총 합계	10,702,542,000원		

<2011년~2014년 7월 임직원 징계, 경고, 주의 조치 현황>

구분	경고	주의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합계
2011년			3	5				8
2012년			2	4	3		1	10
2013년	1	5		3			1	10
2014년 7월	8	5		1	1	1	1	17
합계	9	10	5	13	4	1	3	45

구분	교통사고	음주운전	주거침입	상해폭행	절도	성희롱	직무태만	공무집행방해	비밀실실	기타	합계
2011년	2	2	1	1					1	1	8
2012년		2		2	2			1	2	1	10
2013년		1		1		1	2			5	10
2014년 7월		1					11	1	2	2	17
합계	2	6	1	4	2	1	13	2	5	9	45

- ☞ 검사검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중지 중 : 10명 (2012년 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등)
- ☞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 : 2명 (2013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 수사개시 : 1명 (2014년 직권남용)
- ☞ 징계위원회 처분 기다리는 중 : 2명 (2014년 상해, 교통사고)

<2005년 ~ 2014년 훈 포상 현황 징계 받은 직원 7월 임직원 징계, 경고, 주의 조치 현황>

훈포상 받은 후 징계받은 직원 수	징계 받은 후 훈포상 받은 직원
26명 (대통령 2명, 국무총리(모범공무원) 4명, 환경부장관 3명, 기상청장 9명등)	1명 (기상청장상. 업무유공)

- 2008년 오보예보관을 퇴출시킨다고 공헌하였으나 퇴출된 예보관은 없음. 이처럼 창조개혁기획단(13. 12. 4. ~ 14. 5. 16)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됨

▣ 대안

- 2008년 국민의 여론이 기상청에 대한 비난으로 높아지자 대대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오보예보관을 퇴출시킨다고 공헌한 적이 있었는데 퇴출된 오보예보관은 한명도 없었음
- 방만 경영과 내부비리로 인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과급 지급도 하지 않고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한 코레일과 비교가 됨 뼈를 깎는 자구 노력 필요
-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강조 높은 조직 개편안 마련 및 공직 기강 확립 필요

※ 참고자료

<기상청 및 소속기관 2011년~2014년 7월 까지 임직원 징계 현황>

순번	피징계자		징계처분 내역		
	직급	성명	징계내용	처분일자	사유
1	사무운영서기	홍○○	견책	2011.07.01	품위유지 의무 위반(교통사고)
2	기상주사	정○○	불문경고	2011.08.18	품위유지 의무 위반(상해)
3	기상주사보	박○○	견책	2011.10.04	품위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
4	기상주사보	박○○	견책	2011.10.04	품위유지 의무 위반(교통사고)
5	기상주사보	황○○	견책	2011.11.11	품위유지의무 위반(고용휴직 부적정)
6	기상사무관	이○○	불문경고	2011.11.17	품위유지 의무 위반(주거침입)
7	기상주사보	이○○	견책	2011.12.23	품위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
8	기상주사	고○○	불문경고	2011.12.23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비밀분실)
9	기상연구사	최○○	감봉2월	2012.01.01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10	사무운영서기	한○○	견책	2012.04.23	품위유지 의무 위반(공무집행방해)
11	기상주사보 (퇴직/2013.08.07)	전○○	견책	2012.05.10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12	기상주사	정○○	견책	2012.05.10	품위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
13	기상주사	최○○	불문경고	2012.06.14	품위유지 의무 위반(절도)
14	기상주사	이○○	불문경고	2012.07.10	품위유지 의무 위반(절도)
15	기상서기	김○○	견책	2012.09.04	품위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
16	기상주사	이○○	감봉1월	2012.11.23	품위유지 의무 위반(상해 및 재물손괴)
17	부이사관 (퇴직/2013.07.11)	이○○	견책	2013.02.01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18	기상연구관	이○○	견책	2013.05.23	품위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
19	기상주사보	황○○	견책	2013.08.09	품위유지 의무 위반(상해 및 재물손괴)
20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견책	2014.01.09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21	기상주사	이○○	정직1월	2014.03.24	품위유지 의무 위반(공무집행방해)
22	기상서기보	이○○	해임	2014.03.24	성실의무 위반(상사위협, 직장내폭언 등)
23	방송통신사무관	홍○○	감봉2월	2014.05.20	품위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2011년~2014년 기상청 및 소속기관 경고 주의 조치 현황>

순번	행위당시소속	대상자	직위/급	감사기관	처분일자	처분결과	내용
1	청주기상대	이○○	기상사무관	자체감사(복무)	2013-05-16	경고	연말연시 공직기강 해이
2	기획재정담당관	임○○	기상사무관	자체감사(복무)	2013-05-16	주의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 절차 미준수
3	관측정책과	김○○	기상사무관	자체감사(복무)	2013-05-16	주의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 절차 미준수
4	예보기술분석과	박○○	기술서기관	자체감사(복무)	2013-05-16	주의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 절차 미준수
5	수치자료응용과	최○○	기상연구관	자체감사(복무)	2013-05-16	주의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 절차 미준수
6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박○○	기능7급	자체감사(복무)	2013-05-16	주의	유연근무 출퇴근 등록 절차 미준수
7	지진관리관	양○○	일반직고위 공무원	자체감사(복무)	2014-01-03	경고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결과에 영향력을 준 발언을 함
8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전○○	기상연구관	자체감사(복무)	2014-01-06	경고	내부문건을 언론인에게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9	대변인	정○○	기상연구관	자체감사(복무)	2014-01-06	경고	내부문건을 언론인에게 무단 열람케 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누락
10	국가태풍센터	장○○	기상연구관	자체감사(복무)	2014-02-05	경고	출장일수 과다 산정 및 근무기강 해이
11	국가태풍센터	이○○	기상연구관	자체감사(복무)	2014-02-05	경고	과다 산정 출장 승인 등 관리자의 의무 소홀
12	강원지방기상청 영월기상대	정○○	행정사무관	자체감사(복무)	2014-04-01	경고	소속직원 공직복무 관리 태만
13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김○○	기상사무관	자체감사(복무)	2014-04-01	경고	청사방호 및 경비원 관리 감독 소홀
14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박○○	기상주사	자체감사(복무)	2014-04-01	경고	청사방호 및 경비원 관리 감독 소홀

<기상산업 진흥원 임직원 징계, 경고, 주의조치 현황>

연도	직급	성명	징계내용	처분일자	사유	조치요구기관
2012	3급	◎◇●	해임	12.1.20	기상관측장비 구매사업 입찰관련 부적절 문건 배포	-
2012	6급	★◇◎	감봉	12.1.20	기상관측장비 구매사업 입찰관련 내부서류 유출	-
2013	1급	□◎☆	해임	13.7.9	직무유기 등	-
2014	3급	○★☆	주의	14.1.10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상청
	2급	◎◇●	주의	14.6.26	경영정보공시 불성실	기재부
	1급	□◎☆	주의	14.6.26	정보통신공사 수급인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2급	★◇◎	주의	14.6.26	정보통신공사 수급인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5급	☆○◇	주의	14.6.26	정보통신공사 수급인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 기상교육홈페이지, 천리안 위성 맞춤형 영상정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아는 사람만 보는 기상위성교육홈페이지, E-러닝 콘텐츠 지난 위성 캠프 강연을 찍은 캠코더 동영상으로 채워
- 방송매체별 차별화된 영상 및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완료된 사업 3년이 다 되자도록 인터넷 서비스만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8월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있음.

구 분	총 사업	3차년도 사업
사업기간	2011. 6.13. ~ 2015.11.30.	2013. 1. 4. ~ 11.30.
사업비	712,489,000원	142,500,000원
계약상대자	(주)지인컨설팅	

○ 기상위성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사업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에서 위성분야 전문인력양성과 대국민 기상기상 지식 확산을 목적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 교재 개발 및 기상위성 사이버 교육훈련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

☞ 문제점

① 국립기상위성센터의 기상위성교실을 클릭하면 현재 시운영중인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아 아는 직원만 들어 갈수 있음



(사이트 주소: cyber.nmsc.kma.go.kr)

② 동영상 강의를 클릭해서 바로 스트리밍이 되지 않고 다운을 받아서 열어야 강의를 볼 수 있음. 또한 강연화질 자체가 흐려 PPT교재가 잘 보이지 않음

- ③ 연차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상위성교육 e-러닝 콘텐츠 제작을 한 것으로 나와있음. 지금 업로드된 강연을 보면 기상위성 여름캠프 때 했던 내용을 캠코더로 찍은 것에 불과한데 e-러닝 콘텐츠 제작하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이 의문임

<천리안 위성 맞춤형 영상정보 생산 및 콘텐츠 개발 : 다수의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검사검수일
2011.10.28 ~ 12.15.	(주)케이웨더	219백만원	2011.12.22.

- 매체에 고해상도 기상위성 영상정보를 생산·제공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

☞ 문제점

- ① 서비스 목적, 서비스 대상, 방법, 개발기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하지 못한채 연도말에 긴급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음
- ② 2011. 12. 22. 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수요자를 위한 제공방법 및 제공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목적대로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에는 서비스를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음

▣ 대안

- 국민들의 기상위성지식확산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한 ‘기상위성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사업이 지금까지 5억을 집행하고도 교육 훈련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서비스 대상, 방법, 개발기간등 사전 조사 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앞으로 이 사업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후 사업 진행

■ 기상예보기술-선배가 후배 가르치는 데도 강사료로 지난 3년 동안 2억5천만원 지급

-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강연자 3중 특혜(강의로, 야근수당, 업무수당)
- 2013년 50만원이상 받은 직원이 50명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 기상청 교육훈련 과정 강사비 지출 내역

교육과정	강사료지급건수	총 강사료	기상청 직원 강사비 지급
2011년	305건	134,935,000원	89,910,000원
2012년	305건	141,172,000원	82,930,000원
2013년	256건	162,274,000원	84,944,000원
합계			257,748,000원

○ 기상청 교육훈련 과정 중 강연비 50만원이상 지급받은 직원 현황

년도	50만원~100만원	100만원~200만원	200만원 이상
2012	21명	3명	2,000,000
			2,000,000
			2,000,000
2013	25명	7명	1,920,000
			1,280,000
			1,040,000
			1,040,000
			1,520,000
			1,020,000
합계	46명	10명	1,040,000
			20명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지침에 따르면 교육 훈련기관의 경우 직원을 활용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기상청은 인력개발과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서의 직원들은 초빙강사의 자격을 얻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 비교

- ① 중앙관서 자체교육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강의 준비에

장시간이 걸릴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이하로 개인당 6회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② 조달청은 교육훈련기관내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수, 강사로 채용하여 강사료를 줄이고 고령자 재취업에도 노력하고 있음

■ 대안

- 조달청도 기상청처럼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교육이 많아 교육기관내에 전임강사나 교수로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여 후배직원들의 업무교육을 하고 있음
- 기상청도 조달청과 같은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해 재직 중인 직원은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후배직원들은 퇴직한 선배들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기상청(본청) 3개 기관 독점으로 지난 5년 동안 구입 금액 490억에 달하는 불용품 150만원에 매각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2014년 불용품 처리 현황

연도	불용품명	수량	처분일자	기관명	선정사유	기관심사 세부지침	구입액/ 매각금액
2010	의자, 책상, 탁자, 공기청정기, 기상관측장비, 레이저프린터, 카메라, 컴퓨터등	518	'10. 4.26.	한국IT 복지진흥원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499,421,151/ 1,167,150
	일반승용차	1	'10.10.11.	카마트자동차매매상사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10,228,170/ 4,066,000
	평판형트럭	1	'10.12.31.	연합종합철강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110,610,000/ 15,600,000
2011	상업용식기세척기, 텔레비전, 탁자, 복사기, 책상, 의자, 쇼파, 장롱, 영상회의시스템, 노트북, 프로젝터등	608	'11. 6. 2.	한국IT 복지진흥원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1,090,681,301/ 129,000
	미니밴	1	'11.10.14.	경인자동차매매상사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15,089,760/ 4,730,000
2012	열펌프, 의자, 식탁, 공기청정기, 디지털캠코더, 비디오프로젝터, 향온향습기, 노트북, 복사기등	915	'12. 6.20.	한국IT 복지진흥원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1,005,683,033/ 116,000
2013	음향측정기및 데시벨미터 등	4,751	'13. 7.22.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46,501,485,715/ 141,000
	기상도송수신장치 등	9	'13. 7.25.	SH공사	토지수용에 따른 지장물 매각	해당없음	674,669.404/ 71,740,000
	일반승용차	1	'13.12.16.	김○○(개인)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20,864,590/ 8,010,000
2014	데스크톱컴퓨터 등	50	'14. 5.20.	일신	제주지역정부물품재활용센터 (조달청 계약업체) -경쟁업체 없음	해당없음	40,046,685/0
	데스크톱컴퓨터 등	211	'14. 7. 3.	한국IT 복지진흥원	국내·외 취약(소외)계층 무상지원 -경쟁업체 ○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사업소	해당없음	163,297,092/0

○ 2010년~2014년 불용품 처리 기관 및 불용품 처음 구입액

불용품 구입처	구입액	매각금액	수량
한국IT 복지진흥원	2,759,082,577	1,412,150	2,252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46,501,485,715	141,000	4,751
일신	40,046,685	-	50
합계	49,300,614,977	1,553,150	7,053

○ 불용품 처리 기관에 대한 심사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해오던 대행업체에 헐값에 양도 함

○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불용품 기증은 기상청이 하였지만 한국 IT 복지진흥원이나 장애인문화교류협회에서 이를 이용하여 기관을 홍보하고 있음

▣ 대안

○ 불용품을 처리할 때 기상청의 로고 스티커를 부착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기상청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안 검토

○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불용품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만들어 좀 더 공정하게 불용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상청, 자체 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 대대적인 개정 필요

- 평가위원 제재 규정 미비로 입찰참여기관 소속의 위원이 5개 사업에 참여하여 평가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2014년 동안 총 25개 과제의 ‘지역기후서비스’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함. 그 중 5번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시킴

<입찰참여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선정한 사례>

사업명	사업기간	연구수행 기관	연구책임자	입찰제안기관		제안서 평가위원(외부)		
				기관1	기관2	위원1	위원2	위원3
제주도 감귤산업 지원을 위한 생물기후정보 개발	2011. 4. 7 ~ 11.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대학교 문일주	한국해양연구원 이재학	강릉원주대학교 정일용
감귤산업지원 생물기후정보 서비스 상세화 개발	2012. 4.27 ~ 11.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대학교 문일주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강릉원주대학교 정일용
대구지역 태양광 기후지수 상세정보 서비스	2013. 3.26 ~ 11.30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해동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김유근	부경대학교 이재철	한국해양대학교 이호진
수산업지원 해양 기후정보서비스 현장 활용기술 개발	2013. 3.28 ~ 11.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익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대학교 문일주	강릉원주대학교 정일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영상
생물기후정보서비스 감귤농가 활용기술 개발	2013. 3.22 ~ 11.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동녘	제주대학교 문일주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강릉원주대학교 정일용

- 자체 연구용역사업 절차를 규정하는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는 평가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는 기준이 없음.

(평가위원: 현재 62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인력 POOL에서 위원을 선정함)

- ☞ 출연 연구개발사업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규정’ 제 19조 2항에 의해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

성을 유지하고 있음

-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아이디어, 계획, 보고, 발표, 지식 재산화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연구과정 및 성과를 기록한 자료로 연구종료 후 연구과정 산출물에 대한 활용등에 필요함
- 따라서 ‘국가연구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과 ‘기상업무 연구개발 사업의 처리규정’에 따르면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는 연구노트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립기상 연구소 일부 연구자 만이 연구 개발사항 일부를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음
- ☞ 국립기상연구소, 국립기상위성센터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대부분이 계약직이여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과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안

- 연구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가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시키고 연구노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민간기상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상산업진흥원 오히려 민간기상사업자 분야까지 업무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연직바람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 사업 경과

일시	내용	비고
2013.12.12	케이웨더와 진흥원 연직바람관측장비 차기 예약체결시까지 유지보수용역 연장 합의	-4억 2천만원 계약 (예산: 4억 3천만원)
2014.5.8.	진흥원,2014년 유지보수 용역 사전 규격 공개	-전년대비 예산 60%삭감한 1억 7천만원 공고 점검항목동일, 점검주기 감소 -케이웨더, 진흥원에 장비안정화를 위해 유지보수 점검주기 증대를 건의함
2014.5.13.	진흥원, 라이다 사건 패소	
2014.5.20	진흥원, 케이웨더 건의사항 미수용으로 회신	
2014.5.23.	조달청 유지보수용역사업 입찰 공고	무응찰
2014.6.5.	조달청 유지보수용역사업 입찰공고	무응찰
2014.7.11.	진흥원, 연장계약 6월말 일자로 해지 통보	
2014.7.16	케이웨더, 일방적 해지는 계약위반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전달	
2014.7.16.	진흥원, 프랑스 제조사에 협력제안 이메일 송부	
2014.7.25.	진흥원, 유지보수용역사업자로 진흥원이 선정되었다며 해지 재 통보	
2014.8.4.	조달청 유지보수용역사업 입찰 공고	무응찰
2014.9.5.	조달청 유지보수용역사업 입찰 공고	무응찰

○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 예산

- 2013년 예산 : 유지보수용역등 운영 약4억 3천만원
- 2014년 예산 : 유지보수용역등 운영 5억 1천백만원

○ 2013년, 2014년 기상청 장비 유지보수 용역 배정 예산 비교

- 레이더 : 점검주기, 점검항목 간소화 → 배정 예산 증액 또는 동결
- 연직바람(윈드프로파일러) : 점검주기 간소화, 점검항목 동일
→ 배정 예산 대폭 감액

1. 레이더

1) 관악산, 구덕산 레이더(EEC) 2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배정 예산	295,652,549원	320,000,000원	예산 증가
점검 주기	격주, 월간, 분기 84개 항목	월간, 분기 57개 항목	점검주기, 점검항목 간소화

2) 광덕산, 진도, 성산, 고산 레이더(Gema) 4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배정 예산	645,319,999원	645,319,999원	예산 동일
점검 주기	격주, 월간, 분기 90개 항목	월간, 분기 63개 항목	점검주기, 점검항목 간소화

3) 오성산, 면봉산, 강릉 레이더(Metstar) 3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배정 예산	392,062,999원	392,060,000원	예산 동일
점검 주기	주간, 월간, 분기 83개 항목	월간, 분기 56개 항목	점검주기, 점검항목 간소화

2. 윈드프로파일러 9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배정 예산	440,000,000원	177,625,970원	예산 대폭 하락
점검 주기	월간, 분기, 반기 점검	분기점검	점검주기 간소화, 점검항목 동일

☞ 연직바람관측장비(윈드프로파일러)예산만 삭감함. 이미 유지보수로 5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1억 7천만원으로 입찰공고 함.

○ 지난 7월 기상사업자의 해외 거래처에 사업 제안한 기상산업진흥원

From: SULTAN Yann [mailto:ysultan@degreane-horizon.fr]
Sent: Thursday, July 17, 2014 5:10 AM
To: '김동식'
Subject: TR: KMIPA_urgent request from KOREA

Dear DongSik,
 Please see below the email I received from KMIPA.
 Can you explain the situation please?

I'm M [redacted] g, a Team Manager of Korea Meteorological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ion, KMIPA.

As the subsidiary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KMA), KMIPA is managing meteorological observation network across the Korea.

So far, 9 wind profilers made by DEGREANE Inc. are running in Korea since 2003, which have been imported through 'K-Weather' Inc., a local vender.

Up to now, K-Weather has been conducting maintenance for these wind profilers.

However, this year they did not apply for the Government tender/bid for the maintenance.

Now, we are at a critical moment that the very important equipment, run by the government, might stop the operation at any time.

Therefore, we would like to know whether DEGREANE Inc. could cooperate with us on the issues of providing the parts and technical support for wind profiler.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 2014. 6. 26. 민간기상사업자들과 간담회(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서비스 확대추진 계획): 지상, 고층유지보수를 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함

☞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담인력이 있는 건지 의문임. 앞서 본바와 같이 제조사에 협조를 구한 것을 토대로 보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음.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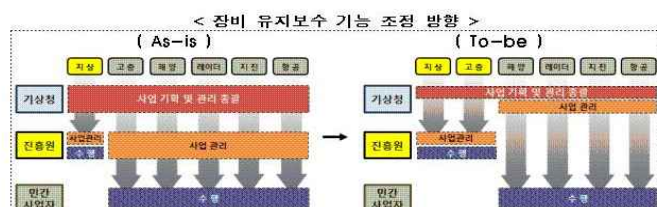
□ 국가기상관측망의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확립

○ 유지보수 사업관리 주체 조정

- (기상청) 사업 기획, 계약, 검사·검수 등 사업관리 총괄
- (진흥원) 기존의 사업관리 기능 기상청 이관
 - * 고층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진흥원에서 직접수행

○ 유지보수 수행 주체 조정

- 기본 관측망(지상·고층) 유지보수는 공적 책임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진흥원의 직접수행
 - * 고층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사전 교육, 제작사 기술협약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수행 필요
- 첨단장비(레이더·지진·항공) 및 해양관측장비 유지보수는 기존대로 민간사업자가 수행



▣ 대안

- 민간기상사업자는 기상산업진흥원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상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

V. 국정감사 언론기사 모음

					
					
	<p>2014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기사모음</p>				
					
					
					
					
					
					
					
					
					

목 차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07-02	연합뉴스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2014-07-02	KBS	고용부 산하 일부기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2014-07-02	뉴스1	이차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2	뉴스1	노동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2	머니투데이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2	뉴스1	우후죽순캠핑장, 환경부단속에도배짱영업
2014-07-02	머니투데이	힐링의 상징 '캠핑장'?...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2014-07-02	환경TV뉴스	연간 1천만 찾는 4대 해양국립공원, 안전요원 3명뿐
2014-07-02	한국경제TV	휴가시즌, 국립공원 안전관리 `적신훈`
2014-07-02	머니투데이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2014-07-03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3	SBS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3	경향신문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매년 급증
2014-07-03	머니투데이	"아동·청소년 노린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급증"
2014-07-03	아주경제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2014-07-08	한국경제TV	이차스민 " LIG건설,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액 최대 "
2014-07-10	서울경제	지진관측 장비 40% 교체시기 지나
2014-07-10	머니투데이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돗물' 가장 비싼 지자체는?"
2014-07-13	노컷뉴스	수돗물 줄줄 새는데...노후 수도관, 111년 써야 바꾼다?
2014-07-13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2014-07-20	머니투데이	등잔밑 어두운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2014-07-31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감소
2014-08-17	연합뉴스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2014-08-17	YTN	"생수 제조업체 16%...수질 관리 부실"
2014-08-17	MBC	전국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허가취소·영업정지 11건
2014-08-19	연합뉴스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014-08-19	연합뉴스TV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014-08-19	헤럴드경제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2014-08-19	문화일보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사망
2014-08-19	연합뉴스	이차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YTN	이차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 9명 숨져"
2014-08-19	KBS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뉴스1	이차스민 "올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08-19	연합뉴스TV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2014-08-19	머니투데이	부서간 '제각각'인 서울시의 싱크홀 현황 파악
2014-08-20	연합뉴스	수도권 주민 95% "싱크홀 겁난다"
2014-08-20	아주경제	군 병영시설 15%..."1급 발암물질 '라돈'에 떨고 있다"
2014-08-20	내일신문	라돈'에 병영시설 무방비 노출
2014-08-20	매일경제	전국, 싱크홀 19곳 국토부, 현장조사
2014-08-20	세계일보	피지도 못하고...아동 학대로 상반기 9명 숨져
2014-08-21	한국경제TV	차고나면 터지는 '싱크홀 공포'..."도심지하 50년 난개발이 화근"
2014-08-22	KBS	[이슈] 잇단 폭삭!...싱크홀 공포
2014-08-22	국제신문	"전국 상하수도관 30% 노후...싱크홀 우려"
2014-08-22	헤럴드경제	당정, 싱크홀 원인 집중점검 나선다
2014-08-23	동아일보	서울 교대역 인근서도 도로 함몰
2014-08-23	매일경제	시한폭탄 노후 수도권 교체율 0.9% 불과
2014-08-24	연합뉴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2014-08-24	SBS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2014-08-24	머니투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8억...서울시, 2000억으로 최다"
2014-08-24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만 7천억원 "
2014-08-25	내일신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원
2014-08-27	머니투데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2014-09-03	SBS	몇 대 안 되는 전기차 충전기, 그마저도 고장
2014-09-10	매일경제	미세먼지 기준치 50% 초과 수도권 지하철 '건강 빨간불'
2014-09-10	한국경제TV	미세먼지 '둥둥'... 숨쉬기 겁나는 지하철
2014-09-12	머니투데이	[단독]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업 9곳뿐
2014-09-12	한국경제TV	" 장애인 고용의무, 30대 기업 3곳중 1곳만 준수 "
2014-09-13	매일경제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금 내면 그만?
2014-09-16	내일신문	학교내 성희롱 문제 심각
2014-09-28	YTN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2014-09-28	연합뉴스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2014-09-28	MBN	아동·장애인·노인시설37%'석면노출사각지대'
2014-09-28	SBS	아동·장애인·노인시설 10곳 중 1곳 '석면 검출'
2014-09-28	경향신문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어린이집도 사용...지역별 석면 건물 분포 보니
2014-09-28	연합뉴스TV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2014-09-28	국민일보	아동·장애인·노인시설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10곳 중 4곳
2014-09-29	연합뉴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2014-09-29	KBS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 58억 원"
2014-09-29	경향신문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2014-09-29	뉴스시스	경남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900만원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09-29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상반기 실업급여 58억원 부정수급"
2014-09-30	문화일보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 범죄라고 인지해야
2014-09-30	전북일보	아동, 노인시설 40% 석면 검출
2014-10-02	머니투데이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추진
2014-10-03	조선일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법안 발의"
2014-10-02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2014-10-03	YTN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 포장' 3년 간 577건"
2014-10-03	SBS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2014-10-03	연합뉴스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2014-10-04	세계일보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14-10-06	머니투데이	"도산 사업장 93%,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014-10-06	한국경제TV	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도산사업장 93%가 50인 미만"
2014-10-06	뉴시스	도산기업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014-10-06	충청투데이	4년간 폐업사업장 92%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014-10-07	연합뉴스	이자스민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기질 우려 수준"
2014-10-07	경향신문	"실내놀이터 공기 중 오염물질 심각"
2014-10-07	헤럴드경제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2014-10-07	헤럴드경제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 국내제품 1.2배 증가에 그쳐
2014-10-07	에코저널	이자스민, 한국생물다양성 '빨간불'
2014-10-08	KBS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014-10-08	연합뉴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014-10-08	이데일리	'임금체불자 지원' 체당금 부정수급, 2년새 17배 급증
2014-10-08	이데일리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2014-10-08	SBS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률 '낙제' 수준"
2014-10-08	KBS	이자스민 "지난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만2천여 건"
2014-10-08	SBS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 2천여 건"
2014-10-08	연합뉴스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천여건"
2014-10-08	노컷뉴스	부당해고 얼마나 많길래... 구제신청해마다 늘어
2014-10-08	내일신문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실효성 높여야
2014-10-08	세계일보	술 파는 키즈카페... 안전, 위생 '사각지대'
2014-10-08	헤럴드경제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2014-10-09	전북일보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내 최근 4년간 '월 32건'
2014-10-09	충청투데이	임금체불 근로자지원금 '줄줄' 2년새 부정수급 17배 늘어나
2014-10-10	YTN	기상청, 3년간 100억 성과급 평평
2014-10-10	연합뉴스	"기상청·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2014-10-11	세계일보	기상청 3년간 107억 성과급 잔치
2014-10-13	연합뉴스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일 자	언론사	제 목
2014-10-13	KBS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2014-10-13	헤럴드경제	10곳 중 3곳 외국인 고용법 위반
2014-10-14	뉴시스	이자스민 "3년간 수질오염사고 369건 발생...3년간 2배 증가"
2014-10-14	아시아투데이	4대강 사업 준설선, 낙동강 56척 방치돼 '시한폭탄'
2014-10-14	환경일보	[국감]구제역 매몰지가 위험하다.
2014-10-14	강원일보	울건설현장임금체불4만1,250명피해
2014-10-14	세계일보	외국인고용사업장10곳중3곳외국인고용법위반
2014-10-14	강원일보	울건설현장임금체불4만1,250명피해
2014-10-14	문화일보	장애인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2년새 위반 과태료 부과 4.3배
2014-10-14	세계일보	외국인 고용업체 30% 고용법 위반
2014-10-16	뉴시스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 피해"
2014-10-16	이데일리	[국감]환경분쟁 86% 소음·진동 때문...2건중 1건 수도권에서
2014-10-16	에코저널	이자스민, 대형마트 25%만 '녹색매장' 운영
2014-10-17	전북일보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2014-10-17	전북일보	전북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2014-10-17	세계일보	황사때미세먼지실내가실외2배...외출자제권고무색
2014-10-17	MBC	'초미세먼지' 실내가 더 오염...환경기준 '무방비'
2014-10-17	세계일보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2014-10-17	전북일보	도내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 물질
2014-10-17	전북일보	도내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2014-10-20	한국경제TV	" 사회적기업 컨설팅 100억 투여, 효과 무색 "
2014-10-20	뉴시스	"장애인고용률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2014-10-21	일요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의존이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 원인"
2014-10-21	연합뉴스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천400억 써
2014-10-21	MBC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4년간 보험금 2천여억 원 지급
2014-10-21	JTBC	'시험 비리' 수사중 합격자 발표 강행...'공단 꼼수' 질타
2014-10-21	내일신문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산재보상 4년간 2400억원
2014-10-21	문화일보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재해 보험료 근로복지공, 4년간 지출 2300억 육박
2014-10-22	문화일보	쓰레기 봉투값 지역별 '체각각' 부산 기장 - 전남 곡성 4.7배
2014-10-22	내일신문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원 5곳중 4곳 안전에 문제
2014-10-23	연합뉴스	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대
2014-10-23	헤럴드경제	"빛 공해 싫어요"...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
2014-10-23	머니투데이	"쓰레기봉투 값 가장 비싼곳 '부산'...지역별 최대 4.7배 차이"
2014-10-23	경향신문	쓰레기봉투 지자체별 가격차 최고 6배, 가장 비싼 곳은?
2014-10-24	머니투데이	'의무가입' 아닌 외국인근로자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590억 납부
2014-10-27	문화일보	트럭까지 동원...'쓰레기 불법처리' 2년새 4배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3곳 고용의무율 안 지켜...7곳은 '면피' 수준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턱걸이 수준에서 겨우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 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산하 일부기관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말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57%, 노사발전재단 1.63%, 건설근로자공제회 0% 등 산하기관 11곳 중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13년 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상 시 근로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률	의 무 고용률
계	12,823	368	434 (527)	4.1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49	19	109 (154)	23.73	준정부 기관 3.0%
한국고용정보원	269	8	8 (10)	3.72	
근로복지공단	6,303	189	171 (193)	3.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94	44	47 (55)	3.68	
한국산업인력공단	1,100	33	31 (34)	3.09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0	10	8 (9)	2.5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801	45	45 (50)	2.7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62	11	10 (12)	2.60	기타 공공 기관
(재)노사발전재단	245	6	4 (4)	1.6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5	1	1 (1)	1.54	
건설근로자공제회	85	2	0 (0)	0.00	2.5%

* ()는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적용 시 장애인 근로자수

【세종=뉴시스】 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턱결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산하기관 일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3곳 고용의무를 위반...7곳은 '면피' 수준

구분	상시 근로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률	의무 고용률
계	12,823	368	434 (527)	4.1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49	19	109 (154)	23.73	준정부 기관 3.0%
한국고용정보원	289	8	8 (10)	3.72	
근로복지공단	6,303	189	171 (198)	3.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494	44	47 (55)	3.68	
한국산업인력공단	1,100	33	31 (34)	3.09	
(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50	10	8 (9)	2.57	기타 공공 기관 2.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801	45	45 (50)	2.7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62	11	10 (12)	2.60	
(재)노사발전재단	245	6	4 (4)	1.6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5	1	1 (1)	1.54	
건설근로자공제회	85	2	0 (0)	0.00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턱걸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의무 고용인원이 2명이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 등 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했지만 1%포인트 이상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없었다.

전체 11곳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만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했다.

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이자스민 "고용부 산하 3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과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캠핑장, 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전국 캠핑장 1500~2000여개 난립...대부분 미등록 업체



캠핑이 최근 대표적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상당수 캠핑업체들이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각지의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일부 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시설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해선 파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76개 캠핑장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고발 등 97개 사항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업체의 행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을 못했고,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시설 개선 없이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캠핑장은 특별한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힘들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총 1866곳으로 추정된다. 이 중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230곳(12.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성수기가 되면 무분별한 캠핑장 난립으로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캠핑장 관련 단속이 가능한 법령은 '하수도법'이 유일하다.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1일 오수발생량 2톤 초과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의원은 "깨끗한 환경 그 자체가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힐링의 상징 '캠핑장'?...환경부 단속에도 '배짱' 영업

최근 대표적 여가문화로 '캠핑'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캠핑업체들이 오물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하천·계곡 환경오염 발생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지만 정작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선 파악조차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군	점검 시설 수	위반 시설 수	위반 내역(건)				조치 내역(건)				비고
			수질기준 초과	무단방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기타관리위반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기술지원	
계	434	76	22	3	17	34	27	50	20	3	
서울	5	0	-	-	-	-	-	-	-	-	
부산	-	-	-	-	-	-	-	-	-	-	
인천	15	8	1	-	7	-	1	1	7	-	
대전	-	-	-	-	-	-	-	-	-	-	
광주	1	1	-	-	-	1	-	1	-	-	
대구	-	-	-	-	-	-	-	-	-	-	
울산	6	3	1	-	-	2	1	3	-	-	
제주	4	2	1	-	-	1	4	1	-	2	
세종	1	-	-	-	-	-	-	-	-	-	
경기	109	37	6	3	7	21	8	27	10	-	
강원	96	4	3	-	1	-	3	3	1	1	
충북	26	2	1	-	-	1	1	2	-	-	
충남	47	8	3	-	-	5	3	5	-	-	
전북	9	2	2	-	-	-	2	-	-	-	
전남	51	2	-	-	1	1	-	1	1	-	
경북	8	1	-	-	-	1	-	1	-	-	
경남	56	6	4	-	1	1	4	5	1	-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434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76개 캠핑장이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고발 등 97개 사항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후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을 못한 상태고,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사후조치 없이 올해도 버젓이 영업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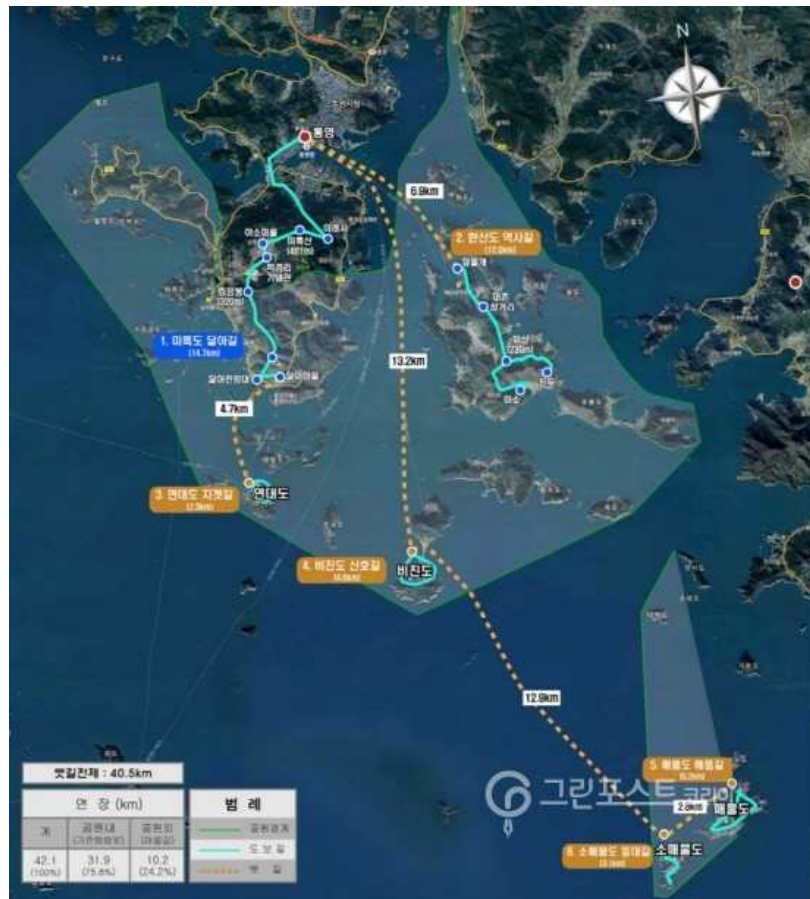
또 지난해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총 1866곳인데, 이 중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230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수기가 되면 캠핑장이 무분별하게 난립, 캠핑장에 대한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캠핑장 관련 단속이 가능한 법령은 '하수도법'이 유일하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1일 오수발생량 2톤 초과시설'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 한다. 하수의 무단배출은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의원은 "'깨끗한 환경' 그 자체가 우리 모두 지켜야할 소중한 재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1천만 찾는 4대 해양국립공원, 안전요원 3명뿐

이자스민 의원, "긴급 상황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요원 필요해"



▲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다백리길'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연간 1000만여명이 찾는 해양국립공원에서 해상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은 달랑 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공개한 '국립공원 안전요원 현황 및 안전교육 실태' 자료에 따르면 4곳의 해양국립공원 내 6개 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재난 대응 요원은 6명이다.

해당 해양공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도해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이며, 이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에만 각각 3명씩이 근무한다.

다도해해상사무소의 경우 안전관리반을 3명 운영 중이며, 변산반도사무소는 재난구조대 3명을 두고 있다.

다만 성수기인 7월에서 8월이면 각각의 사무실마다 한시적으로 안전요원을 10명씩 총원한다.

문제는 국민들이 성수기보다 5월이나 6월에 더 많이 방문한다는 점이다.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월별 방문 현황을 보면 국민들이 계절과 상관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해양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변질수 있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 요원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가시즌, 국립공원 안전관리 `적신호`

여름 휴가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국립공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객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 관리 당국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1년 2천198건에서 2012년 2천414건, 2013년 2천889건으로 불어나는 등 매년 10% 이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5월까지 총 949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특히 불법행위 세부 내역 가운데 매년 가장 많이 단속되는 항목이 `비등산로 출입`과 `야영행위`,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 4가지로, 이같은 행위가 방문객 안전과 산불 위험에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또다른 세월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새로운 등산로 개발과 새로운 야영·취사장 확보를 통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일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2.57%)과 노사발전재단(1.63%), 건설근로자공제회(0%) 등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체 고용인원의 3.0%, 기타 공공기관인 나머지 2곳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11개 산하기관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 고용인원 19명을 훨씬 초과한 109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천898건, 2012년 8천874건, 2013년 9천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습니다.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천898건, 2012년 8천874건, 2013년 9천686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범죄 매년 급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 범죄에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카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노린 몰래 성범죄 2년새 3배 급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지난해 705건에 달했다. 2년새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몰래카메라에 강간, 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지난해 9686건에 육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발달로 인한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 성범죄 2년새 3배 증가"

몰래카메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촬영을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3년 성폭력 피해 및 형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가 2011년 211건, 2012년 507건, 2013년 70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년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몰카에다 강간·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포함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 2013년 9686건 등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몰래 촬영 범죄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이자스민 " LIG건설, 장애인고용부담금 체납액 최대 "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LIG건설의 고용부담금 체납액 규모가 3억7천6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위는 1억8천만원을 체납한 나사아웃소싱주식회사, 3위는 1억7천100만 원을 체납한 태아건설이 각각 차지했고 삼우이엠씨와 진방템프그룹, 신영건설공영, 운양건설, 중앙개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영건설공영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치 부담금을 현재까지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천만원을 넘었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지출한 기업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장애인 총 2천399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876명을 고용하지 않았고 총 70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LG디스플레이가 39억4천만원, LG전자 36억4천만원, SK하이닉스 31억5천만원, 대한항공 27억5천만원, 홈플러스 21억6천만원, 신한은행 21억4천만원, 우리은행 20억5천만원, 삼성디스플레이 19억7천만원, 국민은행 19억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8억원 등을 각각 부담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업이 앞장서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진관측 장비 40% 교체시기 지나

국내 지진관측 장비 10대 가운데 4대는 교체시기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지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비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 문제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10일 기상청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지진관측 장비 127대 가운데 54대가 교체시기(9년)를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 완도(1999년), 경남 진주(1999년)의 지진관측 장비는 교체시기가 6년이나 지난 노후 제품이어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강원도 인제와 속초, 전남 순천과 백운산, 여수, 영암 등 35개 지역의 지진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 14년 동안 교체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지진의 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진관측 장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994년 국내 지진발생 횟수는 2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25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지난 4월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해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적잖은 시민들이 지진을 감지한 바 있다.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어서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한반도 인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어 원인분석과 사전예방을 위해 측정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문제로 노후장비 교체를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관측장비의 교체주기인 9년을 경과해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큰 우려는 없다"며 "교체주기를 기준으로 장비를 바꾸려고 하지만 정부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돗물' 가장 비싼 지자체는?"

이자스민 "전북, 수돗물 판매단가 1m³당 902.4원으로 전국서 가장 비싸"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의 수돗물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북의 수돗물 판매단가는 1m³당 902.4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의 1m³당 513.4원과 비교하면 1.75배나 비싼 것이다.

반면 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지자체는 강원도로 조사됐다. 강원도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1m³당 1377.30원으로, 전국 최저인 대전광역시(1m³당 563.7원)에 비해 2.4배나 높았다.

실제 강원 일부 지역의 경우, 대표적 석회암 지역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개발이 용이치 않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급수역량이 부족한 평창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시는 27.5%의 누수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3.1%의 누수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낮은 누수율을 기록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수돗물 판매단가(1m³당 875.2원)가 생산원가(1m³당 832.7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수돗물 생산 원가 및 단가 비교 표>

지자체	2012			2011			2010		
	총괄가 (원/m ³)	평균 단가 (원/m ³)	누수율 (%)	총괄가 (원/m ³)	평균 단가 (원/m ³)	누수율 (%)	총괄가 (원/m ³)	평균 단가 (원/m ³)	누수율 (%)
전국	814.7	649.1	10.4	813.4	619.3	10.4	777.2	610.2	10.8
서울특별시	630.7	564.6	3.1	621.4	520.1	3.8	587.7	514.2	4.2
부산광역시	849.3	689.5	4.0	833.6	636.4	5.0	833.6	635.3	5.1
대구광역시	581.2	580.1	5.3	583.5	537.2	7.0	585.0	539.6	9.0
인천광역시	677.1	642.0	7.8	696.3	645.0	9.5	653.3	636.6	8.5
광주광역시	615.3	525.0	11.2	626.7	524.1	11.9	622.1	498.4	13.2
대전광역시	563.7	513.4	6.8	541.5	484.6	6.4	530.4	476.9	9.3
울산광역시	832.7	875.2	8.1	920.5	763.6	8.3	920.5	760.5	9.3
세종특별	1,278.6	785.1	27.5						
경기도	717.8	624.9	6.5	734.5	618.5	6.9	694.5	618.5	7.4
강원도	1,377.3	750.0	22.3	1,385.9	734.2	23.0	1,291.5	716.1	21.7
충청북도	836.6	691.8	10.3	850.6	683.2	9.2	833.6	671.3	9.2
충청남도	1,094.5	731.1	15.9	1,049.6	726.2	15.1	1,052.4	722.1	15.2
전라북도	1,068.6	902.4	22.9	1,029.0	773.0	19.0	907.1	745.0	20.5
전라남도	1,161.2	829.6	23.0	1,164.1	786.5	21.6	1,075.2	760.5	22.3
경상북도	1,120.9	674.5	21.9	1,077.8	649.9	22.2	1,019.0	627.8	21.6
경상남도	1,006.3	781.8	23.2	1,004.9	750.1	20.5	995.1	732.3	20.8
제주도	883.1	667.0	14.8	985.0	626.1	14.8	985.0	598.3	14.9

수돗물 줄줄 새는데...노후 수도관, 111년 써야 바꾼다?

노후수도관 교체율 0.9% 불과...수돗물 4,500억원어치 누수



·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우리나라 전역에는 대략 18만km의 수도관이 지하에 깔려 있다. 이 수도관을 타고 수돗물이 가가호호에 공급된다.

그런데 이 중 4만km가 넘는 수도관이 설치한 지 21년이 넘는 노후배관이다. 지구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을 길이의 수도관이 이미 녹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후배관이라는 뜻이다.

원칙상 21년이 넘는 노후배관은 교체를 해줘야 한다. 늦어도 30년이 넘기 전에는 바꿔야 한다. 방치하면 곳곳이 터져 누수가 생기고, 수질도 나빠져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수돗물은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환경부의 '2012년 상수도 통계'와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12년에 전국 지자체들은 60억2,917만 톤(1㎡를 1톤으로 환산)의 수돗물을 생산했지만, 이 중 6억2,602톤이 누수됐다. 누수율이 10%가 넘는다.

◆ 줄줄 새는 수도물...1년에 4,500억원 어치 땅 속으로

누수된 수도물은 대구(2억8천 톤)와 인천시(3억5천 톤)에서 생산한 수도물의 총량과 맞먹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4,50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특히 강원도(22.3%)와 세종시(27.5%)는 누수율이 20%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누수의 주범은 노후배관이다. 배관 교체를 통해 상당량의 누수를 잡을 수 있지만, 정작 수도관 교체율은 0.9%에 불과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선진국의 관로 교체율은 2% 이상”이라며, “지금의 교체율(0.9%)로는 관로를 한 번 설치한 뒤에는 해당관로를 111년간 사용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노후배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의 악순환'에서 이 문제가 비롯된다.

◆ 낮은 수도요금에서 시작되는 '상수도의 악순환'

2012년 기준으로 수도물 1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전국 평균 814.7원이다. 그런데 평균 수도요금은 649.1원에 불과하다. 물 1톤을 생산할 때마다 165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 부채는 2012년 9,617억원에 달한다. 수도물을 공급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관로교체를 위한 비용까지 마련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 몰린다.

때문에 급한 곳만 땀질식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방치해두다보니 누수는 점점 심해지고, 누수되는 만큼 채산성 없는 수도물을 더 생산하고, 다시 빚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도 배관 교체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분류돼 있어서 관련 국가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한 일부 시군에는 국비 지원이라도 해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2013년 재해건수 전년보다 69%↑ 올해도 4명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안전으로 '작업중지권'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현대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날수록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입수한 현대중공업 직영·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의 재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하청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1년만에 69% 늘었다.

직영은 현대중공업 소속 정규직 노동자를 뜻하고, 하청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근무는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하는 노동자다.

최근 3년간 현대중공업 직영 노동자의 산재 건수는 2012년 193건(사망자 5명 포함)에서 2013년 187명(사망자 7명 포함)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4월 말 현재까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1명과 재해자 62명이 발생했다.

반면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2012년 61건(사망자 4명 포함)에서 2013년 103건(사망자 1명 포함)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추락과 화재 사고로 4명이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수주량 증가로 필요한 인력의 대부분을 고용 비용이 저렴하고, 일감이 떨어지면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하청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계열 3개 선박건조업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 수주량은 2012년 666만9천GT에서 작년 1천773만1천GT로 약 166%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 이미 618만1천GT를 수주했다.

GT는 뱃머리부터 배꼬리까지에 이르는 갑판 이하의 선내 총 용적을 환산한 단위로, 1GT는 2.83m³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주 산업안전실장은 "회사의 고용 유연화 전략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청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특히 해양사업부는 2천여명 정도였던 하청 노동자가 현재 1만5천~1만6천여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부의 직영 노동자는 하청의 10% 수준인 1천800여명으로 작업량이 늘어도 큰 변동이 없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사측 관계자도 "작년 수주량이 대폭 늘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와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상대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으로, 위험한 작업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에 산재에 더욱 취약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하창민 지회장은 "10일짜리 공사를 5일내 끝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잇따른 사고 이후 회사가 대대적인 안전조치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 지회장은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 일정을 못 맞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어이없는 사고가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무리한 공정을 현실화하고, 위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하청지회는 5월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영 노동자들도 이 같은 고충에 공감하고 있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안전 미비 상태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작업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현장 조합원과 노조 간부, 명예 감독관 등 10명으로 구성돼 분기별로 한번씩 작업장 시찰을 하는 등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여기 산재 사고도 포함된다"면서 현대중공업이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측은 "잇따른 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집단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탁했다"면서 "이달 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등잔밑 어두운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12개 중 4개 작년 청년채용 정부기준 하회...
"공단 등 정원문제, 즉시 기준충족 어려워" 난색



고용률 70% 달성 등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률이 '낙제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행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기준을 하회하는 곳도 네 곳이나 돼 고용부가 산하기관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상회한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 단 한 곳 뿐이었다. 이 외에는 대부분 0~5% 수준에 그쳤다. 한국잡월드도 청년채용을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곳 중 한국잡월드를 포함한 네 곳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매년 정원의 3% 이상 선발)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이 1748명에 달하는 한국폴리텍대는 지난해 18명의 청년을 채용해 채용률이 1.0%에 불과했다. 404명 정원의 한국기술교육대도 청년채용이 4명에 그쳐 1.0%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정원 217명의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채용률이 0.9%에 불과했다.

의무할당제 기준을 겨우 넘긴 산하기관들의 청년채용률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원이 156명인 노사발전재단은 청년채용률이 3.2%로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또 358명이 정원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도 3.1%의 채용률을 기록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644명 정원 중 19명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해 3.0%의 채용률로 기준에 턱걸이했다.

각각 정원이 1000명이 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채용률은 4.2%, 4.5%에 불과했다. 정원이 5369명으로 고용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근로복지공단은 288명의 청년을 새로 채용해 채용률이 5.4%로 그나마 높은 축에 속했다. 정원 55명의 미니 공공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명의 청년을 채용해 16.4%의 청년채용률을 기록했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10%를 넘겼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률도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상황이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83개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전체 고용인원 중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청년인력을 채용한 기관은 156개(55.1%)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43.1%로 더 적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계도할 것"이라며 "다만 공단의 경우 대부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을 내보내지 않는 한 단시간에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법에 강제성을 두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법은 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수준이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적용의 강제성을 놓고 법 개정 당시에도 이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감소

폭행, 금품갈취, 모욕·명예훼손 많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학교 폭력발생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465건이다.

2012년 913건, 2011년 1천117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 121건에 불과하다.

전남지역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613건에서 2012년 1천321건으로 늘었지만 2013년 699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67건에 그쳤다.

전국 발생건수도 2011년 2만1천957건, 2012년 2만3천877건, 2013년 1만7천385건, 2014년 4천933건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광주의 경우 폭행이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 모욕·명예훼손 등의 순이다.

이로 인해 3명이 구속됐고 339명이 불구속됐으며 40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전남지역도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갈취, 모욕·명예훼손 순으로 23명이 구속됐고 312명이 불구속, 94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학교급별로는 광주와 전남 모두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학생, 초등학생 순이다.

이자스민 의원측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자스민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성과는 있지만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현장에서 폭력을 뿌리 뽑아야한다"고 밝혔다.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수질 관리 부실

법령위반 제재 2012년 14건, 2013년 19건으로 증가세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전국의 생수 제조업체 중 약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발암우려 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 등과 같은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생수 제조업체 9곳이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 7월말 현재 허가를 받은 생수업체가 전국적으로 58곳(휴업 중인 7곳 제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6%가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최근 들어 먹는 물 관리법을 어겨 제재를 받는 사례는 늘고 있다. 2012년 14건이던 제재건수는 2013년 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건수가 11건이라 현 추세라면 작년 수준을 웃돌 수도 있다.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한 업체는 2011년부터 수질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마다 제재를 받다가 결국 올해 초 허가가 취소됐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생수를 유통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적발 업체 상당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생수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생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생수 업체를 정기 검사하고 시판 생수를 거둬들여 수질상태를 살펴보는 수거검사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가 주관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가 자체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역시 대부분 적합 판정이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자가 품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생수업체들은 자가 품질검사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다. 2012~2013년에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기검사와 수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가 전수조사 등을 벌여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수질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수 제조업체 16%...수질 관리 부실"

전국 생수 제조업체 가운데 약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위해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허가를 받은 전국 생수업체 58곳 가운데 9곳, 16%가 올해 상반기에 먹는물 관리법을 위반해 11건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발암우려 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 등과 같은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과 표시기준, 시설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적발 업체 상당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 생수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독권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생수 제조업체 16%, 기준 위반...허가취소·영업정지 11건



▲ MBC TV 방송 캡처

전국의 생수 제조업체 가운데 16%가 수질 기준을 밑도는 원수를 쓰거나 위해 성분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생수 제조업체 58곳 가운데 9곳이 먹는 물 관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11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 사고 현장에서 기자 및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부분 하수누수가 원인... 맨홀 뚜껑도 40회나 솟구쳐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최근 석촌지하차도 등 서울 시내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잇따라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7개월 사이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 뚜껑 솟구침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수관로 꺼짐 2곳, 기타 10곳 등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릉·군산 7곳, 정선 5곳 등의 순이었다.

싱크홀의 크기는 0.01~225m³(평균 2.63m³), 높이는 0.05~4m(평균 1m)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하수 맨홀 뚜껑의 솟구침 사고도 40회나 발생, 3명이 다치고 11대의 차량이 부서졌다.

맨홀 뚜껑이 솟구친 것은 대부분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인 역류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발생 횟수는 제주 6회, 광주·대전 5회, 서울·창원 4회 등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싱크홀 안전점검을 벌이는 만큼 원인을 철저히 찾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2012년 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서울 시내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7개월 사이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2년이후 전국 53곳서 싱크홀 발생”

대부분 하수누수가 원인
경기도 안성 11곳으로 최다

최근 서울 잠실 석촌동 지하차도 주변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 7개월 사이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 뚜껑 솟구침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원인으로는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수관로 꺼짐 2곳, 기타 10곳 등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릉·군산 7곳, 정선 5곳 등의 순이었다.

싱크홀의 크기는 0.01~225㎡(평균 2.63㎡), 높이는 0.05~4m(평균 1m)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하수 맨홀 뚜껑의 솟구침 사고도 40회나 발생, 3명이 다치고 11대의 차량이 부서졌다.

맨홀 뚜껑이 솟구친 것은 대부분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인 역류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발생 횟수는 제주 6회, 광주·대전 5회, 서울·창원 4회 등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싱크홀 안전점검을 벌이는 만큼 원인을 철저히 찾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문화일보

2014년 08월 19일 화요일 009면 사회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사망

**이자스민 의원 자료
신체·정서·성학대 받아
올 8928건 신고... 증가세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명의 아이들이 부모 등 어른들의 방임과 신체 및 정서 학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급히 아동학대 방지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실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이 중 4명은 1세 미만의 영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아동 중 5명은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등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받았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무려 2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 중 8명이 영아였다. 2012년에는 10명(영아 3명), 2011년에는 13명(영아 4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076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8928건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그 외 전북 755건, 경남·경북이 각 583건, 인천이 50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이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796명의 가해자 중 피해 아동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은 9.7%(660명),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한 경우는 5.5%(372명)에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해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시키는 '지속적인 관찰 처분'을 내린 경우가 76.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22명 중에서도 고소·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는 45.5%(1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9명의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아동 학대 안돼요' 촛불시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숨졌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천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928건이 신고됐다.

이 중 경기도가 2천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천122건, 전북 755건, 경상남·북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 9명 숨져"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아동학대로 9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한 살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 만 146건, 2012년 만 943건, 지난해 만 3천 76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 928건이 신고됐습니다.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지난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1년 만 146건, 2012년 만 943건, 지난해 만 3천 76건, 그리고 올 상반기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천 928건이 신고됐습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서울=뉴스시스】 우은식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9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가운데 1세 미만 영아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숨졌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307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928건이 신고됐다.

이 중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 전북 755건, 경남·북이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 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이자스민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9명 숨져"

올해 상반기에만 아동 9명이 학대로 숨져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부서간 '제각각'인 서울시의 싱크홀 현황 파악

송파구 싱크홀·동공 발생 현황



서울시가 최근 송파구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싱크홀 및 동공과 관련, 현황 파악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시 부서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각 부서간 각자의 기준으로 싱크홀을 판단하면서 현황집계 수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등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싱크홀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안전실 소속 도로관리과와 물재생계획과다. 하수관 누수로 인해 도로가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부서가 이번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집계를 하고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문제는 이들 각 부서에서 집계한 수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날 각 부서에서 밝힌 싱크홀 현황에 따르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된 위치는 석촌지하차도 한 곳이며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은 각각 1곳과 7곳 등 모두 8곳이다.

이에 반해 물재생계획과에서는 6월30일 오금로 13길 3번지(방이동 28-3)에서 발견된 싱크홀을 포함해 싱크홀 5곳과 동공 7곳 등 총 12곳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는 물재생계획과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이 자료는 이 의원실에서 '노후 수도관 누수문제'에 대한 파악과 함께 관련 싱크홀 현황도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것.

이 자료를 제공받아 현황을 조사했던 환경부는 서울시 부서간 자료의 상이함에 대해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재생계획과에서 자료를 받고 나서 서울시 대책발표를 들었는데 다른 점이 너무 많았다"며 "심지어 상세한 위치와 발생일자가 차이가 나서 직접 위치를 확인해봤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싱크홀 발견 시 모든 현황은 도로관리과에 보고된다"면서도 "석촌 지하철도에서 발생된 싱크홀 이외의 것들은 경미한 도로파손에 가까워 싱크홀로 보기 어려워 집계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싱크홀이란 단어도 시 내부에서 '도로함몰'이라는 말로 대체해 쓰기로 했다"며 "도로에서 벌어진 다양한 상황이 싱크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 현황 파악이 부서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각자의 기준에서만 현상을 바라보고 파악하기 때문"이라며 "이 현상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명확히 지정해주거나 신설해야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대처도 빠르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부서간 싱크홀 집계에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선 대안을 찾겠다"면서 "도로가 함몰된 부분에 대해 크기별로 세분화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민 95% "싱크홀 겁난다"



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에 12시 20분께 생긴 싱크홀로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79%는 "나도 피해자 될 수 있다" 불안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도권 주민 95% 이상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4일 수도권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싱크홀 발생에 대한 인식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pm 3.1\%P$)를 했다.

조사결과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말에 '매우 불안' 53.5%, '불안' 41.7%로 답해 95.2%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55.1%, '매우 그렇다' 24.5%로 답해 79.6%가 잠재적인 싱크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홀 발생시 가장 위험한 장소로는 '번화가'와 '출·퇴근시'를 꼽았다.

싱크홀 증가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증가' 34.3%, '증가' 63.2%로 답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는 홍수·태풍 다음으로 싱크홀을 꼽았고, 폭염·가뭄, 황사, 산사태가 뒤를 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기초벽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창문이나 방문이 작동되지 않는 등 싱크홀 징후가 나타나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과천·부천·안산·의정부·평택에서 각 1곳, 안성에서 11곳 등 총 16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군 병영시설 15%...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떨어지고 있다"



군별 병영시설들 중 148 Bq/m³ 초과율 [그래프=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당초 알려진 498개 군 부대보다 라돈농도 기준치 초과 더 많다
국방부, 라돈저감 추진...환경부에서 미 조사한 2000여 동 실태 파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윤일병 사건 후 군 인권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라돈' 농도도 관리 기준치를 넘는 등 병영시설 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윤일병 사건 후 군 인권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라돈' 농도도 관리 기준치를 넘는 등 병영시설 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 부터 건네받은 '2013년 전국 병영시설 라돈 실태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498곳이 환경부의 라돈 농도 관리 기준(148벵크렐)을 초과했다.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전체 3357곳 중 15%가 148베크렐(Bq/m³)를 초과했으며 50Bq 이상 초과하는 곳이 273곳(8%), 200Bq 이상 초과하는 곳도 67곳(2%)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977Bq은 기준농도의 13배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다수에 선진국들은 주택 내 라돈농도 관리기준(미국은 주택보수 필요 조치기준 1m³당 148Bq)을 마련했으나 국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곤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군부대의 라돈 농도 수치는 환경부 기준 148Bq를 초과하는 등 군내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낙후된 병영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도 엉망인 셈이다.

라돈은 일정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으로 결국 목숨을 앗아 가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폐로 유입돼 방사선을 방출하는 등 폐암을 일으킨다.

이자스민 의원은 “결과 보고서 내용 중 환경보건학적으로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오랜 시간의 노출은 고농도의 오염물질의 짧은 시간 노출에 비해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며 “병영시설의 건강한 환경관리는 군장병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부·국방부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라돈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계자는 “토양라돈 배출장치·외부공기 유입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내장) 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 등 적용 가능한 라돈저감방법이 추천된다”며 “병영시설에 이 방법을 표준지침서로 활용하는 등 병영시설의 라돈저감을 위한 공법의 메뉴얼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지만 군부대 대책은 환경부 소관이 아닌 관계로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라돈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환경부에서 미조사한 2000여 동에 대해서는 국방부 주관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금년 7월부터 추가로 실시했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라돈 저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2014년 08월 20일 수요일
019면 정책

‘라돈’에 병영시설 무방비 노출

24%가 기준 초과 법 관리 사각지대

병영시설 24%가 라돈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폐암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영시설 라돈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영시설 3357곳 중 838곳인 24%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중 라돈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화관 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가 148베크렐(Bq/m³)을 초과하면 안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권고 기준을 근

소하게 초과하는 곳이 498곳(15%), 기준을 50베크렐(Bq/m³) 이상 초과하는 곳이 273곳(8%), 200베크렐(Bq/m³) 이상 초과하는 곳이 67곳(2%)이었다. 게다가 권고 기준의 13배에 달하는 1977베크렐(Bq/m³)을 기록한 병영시설도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보건학적으로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고농도의 오염물질의 짧은 시간 노출될 때보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며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력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병영시설의 경우 아직 법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라돈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 이르면 올 하반기에 라돈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매일경제

2014년 08월 20일 수
A30면 사회

전국 싱크홀 19곳

국토부, 현장조사

2년간 53곳 발견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새서 잇따라 동공이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이 일대를 포함해 전국 19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가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한 송파구와 강동구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현장 6개소에 대해 우선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설계, 시공과정에서의 지반조사와 계측관리를 비롯해 안전관리, 예방대책 등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이 발생한 곳에서 토사 유출량을 조사한 뒤 공사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11월 초까지 싱크홀 전반에 대한 예방 대책과 개선안을 내놓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4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장원주·김정환 기자

세계일보

2014년 08월 20일 수요일 013면 사회

피지도 못하고... 아동 학대로 상반기 9명 숨져

올 8928건 신고... 경기 2051건 최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올해 상반기에만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고 아동 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이

자스민 의원이 1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총 9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고 이 중 1세 미만 영아가 4명이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1년 13명, 2012년 10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만 벌

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중 5명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 학대'로 목숨을 잃었고 3명은 방임, 1명은 신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만146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 지난해 1만

30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928건이 신고됐다. 경기도가 20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22건, 전북 755건, 경남·경북이 각 5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 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시설 확충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2014년 08월 21일 목요일 A08면 종합

자고나면 터지는 '싱크홀 공포' ... "도심地下 50년 난개발이 화근"

NEWS 뉴스 추적

이달 들어서만 서울 송파구에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1개와 동공(지하빈 동굴) 7개가 발견되면서 도심 지하공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000년대 중후반 농촌지역에서 가끔 발생하던 싱크홀이 서울 울산 등 대도시 중심 지역에서 연이어 생겨나고 있어서다. 대도시 지하공간엔 지하철 지하차도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이 거미줄처럼 지나가고 있다. 국외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올 7월까지 2년7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537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싱크홀 등의 원인은 차차하고 지하공간 시설물 등의 현황 조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2000년대 들어 지하공간 현황파악을 시작했다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군 지역은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간 송파구서 동공만 7개
 국내 '도심 싱크홀'에 대한 우려는 지난 6~7월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서 4건의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일 방이동싱크홀에서 1km 남짓 거리에 있는 송파구 석촌동 석촌지하차도 일구부에서 폭 2.5m, 깊이 5m 가량의 지반침하가 일어났고 서울시가 이 싱크홀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공 7개를 발견



송파서 洞空 이달 7개 - "9호선 공사 탓" 추정 상하수도·지하차가 노후화, 개보수는 미흡 "취약지 지질조사 20~30m 간격 촘촘히 해야"

하면서 심각성이 부각됐다. 지난 19일엔 울산 중구 우정동 도로에서 폭 1.5m 싱크홀이 생겨났으며 20일엔 충북 단양에서 직경 3m, 깊이 10m 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송파구 싱크홀과 함께 발견된 동공 중 일부는 폭이 5~8m, 길이 80m에 달할 정도로 대형인데다 지하차도와 지하철 공사 구간 사이에 위치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동공 20cm 거리에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석촌지하차도 기둥에서도 20여군데 균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공사 탓으로 추정"

송파구에서 연이어 나타난 싱크홀과 동공 원인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그룹에 의뢰해 현장조사 등을 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위해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약한 지반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의 답변만 내놨다. 원인 규명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서울시 및 시공사가 원래 지반이 약한 것을 알면서 묵인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의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지하공간
 잇따르는 싱크홀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하공간 개발을 감안할 때 도심 개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 지하에는 29개 공공지하도시시설과 20개 노선(682km)의 지하철, 1만3000km의 하수관망 등이 들어가고 있다. 상수도관과 전력망, 지하도로와 지하상가도 있다. 대부분 196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부설·개발돼 50~60년이 지난 곳도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나 도면은 시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각 시설물이 노후화됐는데도 관리 주체별로 제때 보수·교체하지 못한 것, 일부 지역에선 부실시공했거나 비효율적으로 난개발한 것이 문제"라고 털어놨다. 롯데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그룹장도 "도심 지반침하는 매설 시설물이 낡을수록, 공사 과정에서 예방과 관리가 소홀할수록 일어난다"며 "최근 싱크홀은 굴착 채굴 등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싱크홀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다. 도심 싱크홀의 경우 복구 공사가 우선이어서 원인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합 지질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수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질이 취약한 지역은 100m마다 군데군데 지질조사를 하도록, 공사 과정에서 예방과 관리가 촘촘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정이원전기자

selemoon@hankyung.com

[이슈] 잇단 폭삭!...싱크홀 공포



▲ KBS 취재파일K 방송 캡처

<앵커 멘트>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선 길을 걸을 때 땅만 보고 걷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폭삭 꺼지는 싱크홀 현상 때문인데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전국에 싱크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파일K 이번주 이슈는 싱크홀 현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서영민 기자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녹취>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 "노후된 수도관 때문에 이런 누수 문제가 생기는데 누수 문제가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오래된 수도관을 빨리 교체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전국 상하수도관 30% 노후...싱크홀 우려"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현장 안전점검, 최근 싱크홀과 공동 등이 잇달아 발견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인근 지하철 9호선 920공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터널 굴착 장비인 실드 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상하수도관의 약 30%가 설치 후 20년이 넘어 싱크홀(지반이 밀어서 꺼지면서 생긴 큰 구멍)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 하수관 총 연장 12만 3천311km 중 설치 후 20년이상 지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하수관은 총 4만 1천820km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상수도 총 연장 17만 9천159km 중 26%에 해당하는 4만 7천714km가 설치 후 20년이 넘었고, 이 중 2만 8천82km는 24년도 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관을 모두 따지면 전체 30만 2천470km 중 29.6%인 8만 9천534 km가 낡은것이다.

이처럼 낡은 상하수도관은 도심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70곳에서 싱크홀이 생겨 5명이 다치고 6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낡은 상·하수도관에서 흘러나온 수돗물과 하수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돗물 누수 때문에 발생한 싱크홀은 17곳이며, 하수 누수로 53곳에서 싱크홀이 생겼다.

실제 지난 7월 안양시에서 발생한 가로·세로 2m, 깊이 1.2m의 싱크홀 원인이 된 노후 하수관의 경우 1974년도에 설치된 관이었으며, 같은 달 생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싱크홀도 낡은 하수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정, 싱크홀 원인 집중점검 나선다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이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에 대한 원인 점검에 나선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반이 아래로 꺼지며 구멍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부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국토교통부·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주 정책위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주재한 데 대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기 위해 마련했다”며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빠른 시일 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싱크홀 현상과 아울러 경기·전주·익산·대구 등 최근 곳곳에서 작은 포트홀(Pot hole) 등이 발견되는데 대한 원인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뚜껑 솟구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현황은 사상자 4명과 차량 파손 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 안전점검’에서 이 문제를 정밀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東亞日報

2014년 08월 23일 토요일 A10면 종합

서울 교대역 인근서도 도로 함몰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일대에서 싱크홀과 동공(洞空·텅 빈 굴)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22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달리던 승합차의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교대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는 서울 서초대로 1차로에서 도로가 함몰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함몰 지점은 교대역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함몰로 발생한 구멍은 가로 1.5m, 세로 1.8m, 깊이 1.2m 크기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지점을 지나던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가 구멍에 빠져 한동안 교통이 정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함몰 부분을 조사한 결과 최근 실시된 상수도 공사 도중 장비가 기존 하수도관을 건드려 하수가 새 나오면서 지반이 약해져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m 넘는 구멍에 승합차 바퀴 빠져 서울시 “수도관 누수로 지반 약화”

상하수도관 노후로 인한 싱크홀 2년간 70건 발생해 5명 다쳐

시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근처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최재덕 씨(66)는 “도로에 폭 꺼진 구멍을 보니 아찔하다. 내가 서 있는 인도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선 씨(28·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도로 한복판이 꺼진 걸 보니 앞으로 무서워서 버스도 못 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싱크홀 현상이 전국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하수

도 관련 싱크홀이 총 70건(상수도 17건, 하수도 53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차량 6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싱크홀은 대부분 상하수도관이 노후 화해 누수가 일어나고 지반이 유실되면서 발생했다. 대부분 가로, 세로, 깊이 1m 이하로 작았지만 일부 싱크홀은 깊이만 4m 가까이 되는 등 규모가 큰 것도 있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12년 말 기준 총연장 30만2470km인 전국 상하수도관 가운데 29.6% (8만9534km)는 내구연한인 20년이 지난 것이어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전체 하수관의 70~80%, 상수관의 30% 이상이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누수 및 지반 침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일단 30년 이상 된 상하수도관부터 시급히 보수,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유성열 기자

매일경제

2014년 08월 23일 토요일 A08면 종합

시한폭탄 노후 수도관 교체율 0.9% 불과

<싱크홀 주원인>

석촌지하차도 무더기 동공 “시공사 과실 때문” 잠정결론

최근 서울 송파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거대 동공이 발견되며 싱크홀(도로 침하)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포감은 서울시민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국 곳곳에서 53곳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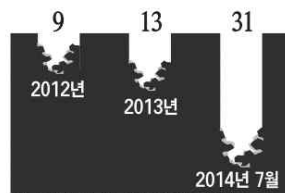
경기 안성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곳), 강릉·군산(7곳), 정선(5곳) 등에서도 지반 침하 공포감이 컸다. 문제는 싱크홀 발생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이후 정부가 파악한 싱크홀만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한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23%가 최근 두 달 새 집중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전국 상수관 18%가 30년 묵은 노후관

싱크홀이 발생하는 최대 원인은 노후 수도관 누수다. 지하에서 물이 새자 지반이 쪼려 내려가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전국 53곳 싱크홀 가운데 하수 누수에 따른 지반 유실이 41곳으로 전체 발생 원인의 77%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싱크홀과 동공 발생이 잦은 서울 지역 하수도관 전체의 48.4%가 30년 이상 묵은 노후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설한 지 3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은 총 5023.3km에 달한다. 서울-부산 간 직선 거리(350km)를 7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다. 통상 수도관 내구연한은 20~30년이다. 내구연한을 훌쩍 넘는 하수관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면서 하수 누

최근 3년간 전국 싱크홀 발생건수 (단위=건)



*자료=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 환경부

수에 따른 지반 침식 위험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 노후관이 문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교체 예산이 막대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노후 수도관 교체율은 0.9%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관 17만4157km 가운데 18.1%인 3만1503km가 30년 이상 묵은 노후관으로 급격하게 부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곳곳이 취약 지반…싱크홀 강남권 확대

취약 지반에 대한 조사 없이 마구잡이식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일경제가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송파구, 여의도 일대는 층적층(모래, 자갈로 구성된 취약층) 지질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지역에는 대형 싱크홀과 동공이 집중됐다.

송파구는 석촌호수에서 수서역-북정역 인근까지, 여의도는 전역이 취약층으로 분류됐다. 도곡역 인근에서 양재천 일대 등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강남권 상당 부분도 층적층 지질로 구성됐다.

실제 최근 송파구 일대에 집중됐던 싱크홀이 다른 강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 3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 한복판이 함몰돼 승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멍의 크기는 가로 1.5m, 세로 3m이고, 깊이는 최소 1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합차는 앞바퀴가 구멍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설 관련 전문가는 “수십 년간 도심이 발전하는 시기에 전력망, 상수도관 등 난립 공사를 했던 게 현재 도로 침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촌지하차도 아래 지하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동공은 터널을 뚫은 시공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구성한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박정근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교수는 22일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공사 품질 관리에 실패한 것이 동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물산 등 시공사가 실드(Shield) 공법을 채택했으나 시공 능력이 부족했다”며 “공사를 하면서 애초에 계획한 양보다 많은 흙을 지상으로 배출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원주·김정환 기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이자스민 의원 의사진행발언(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정부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7천38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연 2회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자치단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961억원에 달했다.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천억원이었다. 이어 경기 1천297억원, 부산 526억원, 인천 497억원, 대구 424억원, 경남 371억원이었다.

이처럼 체납액이 쌓여 있지만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변호판영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없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체납자를 상대로 납부 독려를 하려고 해도 기초지자체의 담당 인력마저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건수는 3만318건, 금액으로는 78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13건), 부산(9건), 인천·광주(6건), 강원(5건), 대구(3건) 순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천389억...서울 2천억 최다

정부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스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천 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합니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 961억원에 이르렀으며,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만 318건, 금액으로는 7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아 2천억 원에 이르렀고, 경기 297억 원, 부산 526억 원, 인천 497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자치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8억...서울시, 2000억으로 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못 받은 부담금은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은 7388억1800만원이었다.

이 중 서울시의 부담금 1999억 5963만원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경기도가 1296억541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각 지자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961억원에 달했다. 이어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변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만 7천억원 "

환경오염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7천억원 이상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까지 체납액이 7천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로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하고 징수실적의 1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천961억원에 이르렀고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처럼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변호관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자치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7389억원

서울시 약 2천억원 '1위'

매연, 온실가스 등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공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2번씩 부과한다.

부담금은 국가 환경 관련 사업에 쓰이는 국세지만, 지자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961억원에 달했다.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1999억5963만7140원으로 1위였다. 경기도 역시 1296억5415만5470원으로 체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

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지자체에 없어 문제”라며 “게다가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부담금 대상 업체 폐업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지자체가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의무 공개 추진"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캠프에 참여 중이던 충남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실시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은 빠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을 끝낸 이후라도 그 결과를 모르게 되면 이용자는 안전이 미흡한 시설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한성·유승민·김희선·이완영·황인자·박인숙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몇 대 안 되는 전기차 충전기, 그마저도 고장



▲ SBS 방송 캡처

<앵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왔지만 정작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전기 5대 중 1대꼴로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이 났고 이마저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36대입니다.

전기차를 타고 도심에 있는 충전소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급속충전기 1대의 안내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고장 났다는 안내나 연락처도 없습니다.

[전기충전소 설치 기관 관계자 : ((충전기) 작동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여쭙보려고요.) 우리 전기충전기 안 되죠 지금?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3년 전 보급한 전기차 충전소 정보시스템 앱을 검색해 고장 난 것으로 표시된 충전소를 가봤습니다.

앱에서 알려준 정보와 달리 충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EV 급속 충전기입니다.]

[김경배/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정책실장 : (앱에)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오겠죠. 충전이 필요해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정보 앱의 내용이 틀렸던 겁니다.

실제로 자치단체나 민간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충전기는 1천800대에 달하는데, 환경부는 고장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환경부가 직접 보급한 충전기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5대 중에 1대꼴로 작동을 안 하거나 고장 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자스민/새누리당 국회의원 :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현재 정부와 민간의 이원화 돼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이후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230억 원에 달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기 설치를 확대해왔지만 주무 부처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2014년 09월 10일 수
A20면 사회

미세먼지 기준치 50% 초과 수도권 지하철 '건강 빨간불'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실내 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출퇴근 시간대에 미세먼지(PM-10) 등 발생량이 정부 권고기준치를 수시로 웃돌았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 권고기준치 초과율은 겨울철 평상시에 44%를 기록했고, 인천 지하철은 겨울철 혼잡 시에 50% 초과율을 보였다.

한국경제

2014년 09월 10일 수요일 A25면 사회

미세먼지 '등등' ... 숨쉬기 겁나는 지하철

서울 기준치 초과비중 44% ... 인천은 63%
 환경부, 실태조사 ... 겨울철이 오염도 높아

서울과 인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의 실내 공기질이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발생량이 정부의 권고 기준치를 수시로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치 초과율은 겨울철 정상 시에 44%(18번 측정 중 8번)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 지하철의 겨울철 정상시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율은 63%, 혼잡시(주중 오전 7시30분~9시30분, 오후 6~8시)에도 50%로 높았다.

미세먼지는 매우 작은 입자로 돼 있어 사람 목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 먼지가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가 정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상시 미세먼지 권고 기준치는 200 μg (마이크로그램)/ m^3 이하, 혼잡시는 250 $\mu\text{g}/\text{m}^3$ 이하다.

겨울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것과 관련, 보고서는 지하철 외부 측 도시 전체의 미세먼지 오염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신 거



울철 승객의 옷차림이 두꺼운 탓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 등으로 실

내 공기 순환과 정화가 이뤄지지 때문에 겨울철보다 기준치 초과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서울 지하철에서 겨울철 혼잡시 42%, 정상시 33% 기준치를 초과했다. 여름철에도 혼잡시 22%, 정상시 33%의 초과율을 기록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500 $\mu\text{g}/\text{m}^3$ 이하)를 적용했다.

보고서는 지하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 장치의 청결을 유지하고 혼잡시간대 환기시스템 가동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가 양호한 운행구간에서는 외부 공기를 적극적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 운행하는 차량은 실내 온도를 높이고 충분히 환기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형주기자 ohj@hankyung.com](mailto:ohj@hankyung.com)

[단독]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업 9곳뿐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그룹은 9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은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약 14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그룹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지난해 기준 2.5%)을 준수한 그룹은 9개 기업이었다. 나머지 21개 그룹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위:%)	2010~ 2011년	2012~ 2013년	2014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3	3
민간사업주·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30	2.50	2.70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30	2.50	3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국가·지자체 제외)을 지급하고 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 집단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민간기업 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만원)

기업집단명	*장애인고용률	2013년	2014년
삼성	1.86	135억6000	142억9700
SK	0.88	52억5500	62억4600
LG	1.55	131억6300	136억8900
포스코	1.97	20억5100	25억원
GS	0.95	40억7100	46억6300
농협	1.56	15억8000	22억2900
한진	1.07	29억5800	38억5800
한화	1.57	29억5900	29억8700
KT	1.99	25억300	30억1500
두산	2.13	9억3900	11억8700
신세계	1.50	26억8900	18억2500
CJ	1.95	29억4200	32억7300
한국석유공사	2.06	5300	8700
LS	1.53	8억9700	11억8300
금호아시아나	1.59	14억8200	18억600
동부	1.17	21억300	24억9100
대림	0.88	11억800	14억9300
부영	0.59	1억8400	2억400
현대	0.88	9억5900	10억8300
OCI	1.38	7억1200	7억1200

※*는 2013년 말 기준

민간 그룹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개였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55%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LG는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LS 11억8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100만원 △대림 14억9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300만원 △OCI 7억1200만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장애인 고용의무, 30대 기업 3곳중 1곳만 준수 "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이 9개 기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해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9개 기업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차, 롯데 등 4개사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의무고용률 1.86%를 기록해 올해 142억9천7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LG역시 136억8천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밖에도 SK 62억4천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천300만원, 한진 38억5천800만원, 한화 29억8천700만원, KT 30억 1천500만원, 두산 11억8천700만원, 신세계 18억2천500만원, CJ 32억 7천300만원, LS 11억 8천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천100만원, 대림 14억9천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천300만원, OCI 7억 1천200만원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4년 09월 13일 토요일
A18면 사회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금 내면 그만?

30대기업중 준수기업 9개 불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과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 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2.5%)을 준수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에는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반면 삼성(1.68%), LG(1.55%), SK(0.88%)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

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LG와 SK도 각각 136억8900만원과 62억460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삼성·LG·SK 이외에도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등 재계 순위 30대 기업 대부분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재용 기자

내일신문

2014년 09월 16일 화요일
019면 정책

“학교내 성희롱 문제 심각”

인권위 진정사건중 기업 제외하면 1위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성희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진정사건 내역’ 분석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2012년 228건에서 지난해 241건, 올해 8월까지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회사 등 기업을 제외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가 제일 높다는 점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2012년 21건, 2013년 26건, 2014년 8월까지 2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개인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다. 개인회사에서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2012년 24건, 2013년 37건, 2014년 8월까지 27건 등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및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률은 매년 100%에 가깝다. 2011년 99.1%, 2012년 99.7%, 2013년 99.9% 등이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 평가시 반영 △미이행 사실 등에 관해 언론기관에 공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교재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해 다른 강사들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성희롱 문제로 진정한 남성은 2012년 9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8월까지 15건으로 나타났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 YTN 방송 캡처

[앵커]

과거 건축 자재로 많이 쓰였던 석면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지 이미 오래됐죠.

그런데도 아직 석면을 사용하는 건물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은 10곳 가운데 4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전기절연성과 내열성이 좋아 건축자재로 이용돼 온 석면.

하지만 미세한 섬유질인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970년대 이후 밝혀지기 시작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보호돼야 할 아동이나 노인 생활시설에서 이 석면의 사용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 복지시설 2천603곳 가운데 37%인 961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복지와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시설, 노인 복지 시설 순이었습니다.

개인 주택이나 오피스 건물에 석면 사용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가 석면의 최대 피해자로 남은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천4백여 명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동·노인시설 10곳 중 4곳 '석면 건축물'

노유자 시설 2천603곳 중 961곳 석면건물...경기, 부산, 서울 순 많아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잇따라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천547곳 중 2천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천426명이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 앵커멘트 】

아동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을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시설보다 안전해야 할 곳이 오히려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근로 복지시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지어진 곳이 전국에 4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아동 관련 시설 345곳,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 시설 193곳도 석면을 사용했습니다.

10곳 중 4곳 정도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셈입니다.

석면은 호흡기 질환과 폐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석면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부산, 서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교 76%의 교실 천장에 석면이 들어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를 발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석면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장애인·노인시설 10곳 중 1곳 '석면 검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습니다.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 어린이집도 사용 · · · 지역별 석면 건물 분포 보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석면이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426명이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아동·장애인·노인시설 37% '석면 노출 사각지대'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노유자 시설 3천547곳 중 2천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 37%가 석면을 함유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이 345곳, 노인복지 시설 193곳 등 순이었습니다.

아동·장애인·노인시설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10곳 중 4곳

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잇따라 검출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가량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m²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된다.

'소리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나 악성 피종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는 1426명이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됨에도 올 상반기에만 58억원이 부정수급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천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천600만원(2만7천303명)에서 2012년 112억7천200만원(2만949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천100만원(2만1천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7천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8천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도 신고 포상금은 1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 58억 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이 올 상반기에만 5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실업 급여 수령 자격이 없는 사람 만 806명이 실업급여 58억 7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여 원에서 2012년 112억 7천여만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17억 7천여만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또 실업급여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2011년 2억 7천만 원에서 지난해 3억 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자스민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58억원”

올 상반기에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600만원(2만7303명)에서 2012년 112억7200만원(2만949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100만원(2만1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70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도 신고 포상금은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900만원

【밀양=뉴스시스】 안지율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됨에도 올 상반기에만 58억원이 부정수급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와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부정수급과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1만 806명이 58억 7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갔다.

경남지역은 올 상반기 655명에 4억 90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 5000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1년 219억 5600만원(2만 7303명)에서 2012년 112억 7200만 원(2만 949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117억 7100만원(2만 1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경남지역은 2011년 1492명에 11억 5900만원에서 2012년 1042명 5억 5300만원, 2013년 4명에 7억 3200만원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 23명에 4억 9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 70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이다.

경남은 2011년 1억 9248만원에서 2012년 2억 5065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2013년 2억 4611만원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 2억 5252만원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 신고 포상금은 1억 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 " 상반기 실업급여 58억원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부정수급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1만800명이 58억7천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징수액 등 64억 5천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천600만원에서 2012년 112억7천2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17억7천1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2011년 2억7천만원, 2012년 2억8천만원, 2013년 3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만도 1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14년 09월 30일 화요일 002면 종합

“신체학대, 훈육이라 착각해 심각... 범죄라고 인지해야”

지난해 3160건 발생
전체학대 30% 차지

||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지난해에만 3160건이 발생, 전체 아동학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서학대·성학대·방임 등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 피해자가 폭행과 체벌을 교육의 일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증상

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건수는 3160건(30.9%)으로, 3843건(37.6%)이 발생한 정서학대 다음으로 빈번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발한 것도 질곡 및 울산에서 발생한 신체학대 사건이었다.

특히 신체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학대행위 자체가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육'이나 '사랑'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신체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가운데 반항·거짓말·도벽 등의 '적응·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42.4%, 주의산만·과잉행동·계집증독 등의 '정서·정신건

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32.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자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폭행을 훈육의 일종이라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잦다.

또 신체학대는 아동의 증상해 및 사망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학대로 숨진 총 9명의 아동 가운데 5명이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등 중복 학대로, 1명은 신체학대만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소유욕과 체벌을 허용하는 한국의 그릇된 문화가 만나 발생하는 최악의 학대가 바로 신체학대"라며 "신체학대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체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아동·노인시설 40% 석면 검출

도내 145곳중 54곳...사회적 약자 건강 위협 지적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져, 노약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노유자 시설 145곳의 40.7%인 54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석면 건축물이 가장 많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28곳)이며, 뒤이어 아동복지시설(26곳), 기타 노유자시설(5곳) 등이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에 대한 석면 함유 조사를 끝냈다. 이 중 961곳(36.9%)이 석면 건축물로 확인됐다. 도내의 경우 조사대상 198곳 중 145곳에서 관련 조사

가 끝났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970년대 이후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인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국기자 psy2351@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추진

공공기관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서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겨우 2곳 만이 장애인 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게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 며 "관련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그동안 민간기업 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한성·윤명희·홍철호·박윤옥·유승민·조명철·이예리사·이완영·김태흠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공공기관 의무화 법안 발의”

민간 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 및 인식 개선 교육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이자스민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겨우 2곳 만이 장애인 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간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법안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한성, 윤명희, 홍철호, 박윤옥, 유승민, 조명철, 이에리사, 이완영, 김태흠 의원이 함께했다.

이자스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민간기업들이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결과를 점검해 공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간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한성, 윤명희, 홍철호, 박윤옥, 유승민, 조명철, 이예리사, 이완영, 김태흠 의원이 함께했다.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 포장' 3년 간 577건"

국내 제과 업체들의 과대 포장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5백 7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과 업체들이 포장 규정을 어긴 사례는 모두 5백 77건이었고,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1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포장 횡수나 포장 공간 비율에 대한 규정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 방지를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국내 제과업체들이 과대 포장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5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 위반 건수는 577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경우는 포장 횡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또 수입 과자의 경우, 질소에 의한 과대포장 위반 사례 6건이 올해 처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과자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자스민 "국내 제과업체 과대포장 3년간 570건 적발"

국내 제과업체들이 과대 포장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5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과류 과대포장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위반 건수는 577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6천만원에 달했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경우는 2011년 159건(과태료 3억7천551만원), 2012년 227건(과태료 5억2천188만원), 2013년 191건(과태료 5억6천410만원) 등으로 포장 횟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다.

또 수입된 외국 과자제품의 경우에도 질소에 의한 과대포장 위반 사례 6건이 올해 처음 적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과자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4년 10월 04일 토요일
009면 사회

비진학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업종별 근로실태

업종	시간당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했다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적 있다	시간 외 임금을 못 받았지만 그냥 참고 일했다
24시간 편의점	4668원	41.6%	31.2%	57.1%
빵집	4687원	45.2%	28.6%	50.0%
패스트푸드점	4757원	77.3%	18.2%	37.5%
커피전문점	4987원	45.9%	24.3%	37.5%

자료: 고용노동부

청소년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패스트푸드·빵집·커피숍 4곳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41% 최저

세종=윤지희 기자

집 나간 아버지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는 A양(19)은 대학에 가는 대신 돈을 번다. A양은 시급 5210원, 즉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공고한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A양은 근무 첫날 “시급은 3800원이고 원래 편의점들은 시급 제대로 쳐주는 곳이 없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유명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들에는 편의점 알바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넘친다. 약속한 것보다 더 일하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고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비진학청

소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4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이 가장 나쁜 알바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만 14~23세의 고교·대학 비진학 청소년 가운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빵집,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4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6.6시간, 근무시간은 49.5%가 오후 6시~밤 12시였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4750원으로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점은 가장 낮은 4668원, 빵집은 4687원, 패스트푸드점은 4757원이었고 커피전문점만이 4987원으로 최저임금을 넘겼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편의점 비율이 41.6%로 4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또한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비율(31.2%)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27.3%)이 가장 높았다.

"도산 사업장 93%,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은 2665곳이었는데, 이 중 약 93%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기업도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산 사업장은 △2011년 2541곳 △2012년 2514곳 △2013년 2665곳이었다. 올해 도산한 사업장은 1584곳(7월 기준)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347곳 △2012년 2337곳 △2013년 2484곳으로 전체의 92.3~93.2%를 차지했다. 올해는 1476곳이 도산해 전체의 93.2%를 점유했다.

한편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572곳(21.4%) △건설업 387곳(14.5%) △도·소매업 260곳(9.7%)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805곳(30.2%) △경기도 721곳(27.0%) △경상남도 180곳(6.7%)순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자스민 의원 " 지난해 도산사업장 93%가 50인 미만 "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도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산한 사업장 2천665곳 중 9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21.4%, 건설업 14.5%, 도소매업 9.7% 순이었고, 시도별로는 서울시 30.2%, 경기도 27%, 경상남도 6.7% 등이었다.

올들어 7월까지 도산한 사업장은 1천584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 전망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등 경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런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도산기업 10곳 중 9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난해 도산한 2665개 업체 중 93%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로 조사돼 영세사업장들이 영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도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산한 사업장은 지난 2011년 2541개 업체, 2012년 2514개 업체, 2013년 2665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1584개 업체가 지난 7월까지 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347개 업체, 2012년 2337개 업체, 2013년 2484개 업체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7월까지의 1476개 업체로 전체의 93.2%를 점유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572개 업체(21.4%), 건설 387개 업체(14.5%), 도·소매 260개 업체(9.7%)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805개 업체(30.2%), 경기 721개 업체(27.0%), 경상남도 180개 업체(6.7%)순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한 사업장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자금조달, 기술개발, 인력 확보 등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2014년 10월 06일 월요일
008면 경제

4년간 폐업사업장 92%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서비스·건설업 가장 많아

최근 4년 사이 도산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기업도산 현황 자료를 보면 도산한 사업장은 2011년 2541곳에서 2012년

2514곳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에 2665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도산한 사업장은 1584곳으로 현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 도산한 사업장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 2347곳, 2012년 2337곳, 2013년 2484곳으로 전체의 92.3~93.2%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자스민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기질 우려 수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실내놀이터 62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유해물질별 기준 초과율은 폼알데하이드(HCHO)가 37.3%(110개 지점 중 40개 지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산화탄소 26.2%(122개 지점 중 32개 지점), 미세먼지(PM10) 12.1%(107개 지점 중 13개 지점) 등의 순이었다.

유해화학물질로 심하면 신경계 장애와 암까지 유발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기준 초과율도 9.3%(107개 지점 중 10개 지점)에 달했다.

현재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5종이다.

이 가운데 한 종류만 기준치를 넘어도 공기 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수 실내놀이터에서 무려 4종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아울러 124개의 측정지점 중 9개의 지점에서는 흡연(담배연기)의 지표물질로 알려진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실내놀이터는 정부의 실내공기질 의무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내놀이터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내놀이터 공기 중 오염물질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내 놀이터 62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HCHO) 기준치 초과 비율은 37.3%, 이산화탄소 26.2%, 미세먼지(PM10) 12.1% 등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기준 초과율도 9.3%에 달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유지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오염물질은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5종이다. 이 중 한 종류만 기준치를 넘어도 공기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다수의 실내놀이터에서 무려 4종의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것이다.

124개의 측정지점 중 9개의 지점에서는 흡연(담배연기)의 지표물질로 알려진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실내놀이터는 정부의 실내공기질 의무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실내놀이터 주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정부가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두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는 빠져 있는데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곳이 다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내놀이터 62 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유해물질별 기준 초과율은 폼알데하이드(HCHO)가 37.3%(110개 지점 중 40개 지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산화탄소 26.2%(122개 지점 중 32개 지점), 미세먼지(PM10) 12.1%(107개 지점 중 13개 지점) 등의 순이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심하면 신경계 장애와 암까지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이 물질의 기준 초과율도 9.3%(107개 지점 중 10개 지점)에 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해외생수 소비 5.8배 증가...국내제품 1.2배 증가에 그쳐

최근 4년간 국내 생수 판매량이 1.2배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해외생수 판매량은 5.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284만6000t을 기록한 생수 판매량이 2013년에는 347만4000t으로 1.22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입판매업체의 생수 판매량이 국내 생수에 비해 많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 2010년 1만

2000t에 그친 판매량이 2013년에는 6만9000t으로 5.75배 증가했다.

이 처럼 국내외 생수 판매량이 모두 늘고 있지만, 먹는 물 제조업체내 품질관리인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도 품질 관리인이 될 수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이자스민, 한국 생물다양성 '빨간불'

생물다양성총회 개최를 통해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래 동식물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사진)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외래 생태종 증가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2009~2014) 국내유입 외래생물의 수가 894종에서 2167종으로 약 40% 증가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동·식물 중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것은 18종이며, 이중 2009년 이후 지정된 종이 9종으로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다. 생태 교란종 가운데 9종은 이미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을 보면 조사할 때마다 10%이상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고 있다. 1998년에 194종, 2005년 221종, 2012년 246종으로 늘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래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생태교란종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외래생물들의 서식범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데 체계적인 퇴치사업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공조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관리 소홀로 최근 급증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 27명의 근로자가 7천 백만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2012년에는 52명이 1억4천만 원,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 원을 부정하게 받아 2년 사이 약 17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2011년 이후 단 4차례만 지급됐습니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금 줄줄 샌다

2년새 체당금 부정수급 17배↑...신고포상 고작 4차례
이자스민 의원 "유명무실한 신고포상제 정비해야"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관 리 소홀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 구실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 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 듬해인 1998년 7월부터 도입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2년 사이 약 17배 증 가했다.

2011년 27명의 근로자가 7천1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2012 년에는 52명이 1억4천만원,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원을 부정하게 받 아 2년 사이 약 17배가 늘었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2011년 이 후 단 4차례만 지급됐다.

연도별로 신고 포상금은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3건 지급됐 다.

이에 따라 체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보 장기금 재원인 사업주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났다.

2012년에는 사업장 39만곳이 160억원, 2013년에는 43만곳이 210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7월 현재 체납 사업장은 50만곳이며 체납액은 240억원 에 달한다.

이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을 한층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제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자 지원' 체당금 부정수급, 2년새 17배 급증

국회 환노위 이자스민의원

지난해 12억원.. 2011년 1.4억 대비 17배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당금 부정수급 규모는 12억원(311명)으로 2011년 1억4000만원(52명)에 비해 17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2011년이후 단 4차례만 지급됐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잡월드·한국고용정보원 4곳 3% 밀돌아

고용률 70% 달성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마저 청년고용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기준을 밀도는 곳도 33%나 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개 공공기관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웃돈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16.4%) 단 한곳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잡월드는 청년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한국고용정보원(0.9%), 한국폴리텍(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1.0%) 등도 청년고용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외 근로복지공단(5.4%), 한국산업인력공단(4.5%), 한국장애인고용공단(3.0%), 노사발전재단(3.2%) 등 대부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률은 5%를 밀돌았다.

특히 12개 공공기관중 한국잡월드를 포함한 4곳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율(매년 정원의 3%이상 선발)을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준비가 미흡하고, 할당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고용노동부가 모범적으로 청년고용 채용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고용률 '낙제' 수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률이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의 청년채용 비율이 대부분 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정원이 1748명에 달하지만 청년채용은 지난해 18명, 404명 정원의 한국기술교육대학은 4명에 그쳐 각각 청년 채용률이 1%에 그쳤고, 정원 217명의 한국고용정보원은 0.9%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청년채용 비율이 10%를 상회한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 단 한 곳 뿐이었고, 한국잡월드의 경우 청년 채용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부 산하기관조차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며 "고용부가가 모범적으로 청년 고용 채용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자스민 “지난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만2천여 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과 구제 결정 건수가 해마다 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신청 건수는 2011년 만 800여 건에서 2012년 만 1400여 건, 2013년 만 2800여 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8천여 건이나 접수돼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결정도 2011년 1019건에서 지난해에는 120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 2천여 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과 인용 건수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는 전년도 이월건수 합산으로 2011년 만 848건에서 2012년 만 천444건, 2013년 만 2천 805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벌써 8천166건이나 접수돼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 또한 2011년 1천19건, 2012년 1천106건, 2013년 1천204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 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 원으로 늘어 2년 새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5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자스민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1만2천여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및 인용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전년도 이월 건수 합산)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천444건, 2013년 1만2천80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벌써 8천166건이나 접수돼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 또한 2011년 1천19건, 2012년 1천106건, 2013년 1천2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원으로 늘어 2년 새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51억원을 넘어섰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 얼마나 많길래...구제신청 해마다 늘어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구제를 신청하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전년도 이월 건수 합산)는 2011년 1만848건에서 2012년 1만1,444건, 2013년 1만2,80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8,166건이 접수돼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결정한 횟수 역시 2011년 1,019건, 2012년 1,106건, 2013년 1,20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1년 267건에 29억원, 2012년 422건에 51억, 2013년 477건에 82억원으로 늘어 2년 새 3배 가까이 뛰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형사 고발된 경우는 2011년 26건에서 이듬해 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32건으로 늘어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상시적인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2014년 10월 08일 수요일 019면 정책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실효성 높여야

**중소기업 참여율 0.005%
“인증 기준 세분화 필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만을 따져 두 갈래로 나눠 인증을 시행하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형성하는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에 응모할 때 가점을 주거나,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용자를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자료를 8일 발표했다. 국내 대기업 2916곳 중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4.94%(144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 낮은 0.005%(335만1404곳 중 183곳)였다. 지방 참여 비율도 낮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공공기관이 0곳, 울산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각 0곳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인증기준을 개정했지만, 배점과 항목이 좀 달라졌을 뿐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규모별로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인증을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소리다. 이 의원은 기업의 조직 구성 등을 감안해 인증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인증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 이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기업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해 이미 두 차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인증기준을 개정했다”며 “업종별로 인증기준을 나누는 문제의 경우 유관연구기관 등과 논의한 끝에 아직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5개를 샘플링해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실행 관련 점수를 분석한 결과, 현행 인증기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전예현 기자 aykim@naeil.com

세계일보

2014년 10월 08일 수요일 011면 사회

술 파는 키즈카페... 안전·위생 ‘사각지대’

규정 없고 관리주체 불명확
일부 놀이터선 니코틴 검출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실내 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 카페’가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

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정감사 자료에서 “키즈카페는 법률상 정식 업종명이 아니라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 안전과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키즈카페는 보통 식품접객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데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 판매 식품 위생관리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실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는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공기질에 대한 규제도 미흡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내 놀이터 62곳(124개 측정지점) 중 8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

이 의원은 “일부 실내 놀이터에서는 흡연의 지표물질인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정부의 관리와 금연구역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유해물질 무방비

정부가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지침을 두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실내놀이터는 빠져 있는데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곳이 다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내놀이터 62 곳에 설치한 124개 측정지점 중 48개 지점(38.7%)에서 기준치를 넘는 총부유세균(TBC)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유해물질별 기준 초과율은 폼알데하이드(HCHO)가 37.3%(110개 지점 중 40개 지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산화탄소 26.2%(122개 지점 중 32개 지점), 미세먼지(PM10) 12.1%(107개 지점 중 13개 지점) 등의 순이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심하면 신경계 장애와 암까지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이 물질의 기준 초과율도 9.3%(107개 지점 중 10개 지점)에 달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全北日報

2014년 10월 09일 목요일
006면 사회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내 최근 4년간 '월 32건'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가 최근 4년간 월평균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건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1372건이다.

이 기간 내려진 구제명령은 구제신청의 11.8%(16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151건으로 나타났다. 최명국기자

총청투데이

2014년 10월 09일 목요일
009면 경제

임금체불 근로자지원금 ‘줄줄’ 2년새 부정수급 17배 늘어나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관리 소홀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당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은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7월부터 도입됐다. 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2년 사이 약 17배 증가했다. 2011년 27명의 근로자가 7천1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2012년에는 52명이 1억4천만원,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원을 부정하게 받아 2년 사이 약 17배가 늘었다. 연도별로 신고 포상금은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3건 지급됐다. 연합뉴스

기상청, 3년간 100억 성과급 평평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최근 3년간 100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오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고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등 소속기관이 받은 성과급은 올해 36억 8천여만 원, 지난해 36억 3천여만 원, 2012년 30억 5천여만원 등 총 107억 254만원에 달합니다.

이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직개편과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청 · 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이자스민 의원 국감서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10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았다.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음주운전·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경고·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들은 2011년 8명,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7월 현재까지 1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등 소속기관이 받은 성과급은 2014년 36억 8천여만원, 2013년 36억 3천여만원, 2012년 30억 5천여만원 등 총 107억 254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상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 · 소속 기관 3년간 100억 성과급 잔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10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았다.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음주운전·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경고·주의조치를 받은 임직원들은 2011년 8명, 2012년 10명, 2013년 10명, 2014년 7월 현재까지 1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 등 소속기관이 받은 성과급은 2014년 36억8000여만원, 2013년 36억3000여만원, 2012년 30억5000여만원 등 총 107억254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상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기상청 해킹시도 3년 새 20배 증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49건에 불과했던 해킹시도가 2013년 966건으로 20배나 증가했다"며 "기상청이 디도스 등 각종 해킹공격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 해킹을 시도한 경우가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47건), 중국(438건), 네덜란드(312건), 인도(1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킹공격 시도를 유형별로 보면 올해는 디도스 21건, 웹 해킹 353건, 비인가 접근 197건, 바이러스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0년 사이버보안센터를 발족해 24시간 보안 관제 업무를 하고 있지만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등 보안시스템이 뚫리는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보안센터의 보안 관제 업무를 외부 용역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보보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010면 사회

기상청 3년간 107억 성과급 잔치

기관평가선 최하등급 불구하고
연구용역 유관기관 몰아주기도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와 성과급 잔치, 날씨예보 오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과 소속기관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3년간 100억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퇴직 임원 다수가 재취업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에 기상청이 발주한 교육용역을 전부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는 전직 기상청장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장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기상청장 등 기상청 출신 퇴직자 8명이 재취업한 이 재단법인인은 2011년 이후 기상청이 발주한 교육용역 사업 93건(약 50억원)을 100% 수주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이 재단법인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라고 기상청에 요구했고, 기상청은 지난 2일 교

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기상청은 지정 취소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달 17일 1억610만원의 ‘외국인 기상예보관 초청연수 운영사업’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과 소속 기관이 지난해 감사원의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107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에 못 미친 78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상특보 8714건 중 2779건(31.9%)이 틀렸다고 밝혔다. 특히 해일 관련 특보의 경우 전체 17건 중 4건만 맞았던 것으로 나타나 정확도가 23.5%에 그쳤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도 기상청의 ‘기상청 예보 정확도 강수유무’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된 기상청의 비 예보 실패율이 평균 39.5%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월 현재 지진 관측장비 총 127곳 중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장비가 절반에 가까운 53곳에 이른다고 지진예보 기초장비의 노후문제를 제기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위반율 2012년 31.3%, 2013년 31.2%, 올해 상반기 32.9%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천402곳 중 1천378곳(31.3%)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다. 2013년에는 3천48곳 중 952곳(31.2%)이, 2014년 상반기에는 1천728곳 중 569곳(32.9%)이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6.8%, 올해 상반기 4.4%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천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45만 134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해마다 30%을 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천402곳 중 31.3%인 천378곳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고, 지난해에는 31.2%, 올해 상반기에는 32.9%가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올해 상반기 19.8%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곳 중 3곳 외국인 고용법 위반

외국인 채용사업장 점검 결과

작년 3048곳 중 952곳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402곳 중 1378곳(31.3%)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다. 작년에는 3048곳 중 952곳(31.2%)이, 올해 상반기에는 1728곳 중 569곳(32.9%)이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6.8%, 올해 상반기 4.4%였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45만134명으로 늘었다.

허연희 기자/okidoki@heraldcorp.com

이자스민 "3년간 수질오염사고 369건 발생...3년간 2배 증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가 3년 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4일 환경부 소속 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수질오염 사고는 2012년 82건, 2013년 15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서는 7월 현재 130건으로 전년 대비 85%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0건 이상의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장소별로 보면 2012~2013년을 기준으로 원주청, 대구청, 한강청, 금강청, 낙동강청, 새만금청 순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증가했으며, 영산강청은 유일하게 사고가 감소했다. 올 7월까지를 더하면 한강청의 수질오염사고가 2012년 15건에서 올해 60건으로 4배 증가해 타지역을 압도했다.

아울러 3년간 발생한 사고내역을 보면 전체 36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56건(42%)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형 사고였다. 61건(17%)은 원인미상으로 보고됐는데 대부분이 어류폐사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수질오염사고 내용의 42%가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형 사고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수백 수천마리가 죽은 어류폐사 사고의 대부분이 '원인미상'으로 보고되고 있어 당국의 조사능력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준설선, 낙동강 56척 방치돼 '시한폭탄'

4대강 사업을 위해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4척이 침몰된 채 방치돼 있으며, 52척은 언제 침몰될지 모른 채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내 준설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낙동강에는 모두 56척의 준설선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낙동강 상류·중류에 26척이, 하류에는 30척의 준설선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설선이란 강·운하·항만·항로의 깊이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한 준설 작업, 물 밑의 흙·모래·광물 등을 채취하는 배로, 수중구조물 축조의 기초공사, 해저 폐기물을 끌어올려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폐업신청을 한 준설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하여 육지로 반출하고 있으나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준설선은 반출을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선주들은 인양비가 1척당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들어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침몰선 선박주를 고발을 했으나 무혐의로 결정이 나기도 해 청은 우선 침몰선을 인양하고 배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할 준설선 26척 중 21척을 올해 안까지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관할 준설선 30척 중 8척이 올해 안까지 인양한다는 예정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낙동강에는 침몰선을 포함해 27척의 준설선이 아직 인양계획도 없이 버려진 상태다.

특히 지난 9월 낙동강에 침몰된 4척의 준설선 중 2척에서 기름 탱크가 발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인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방치 되어 있는 준설선은 기름이나 녹 등으로 만약 표류하거나 침몰될 시에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사고가 일어나 영남지역의 취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하루 빨리 배를 인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구제역 매몰지가 위험하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구제역 매몰지 평균 점검 횟수가 갈수록 감소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10월14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구제역 매몰지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소별 평균 점검횟수는 5번이지만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균 1회로 평균 점검횟수가 가장 적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점검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관리 미흡이 412건, 배수로 미흡이 69건, 침출수 유출 의심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도에서 2011년 묻은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에서 돼지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된 결과가 나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2013년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제역 매몰지 점검실태를 살펴보면 1건의 조치사항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는 게 이자스민 의원의 입장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1년 조성된 매몰지의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점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침출수가 유출됐을 경우 주위환경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 매몰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건설현장 임금체불 4만1,250명 피해

건설업 현장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한 건설업 종사자 수는 4만1,250명으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건설업 체불 종사자 수가 6만5,01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임금체불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건설업 체불 규모는 2,452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60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조사된 체불 규모는 1,762억원이다.

산업재해도 건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재해자 수는 1만1,0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402곳 중 1378곳(31.3%), 2013년에는 3048곳 중 952곳(31.2%), 2014년 상반기에는 1728곳 중 569곳(32.9%)이 각각 외국인 고용법을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건설현장 임금체불 4만1,250명 피해

건설업 현장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으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을 당한 건설업 종사자 수는 4만1,250명으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건설업 체불 종사자 수가 6만5,01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임금체불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

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건설업 체불 규모는 2,452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605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조사된 체불 규모는 1,762억원이다.

산업재해도 건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재해자 수는 1만1,0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하위윤기자

문화일보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011면 사회

장애인 주차구역 ‘있으나마나’ 2년새 위반 과태료 부과 4.3배

시민 신고건수도 5.9배로

■ 해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늘어 지난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가 4.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만2191건이었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2년 2만8026건, 2013년 5만2940건으로 2년사이 4.3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에 의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신고 건수도 지난 2011년 1만3178건에서 2012년 3만9727건, 2013년 7만8193건으로 나타나 2년 전보다 5.9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지난 2011년 11억2646만 원에서 2012년 25억5192만 원, 2013년 47억2825만 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안전행정부가 도입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국민들의 신고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신호등 고장 신고 등 다양한 민원 신고를 받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3년 1만6976건을 기록하며 32.1%를 차지해 최다 위반 지자체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은 2011년 4195건으로 전체의 34.4%를 기록하며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3년 1만4820건으로 28%를 기록했고, 울산, 대구, 충북, 대전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신고로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키는 선진 시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기자 bigpaper@

세계일보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011면 사회

외국인 고용업체 30% 고용법 위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 피해"

지난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은 소음과 진동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6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371건을 접수해 2843건을 재정과 조정, 중재 합의 등으로 처리했다. 391건은 자진 철회로 종결됐고, 14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처리된 2843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2455건(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일조 129건(5%), 기타 50건(2%) 순이었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3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농작물 피해 179건(6%), 건축물 피해 84건(3%), 수산물 피해 54건(2%), 기타 440(15%) 등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662건(23%), 경기 654건(23%) 등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5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웃 간의 소통의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환경분쟁 86% 소음·진동 때문...2건중 1건 수도권에서

환경분쟁 10건중 8건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2건중 1건은 서울 등 수도권이 차지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처리된 2843건중 86%(2455건)가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였다. 대기오염 191건(6%), 일조 129건(5%), 수질오염 59건(2%), 기타 50건(2%) 순이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11%), 농작물 피해 6%, 건축물 피해 3% 순이다.

지역별로는 2843건중 서울 23%(662건), 경기 23%(654건), 경남 8%(215건) 순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체의 54%(1531건)을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웃 간의 소통의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대형마트 25%만 '녹색매장' 운영

범국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녹색매장' 제도가 일부 유통기업만 참여해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색매장 지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매장 506개 중 25%인 128개 매장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매장 128개 점포 중 롯데마트가 72개, 이마트가 32개, 홈플러스가 3개 참여 유통기업 간 녹색 매장 지정점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살펴보면 녹색매장은 임의 지정제로 기업의 참여 의지가 없으면 꼭 지정을 받지 않아도 돼 의지가 있는 유통기업만 참여해 친환경소비 확산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대형마트는 등장과 함께 급속한 성장으로 소비자와 제조사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매장 지정을 통해 유통사의 환경경영과 산업계의 환경경영 유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녹색제품 판매장소 의무 설치 규정을 강화하고 녹색매장 지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의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마을상수도(지하수)에서 검출된 자연방사성 물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지난 3년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라돈·우라늄·전알파(우라늄, 라듐, 라돈 등 모든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α -방사선) 등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3곳, 진안·정읍·고창·김제·남원 2곳, 임실·완주 1곳 순이었다. 특히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5곳이었으며, 1곳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 모두가 검출됐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마을상수도 7곳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무주군 무주읍 산의마을, 적상면 상비마을, 진안 동향면 새울·상전면 중기마을, 정읍 산외면 만병마을, 순창 유등면 유촌마을, 임실 오수면 둔기마을 등의 마을상수도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무주 산의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가 모두 검출됐으며, 이 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이 4642pCi/L, 우라늄이 227 μ g/L, 전알파가 44.48pCi/L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적용한 기준으로 볼 때 우라늄은 미국 기준치(우리나라 동일)의 7.6배, 전알파는 미국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 특히 전알파 수치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라돈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전국 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을상수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조사대상 1380개소 중 150곳(11%)에서 라돈, 26곳(2%)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34곳(2.5%)에서는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국립공원 대피소의 취사장과 화장실 등에 피뢰설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장산지구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 때 탐방객들에게 위험을 알릴 예·경보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공원 대피소 및 부대시설 피뢰설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8개 대피소 중 대피소 1곳과 취사장 1곳, 화장실 5곳에 피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피소 중 피뢰설비가 되지 않은 곳은 지리산남부의 피아골이며, 취사장은 세석 대피소다. 또 화장실은 장터목·세석·로타리·연하천·피아골 등이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은 벼락 발생 때 주변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대피소에 피뢰설비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탐방객 안전을 위해 피뢰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장산 지구에는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공원 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4개 국립공원 중 내장산지구에는 경보시설이 없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이후 재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2018년까지 노후 된 장비에 대해 80%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12곳의 국립공원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외출자제 권고 무색

황사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실외보다 실내가 최대 2배 높게 나왔다. 건물 내부 공기가 인체에 더 위해하다는 이야기다.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다.

문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내리면서 외출 자제 권고령이 떨어지지만, 정작 실내 공기 질이 실외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단위: $\mu\text{g}/\text{m}^3$, 24시간 기준, 측정: 3~5월)

*현재 실내기준은 없으며 실외기준은 WHO $25\mu\text{g}/\text{m}^3$, 한국 $50\mu\text{g}/\text{m}^3$ 이하

시설 종류	실외 평균	실내 평균	실내 최대
서울			
어린이집(12곳)	43	53	97
지하철(12곳)	42	61	117
지하상가(6곳)	38	39	47
대구			
어린이집(8곳)	58	42	79
지하철(8곳)	48	57	77
지하상가(8곳)	37	39	50

자료: 환경부

15일 환경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황사철인 올 3~5월 다중시설 54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서울 지하상가를 제외한 모든 측정 장소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2배까지 높게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대구가톨릭대 양원호 교수(산업보건학)팀은 서울의 어린이집 12곳, 지하상가 6곳, 지하철역 12곳과 대구의 같은 시설 각 8곳을 측정했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PM10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초미세먼지(PM2.5)도 대구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높았다.

현재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외 즉 대기기준을 만들어 실내 공간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외기준 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 1월부터 PM2.5의 대기기준이 $50\mu\text{g}/\text{m}^3$ 로 신설돼 적용된다. WHO의 대기기준은 이보다 2배 강한 $25\mu\text{g}/\text{m}^3$ 다.

이번 측정값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할 우리나라 대기기준에 대해 실외에서는 거의 만족시킨 반면 실내에서는 오히려 절반 이상의 측정군이 이를 넘겼다. 서울의 어린이집 12곳의 PM2.5 실내 평균 농도는 $53\mu\text{g}/\text{m}^3$ 로 WHO 기준의 배를 넘었다. 약 4배인 $97\mu\text{g}/\text{m}^3$ 을 기록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측정 시 수집된 미세먼지에서는 크롬과 아연,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중금속 등 총 금속 함유량 역시 대부분의 측정군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PM2.5에 함유된 금속 양은 서울 어린이집은 실내가 실외의 2배, 서울의 지하철은 7배 많았다. 지하철은 전동차의 휠과 레일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속입자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 교수는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음식을 만들거나 사람의 부산한 움직임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와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합쳐져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환기만 강조하거나 집에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환기시설을 의무화해서 실내 발생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미세먼지 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 실내가 더 오염...환경기준 '무방비'



초미세먼지 농도 (µg/m³)		
	실 내	실 외
지하역사	52.1	59.8
실내주차장	32.8	27.8
터미널	32.5	66.3
보육시설	31.4	23.8

자료: 환경부



▲ MBC 방송 캡처

◀ 앵커 ▶

지하철역이나 주차장의 초미세먼지,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지하철역.

대기질 측정기가 매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서해정/한국환경공단 ▶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인데, 현재는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미세먼지만 쟀 것으로 이보다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 이선숙 ▶

"(공기가) 탁하다고 그럴까,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해요."

황사철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지하철역이나 주차장 등은 오히려 실내가 실외보다 공기질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자주 오가는 지하철 역이나 버스 터미널의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보다 최대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초미세먼지의 실내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중국에서 오는 황사 등 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건물 안의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 홍윤철/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질환, 그 외에도 뇌졸중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기정화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내에도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01면 종합

황사때 미세먼지 실내가 실외 2배

다중시설 54곳 조사... 외출자제 권고 무색

어린이집 기준치 최고 4배 초과
서울지하철 금속양 7배 충격
실내 기준 마련 등 대책 시급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황사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니 실외보다 실내가 최대 2배 높게 나왔다. 건물 내부 공기가 인체에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다.

문제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내리면서 외출 자제 권고령이 떨어지지만, 정작 실내 공기 질이 실외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이 따른다.

15일 환경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의 원에게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황사철인 올 3~5월 다중시설 54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결과 서울 지하철을 제외한 모든 측정 장소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2배까지 높게 나왔다.

연구를 수행한 대구가톨릭대 양원호 교수(산업보건학)팀은 서울의 어린이집 12곳, 지하철 6곳, 지하철역 12곳과 대구의 같은 시설 각 8곳을 측정했다.

입자가 작아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PM10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초미세먼지(PM2.5)도 대구의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높았다.

현재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외 즉 대기기준을 만들어 실내 공간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외기준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내년 1월부터 PM2.5의 대기기준이 50 $\mu\text{g}/\text{m}^3$ 로 신설돼 적용된다. WHO의 대기기준은 이보다 2배 강한 25 $\mu\text{g}/\text{m}^3$ 다.

이번 측정값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할 우리나라 대기기준에 대해 실외에서는 거의 만족시킨 반면 실내에서는 오히려 절반 이상의 측정군이 이를 넘

초미세먼지(PM2.5) 농도
(단위: $\mu\text{g}/\text{m}^3$, 24시간 기준, 측정: 3~5월)
*현재 실내기준은 없으며 실외기준은 WHO 25 $\mu\text{g}/\text{m}^3$, 한국 50 $\mu\text{g}/\text{m}^3$ 이하

시설 종류	실외 평균	실내 평균	실내 최대
서울			
어린이집(12곳)	43	53	97
지하철(12곳)	42	61	117
지하상가(6곳)	38	39	47
대구			
어린이집(8곳)	58	42	79
지하철(8곳)	48	57	77
지하상가(8곳)	37	39	50

자료: 환경부

겼다. 서울의 어린이집 12곳의 PM2.5 실내 평균 농도는 53 $\mu\text{g}/\text{m}^3$ 로 WHO 기준의 배를 넘었다. 약 4배인 97 $\mu\text{g}/\text{m}^3$ 를 기록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측정 시 수집된 미세먼지에서는 크롬과 아연, 납 등의 중금속도 검출됐다. 중금속 등 총 금속 함유량 역시 대부분의 측정군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PM2.5에 함유된 금속 양은 서울 어린이집은 실내가 실외의 2배, 서울의 지하철은 7배 많았다. 지하철은 전동차의 휠과 레일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속입자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 교수는 "실내의 중금속 농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음식을 만들거나 사람의 부산한 움직임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먼지와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합쳐져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환기만 강조하거나 집에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환기시설을 의무화해서 실내 발생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내에서 더 높게 나타난 미세먼지 속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마을상수도 21곳서 방사성물질

최근 3년간 라돈·우라늄·전알파 등 기준치 초과 무주6곳 가장 많아...1곳은 3개 물질 동시 검출도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마을상수도(지하수)에서 검출된 자연방사성 물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상당한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지난 3년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립 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3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라돈·우라늄·전알파(우라늄, 라듐, 라돈 등 모든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α -방사선) 등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3곳, 진안·정읍·고창·김제·남원 2곳, 임실·완주 1곳 순이었다. 특히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은 5곳이었으며, 1곳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 모두가 검출됐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마을상수도 7곳에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무주군 무주읍 산의마을, 적상면 상비마을, 진안 동향면 새울·상전면 중기마을, 정읍 산외면 만병마을, 순창 유등면 유촌마을, 임실 오수면 둔기마을 등의 마을상수도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무주 산의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우라늄·전알파가 모두 검출됐으며, 이 마을 지하수에서는 라돈이 4642pCi/L, 우라늄이 227 μ g/L, 전알파가 44.48pCi/L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적용한 기준으로 볼 때 우라늄은 미국 기준치(우리나라 동일)의 7.6배, 전알파는 미국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 특히 전알파 수치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라돈 및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 하고 있다"면서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기준치 설정과 더불어 대체 상수원 공급 등의 조치가 병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전국 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마을상수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조사대상 1380개소 중 150곳(11%)에서 라돈, 26곳(2%)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34곳(2.5%)에서는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엽기자 colorgogum@

全北日報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002면 종합

도내 일부 국립공원 안전사고 위험 노출

지리산, 대피소·취사장·화장실 파괴설치 미흡 내장산은 기상이변 발생 때 예·경보시설도 없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국립공원 대피소의 취사장과 화장실 등에 파괴설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장산지구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 때 탐방객들에게 위험을 알릴 예·경보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

공원 대피소 및 부대시설 파괴설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8개 대피소 중 대피소 1곳과 취사장 1곳, 화장실 5곳에 파괴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대피소 중 파괴설비가 되지 않은 곳은 지리산남부의 피아골이며, 취사장은 세석 대피소다. 또 화장실은 장터목·세석·로타리·연하천·피아골 등이다.

이 의원은 "국립공원은 벼락 발생 때 주변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대피소에 파괴설비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탐방객 안전을 위해 파괴설비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장산 지구에는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은 '국립공원 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4개 국립공원 중 내장산지구에는 경보시설이 없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지구온난화 등 기

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이후 재난 예·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2018년까지 노후된 장비에 대해 80%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12곳의 국립공원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박영민기자 youngmin@

" 사회적기업 컨설팅 100억 투여, 효과 무색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해마다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단위 : 백만원, 개소, %)

연도	경영컨설팅 비용	영업이익		영업손실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1	1,228	89	14.1	542	85.9
2012	2,830	124	16.7	620	83.3
2013	3,078	해당연도 사회적 기업 평가분석은 다음해 하반기에 완료			
2014	2,584				
합계	9,721				

[자료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및 경영컨설팅 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에 97억 2천만원을 지출한 반면, 사회적기업 80%이상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경영컨설팅 비용은 2011년 12억2천800만원, 2012년 28억3천만원, 2013년 30억7천800만원, 2014년 25억8천400만원으로 지난 4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쓰였다. 반면 영업손실을 입은 사회적기업은 2011년 542개소에서 2012년 620개소로 늘었다.

이 의원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컨설팅 지원이 영업이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률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국내 30대 민간기업 대다수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율 기준(2.5%)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용대신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상황이어서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개 기업 중 29개 업체는 연중 의무고용율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5개 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충족시켰다.

고용율 준수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이었다

반면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LG와 SK도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무 고용율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며 "의무 이행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관행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의존이 국가기능장 시험 비리 원인”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정비기능장 시험 부정 사건과 관련해 그 원인이 일부 개인의 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사이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장소 중 한국폴리텍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6.7%로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4년간 기능장 시험감독자의 소속을 분석한 결과, 폴리텍대학 소속이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진의 소속 분포를 보면 ‘PM(Product Manager)’의 경우 전체 267명중 68.9%에 해당하는 184명이 폴리텍 소속이었고 ‘교육훈련전문가1’에 해당하는 개발진 276명중 폴리텍 소속은 152명으로 55.1%를 차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폴리텍대학에 많은 사업을 위임하는 현상이 결국 이번 기능장 시험 비리까지 만들어낸 원인”이라며 “과도한 의존은 공단 사업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폴리텍도 수업 이외의 각종 사업에 과도하게 참여하게 되면 본연의 교육 훈련이 부실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천400억 써

산재미가입 사업장 21만곳 중 10인 이하가 96% 차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천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천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천곳, 2012년 7만8천곳, 2013년 2만2천곳, 올해 1~7월 2만2천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천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 공단이 사후에 알게 된 경우만 공식 통계에 잡히므로 실제 미가입 사업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4년간 보험금 2천여억 원 지급



▲ MBC 방송 캡처

[정오뉴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지급된 산재 보험금이 4년간 2천4백억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약 2천4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21만 곳에 이르지만, 정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업체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시험 비리' 수사중 합격자 발표 강행... '공단 꼼수' 질타



[앵커]

JTBC는 국가 최고 기술인을 뽑는 기능장 시험의 부정 비리를 연속 고발해 왔습니다. 오늘(21일) 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격자 발표를 강행한 인력공단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기자]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기능장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합격자 발표를 강행한 공단의 처리 방식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 합격자 발표를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장관님께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기능장 합격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공단 측은 60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는 법령을 따랐다는 해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공단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기능장 시험의 명예를 깎아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범 이사장/한국산업인력공단 : 그 점은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합격자 가운데 부정행위 연루자는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신문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019면 정책

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산재보상 4년간 2400억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 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000곳, 2012년 7만8000곳, 2013년 2만2000곳, 올해 1~7월 2만2000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000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문화일보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010면 사회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재해 보험료 근로복지공, 4년간 지출 2300억 육박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해야

■ 가입이 의무화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지난 4년 동안 지출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가 2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

지공단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지급한 재해 보험료는 2011년 832억 원, 2012년 761억 원, 2013년 637억 원, 2014년(7월 기준) 1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2011년 3만8162곳, 2012년 7만7836곳, 2013년 2만1997곳인 것

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만1586곳이나 됐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황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이 사후에 알게 된 경우만을 집계한 자료라는 점에서 실제 미가입 사업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6%에 달해 영세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이 깨닫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문화일보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011면 사회

쓰레기 봉투값 지역별 '제각각' 부산 기장 - 전남 곡성 4.7배차

<10L 430원> <10L 90원>

부산에 이어 광주·대전順

■ 전국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지역에 따라 4~5배가량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광역시·도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10L짜리를 기준으로 부산이 412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북과 경북이 154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L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0원 이상인 지역은 부산 외에 광주(380원), 대전(330원), 울산(288원), 인천(289원), 경기(245원), 경남(227원) 등이었고, 200원 이하는 서울(187원), 제주(180원), 충남(176원), 세종(170원), 충북(161원), 전남(156원) 등이었다.

특히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전국 구·군 단위로 좁혀서 살펴보면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모든 구가 43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전남 곡성군과 전북 고흥군이 90원으로 가장 낮아 4.7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경북 봉화군과 경북 영양군도 각각 120원과 100원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배에 가까운 종량제 봉투 가격 차이는 서민 생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만약 부산 중구와 전남 곡성군의 가정집에서 한 달에 10장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다면 각각 4300원, 900원으로 한 달에 3400원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1년치로 계산한다면 각각 5만 1600원, 1만800원이 돼 부산의 가정은 종량제 봉투 값으로만 4만800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

내일신문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019면 정책

제주도내 청소년수련원 5곳중 4곳 안전에 문제

“여가부, 관리강화해야”

제주도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5곳 중 4곳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5개 중 4개의 수련원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받았다.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원 시설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사후 철저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강조했다.

여가부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내년 4월에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안전 전담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 '빛공해로부터 건강 지키기' 雨中캠페인(연합뉴스 자료사진)

2000~2013년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

(세종=연합뉴스) 국기현 기자 =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Light Pollution)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빛 공해는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지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 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8천 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1천30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엔 1천97건, 2012~2013년엔 6천 326건으로 치솟았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 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서울이 3천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천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 순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빛 공해 싫어요”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

[헤럴드경제=하남현·배두현 기자]“빛이 싫어요, 24시간 내내 너무 밝으면 정말 싫어요”

보통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만, 24시간 내내 밝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른바 빛 공해(Light Pollution)다. 빛 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광고물, 시골 가로등 등이 빛 공해 주범이다.

빛 공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낮과 밤을 혼동시키면서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 공해 경계음은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8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5년새 빛 공해가 목격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늘다가 2010년 13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1년(1097건), 2012~2013년(6326건)에는 경총 뛰었다.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서울이 3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주목되는 것은 빛 공해로 인한 민원 이유다. 민원인들은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자원순환연대(이사장 김재욱)가 경희대학교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에 의뢰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중구 시청역 부근·마포구 신촌역 부근·서초구 강남역 부근·강남구 압구정 로테오거리 인공조명 193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84개(44%)가 빛 공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 상가가 밀집한 신촌전철역 일대는 조사한 14개 광고물 중 10개(71.4%)가 기준치를 초과,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빛공해’ 남의 일 아니다

“빛이 싫어요, 24시간 내내 너무 밝으면 정말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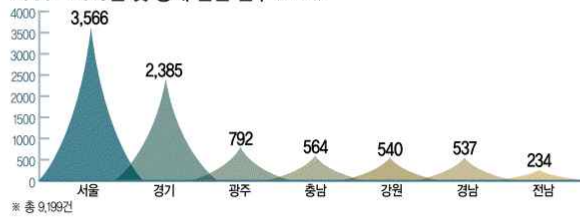
보통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지만, 24시간 내내 밝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른바 빛 공해(Light Pollution)다. 빛 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의 휘황찬란한 불빛과 광고물, 시골 가로등 등이 빛 공해 주범이다.

빛 공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낮과 밤을 혼동시키면서 농식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 공해 경계음은 우리 사회에 여전하다.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8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5년새 빛 공해가 목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건수 (단위:건)



광고물 등 지나친 인공조명

낮과 밤 혼동 생태계 교란

수면장애·암 발병률 높여

5년새 민원사례 급증



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늘다가 2010년 13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11년(1097건), 2012~2013년(6326건)에는 경종 뛰었다.

빛 공해 민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199건 중 서울이 3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주목되는 것은 빛 공해로 인한 민원 이유다. 민원인들은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증감 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자원순환연대(이사장 김재욱)가 경희대학교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에 의뢰해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중구 시청역 부근·마포구 신촌역 부근·서초구 강남역 부근·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인공조명 193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달하는 84개(44%)가 빛 공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 상가가 밀집한 신촌전철역 일대는 조사한 14개 광고물 중 10개(71.4%)가 기준치를 초과,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남현·배두현 기자/airinsa@

“쓰레기봉투 값 가장 비싼곳 '부산'...지역별 최대 4.7배 차이”

지방자치단체별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대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리터(L) 기준 쓰레기봉투 가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강서구·기장군 제외)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의 모든 구의 10L 쓰레기봉투 가격은 430원이었다.

부산 다음 쓰레기봉투 평균 가격이 높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380원), 대전광역시(330원), 인천광역시(289원), 울산광역시(288원), 경기도(245원), 경상남도(227원), 대구광역시(220원), 서울특별시(187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 곡성군과 고흥군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9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자스민 의원은 "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같은 양의 쓰레기라도 지자체별로 처리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주요 원인이다.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용역과정이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봉투 지자체별 가격차 최고 6배, 가장 비싼 곳은?

전국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 영도구로 L당 46.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곡성군에서는 L당 7.8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가 6배에 이른다.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광역 지자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L당 평균 가격을 파악한 결과, 부산이 40.2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36.6원), 대전(33원), 경기(29.8원), 인천(28.6원), 울산(28.3원), 전남(26원), 제주(24.5원), 경남(22.6원), 충남(21.2원), 대구(21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0L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은 대부분 지역에서 400원 이상에 판매되며 서울의 평균 가격은 187원으로 부산의 반값에도 못 미쳤다. 전남의 경우 10L 평균가격은 156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용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은 L당 13.9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15원), 강원(16.4원), 세종(17.6원) 등의 봉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L 가격으로 보면 전남 곡성·고흥은 90원, 전북 진안과 경북 영양은 100원에 그쳤다.

이자스민 의원은 “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이처럼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쓰레기 처리 용역 과정을 점검해 가격 인하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비싼 땅값과 환경 부담 때문에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서울은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그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는데 앞으로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과 용역 대행 방식에 따른 봉투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자체 고유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014면 사회

쓰레기 봉투 가격 지역별 최대 6배 차

부산 영도구 10ℓ 당 46.3원·전남 곡성군 7.8원

전국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 영도구로 10ℓ 당 46.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곡성군에서는 10ℓ 당 7.8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가 6배에 이른다.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의원(새누리당)은 광역자치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10ℓ 당 평균 가격을 파악한 결과, 부산이 40.2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36.6원), 대전(33원), 경기(29.8원), 인천(28.6원), 울산(28.3원), 전남(26원), 제주(24.5원), 경남(22.6원), 충남(21.2원), 대구(21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0ℓ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은 대부분 지역에서 400원 이상에 판매되며 서울은 187원으로 부산의 반값도 되지 않았다. 전남은 10ℓ 평균가격이 156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

였다. 10ℓ 당 가격은 충북이 13.9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15원), 강원(16.4원), 세종(17.6원) 등의 봉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ℓ 가격으로 보면 전남 곡성·고흥은 90원, 전북 진안과 경북 영양은 100원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쓰레기 처리 용역 과정을 점검해 가격 인하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비싼 땅값과 환경 부담 때문에 매립장과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서울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그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는데 앞으로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철웅 기자 hero@kyunghyang.com

'의무가입' 아닌 외국인근로자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590억 납부

이자스민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홍보 강화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5년간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5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은 근로자수는 16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방법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35만2560명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납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590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100명 중 96명이 60세 미만이고, 체류기간도 짧아 최근 5년 동안 보험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16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D-3(산업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외국인근로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9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사업주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가능성이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건강보험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제도에 대해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시 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럭까지 동원... ‘쓰레기 불법처리’ 2년새 4배

3년간 전국 불법 투기·처리 쓰레기 (단위: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현황	6434	1만7632	2만6556
공공장소 투기 쓰레기수거량	4만6221	4만8253	4만9462

무단 소각·매립 등 ‘기승’ 연평균 1만t씩 늘어난 셈

매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으로 소각·매각되는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천안 서북구청은 천안시 서북구 공단 내 길거리에서 스티로폼 등 폐기물을 1t 트럭에 가득 실어와 버리는 고물상 운영자 조모(53) 씨를 적발했다. 조 씨는 스티로폼 등이 돈이 되지 않자 이날 늦은 오후 해가 지길 기다렸다 길거리에 스티로폼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많아져 환경파괴는 물론 처리 등으로 각종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사·도별 쓰레기 불법처리(무단소각·매립 등)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불법처리된 쓰레기는 2011년 6434t에서 2012년 1만7632t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2만6556t으로 증가해 2년 사이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경기도가 1만9084t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758t, 충북이 119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과 공원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장소에 투기된 쓰레기수거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만6221t, 2012년 4만8253t에서 2013년 4만9462t으로 증가해 2년 새 약 3000t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충남이 1만1892t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140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 등이 많은 부산과 강원도 각각 5339t, 4605t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으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012면 사회

트럭까지 동원... '쓰레기 불법처리' 2년새 4배

무단 소각·매립 등 '기승'
 연평균 1만t씩 늘어난 셈
 경기도가 1만9084t로 최고

3년간 전국 불법 투기·처리 쓰레기 (단위: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폐기물 불법처리	6434	1만7632	2만6556
적발 현황			
공공장소 투기	4만6221	4만8253	4만9462
쓰레기수거량			

■ 매년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으로 소각·매각되는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천안 서북구청은 천안시 서북구 공단 내 길거리에서 스티

로폼 등 폐기물을 1t 트럭에 가득 싣어 버리는 고물상 운영자 조도(53) 씨를 적발했다. 조 씨는 스티로폼 등이 돈이 되지 않자 이날 늦은 오후 해가 지길 기다렸다 길거리에 스티로폼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많아져 환경과 폐는 물론 처리 등으로 각종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쓰레기 불법처리(무단소각·매립 등)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불법처리된 쓰레기는 2011년 6434t에서 2012년 1만7632t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2만6556t으로 증가해 2년 사이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경기도가 1만9084t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758t, 충북이 119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과 공원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장소에 투기된 쓰레기수거량'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만6221t, 2012년 4만8253t에서 2013년 4만9462t으로 증가해 2년 새

약 3000t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충남이 1만1892t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1404t으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 등이 많은 부산과 강원도 각각 5339t, 4605t으로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처리비용으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기자 bigpaper@munhwa.com



국회의원 이자스민

발행일 2014년 10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09호

Tel:02-784-6831 Fax:02-788-0314